

한국 사회

2023년 제24집 2호

일반논문

- 종류별 사회자본의 고학력 성별 격차
| 조예음 · 강정한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hange of the indicators of quality of life in digital society
| Myoung-Jin Lee
- 최재석 농촌사회학의 전통과 확장
| 김철규
- 박근혜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혁에 관한 연구: 정당과 거부권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 김원섭
- 코로나19와 가치 변화: '안전'을 중심으로
| 임준경 · 김상학

한국사회는 고려대학교 부설 한국사회연구소가 발행하는 사회과학 분야 전문학술지로
서 연2회 발간된다. 한국사회연구소는 급변하는 현대 한국사회와 국제지역사회의 제
반 현상을 거시적·미시적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현대사회구조와 변동에 대한 설명
과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각종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1996년 8월 22일 설립되었다.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우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Tel: 02) 3290-1651 / Fax: 02) 924-4365

E-mail: lab050@korea.ac.kr

Homepage: <https://socialresearch.korea.ac.kr/>

한국사회 투고: socialresearchku@gmail.com

2023년도 한국사회연구소 임원

소장

김원섭(고려대 사회학과)

부소장

송효중(고려대 사회학과)

센터장

사회트렌드 센터장: 임인숙(고려대 사회학과)

지역사회개발교육 센터장: 김수한(고려대 사회학과)

데이터분석 센터장: 김선엽(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자문위원

노익상(한국리서치)

염재호(고려대)

장하성(고려대)

(이상 가나다순)

운영위원

김수한 김진영 김철규 김형찬 마동훈 박길성 신은경 신현석

윤인진 이명진 임인숙 정일준 조대엽

(이상 가나다순)

한국 사회

2023년 제24집 2호

차례

〈일반논문〉

- 종류별 사회자본의 고학력 성별 격차 3
| 조예음 · 강정한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hange of the indicators of quality of life in digital society 33
| Myoung-Jin Lee
- 최재석 농촌사회학의 전통과 확장 57
| 김철규
- 박근혜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혁에 관한 연구: 정당과 거부권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87
| 김원섭
- 코로나19와 가치 변화: '안전'을 중심으로 123
| 임준경 · 김상학

- 한국사회 연구윤리규정 157
- 원고제출 및 작성 요강 163

종류별 사회자본의 고학력 성별 격차*

조 예 음** · 강 정 한***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사회자본 성별 격차에 관한 연구가 주로 상당한 인적자본을 축적한 집단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착안하여 성별에 따른 사회자본 격차가 고학력에서 심해지지 않는지, 심해진다면 어떠한 종류의 사회자본에서 해당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여러 종류의 사회자본이 포괄적으로 조사된 2012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 이용하여 고학력 성별 격차가 나타나는 사회자본은 어떤 종류인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문직종과의 연결망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사회자본 성별격차가 고학력에서 주로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한국에서 여성의 학력성취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 예상해볼 때, 대졸 이상 학력에서 유형별 사회자본의 성별 격차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사회자본, 네트워크, 성별 격차, 고학력 여성

I. 들어가는 말

사회자본 연구가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회자본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Rostila, 2011), 더 정확하게는 연구 분야와 목적에 따라 사회자본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점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영학에서는 사회자본을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금을 가져다주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바라보기도 하고(Yli-Renko·Autio·Sapienza, 2001; Shane·Stuart, 2002), 보건학에서는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3A2A02090597).

** 제1저자,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ohyeahmm39@gmail.com

*** 공동저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jhk55@yonsei.ac.kr

사회자본이 건강 상태나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며(Kawachi·Kennedy·Lochner·Prothrow-Stith, 1997; Berkman, 2000), 사회학에서는 직업적 지위 취득 및 축적에 사회자본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기도 한다(Granovetter, 1973; Lin·Ensel·Vaughn, 1981). 이외에도 사회자본을 연구하는 분야는 다양하고, 각 분야 내에서도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사회자본에 집중한다.

이처럼 사회자본의 정의가 연구 분야마다 달라지는 것은 사회자본이 그 자체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공통된 결과변수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사회자본은 연구분야마다 다른 주요 결과변수에 기능적 효과를 불러오는 그 무엇이자, 사회적 관계에서 파생되는 독립변수로서 정의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자본은 단일한 정의로 수렴되기 어려우며 측정 방법을 표준화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Van der Gaag·Snijders, 2004).

한편 사회자본 형성에 있어 성별에 따른 격차가 존재함은 여러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지만(Brass, 1985; Ibarra, 1997), 위와 같은 사회자본의 특성 때문에 다양한 사회자본을 함께 분석하여 이들 간의 상이한 성별 격차를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사회자본의 성별 격차를 들여다본 국내 연구들은 존재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고학력자나 관리직과 같이 고도로 인적자원을 축적한 집단에 한정하여 분석하고 있다(박기남, 2002; 안재희, 2006; 김수한·안리라, 2018). 이는 사회자본 형성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해당 집단에서 주로 나타나거나 이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함의를 가지지만, 동시에 더욱 다양한 인적자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대한 사회자본 성별 격차 연구는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자본의 분류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한 후, 고학력 집단에 집중된 사회자본 성별 격차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여러 사회자본 중에서도 어떤 종류에서 나타나는지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사회자본의 종류와 성별에 따른 격차

1. 응집-집합적 사회자본과 네트워크-개인적 사회자본

무어와 카와치(Moore·Kawachi, 2017)는 사회자본을 바라보는 시각에 크게 응집 접근(cohesion approach)과 네트워크 접근(network approach)이 있다고 정리한다. 응집 접근은 사회자본의 인지적, 구조적 측면을 강조하며, 사회 구성원의 타인에 대한 신뢰, 사회적 통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시민적/사회적 모임의 참여 정도에 관심을 가진다. 이와 달리 네트워크 접근은 사회자본 측정을 위해 사회 연결망 분석을 사용하며, 주 관심사는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이다. 카와치는 버크만과의 다른 연구에서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과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집합적이고, 사회적이며, 생태계적이라는 점에서 개인 수준에서 측정하는 네트워크(network)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Kawachi·Berkman, 2000).

이와 비슷한 사회자본의 구분으로 집합적(collective) 사회자본과 개인적(individual) 사회자본으로의 구분이 있다. 로스틸라(Rostila, 2011)는 사회자본의 집합적인 측면과 개인적 측면을 소개하며, 집합적 측면에 집중한 학자는 카와치와 버크만, 퍼트남(Putnam), 후쿠야마(Fukuyama) 등이 있으며 개인적 측면에 집중한 학자는 부르디외(Bourdieu), 콜먼(Coleman), 린(Lin) 등이 있다고 정리한다. 개인적 측면을 강조한 학자들은 해당 사회자본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얻지 못했을 목표, 보상, 혜택을 얻어낼 수 있게 해주는 사회자본의 특성에 집중한다. 이들은 돈과 같은 전통적인 자원에 가까운 종류로 사회자본을 바라본다. 반면 집합적 측면에 집중한 학자들은 사회자본이란 개인 단위에서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시각을 보여준다. 이들은 다른 자원들과 달리 사회자본은 항상 관계의 '구조'에 내재한 것이기에, '개인적 사회자본(individual social capital)'이라는 말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mis-leading)고 주장한다.

다만 이러한 구분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Moore·Kawachi, 2017)

때로 그 구분은 모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정치 모임에 참여하는 것에서 정치적·집합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과 관련한 사회자본의 집합적 측면을 포착할 수도 있지만, 모임 내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자원과 기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개인적인 측면 역시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두 접근법은 때로 관심을 갖는 관계는 같아도 던지는 질문의 방향이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똑같이 이웃과의 관계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응집-집합적 접근은 ‘당신은 이웃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를 묻는 반면, 네트워크-개인적 접근은 ‘당신이 필요할 시 부탁할 수 있는 이웃이 몇이나 되는가?’를 묻는다.

본 연구에서는 후술할 목적으로 개인의 사회자본이 그가 가진 인적자본과 맺는 관계를 살펴보고, 개인 단위의 보유량을 성별에 따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사회자본을 측정하고자 하며, 사회자본이 개인 차원에서 가져다주는 자원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개인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본 연구는 개인의 공적 모임의 참여나 이웃과의 연결에도 관심을 갖는데, 이는 이러한 참여와 연결이 응집-집합적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네트워크-개인적 측면 역시 가지고 있어, 본 연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사회자본의 종류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2. 네트워크-개인적 사회자본의 종류

선행 연구들은 개인이 보유한 사회자본이 소유자에게 어떠한 이득을 가져다주는지 밝히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사회자본에 집중해왔다. 우선 그라노베터(Granovetter)는 가족 및 친족과의 연결과 그 외 친구 및 지인과의 연결을 비교하여 각각이 개인의 구직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Granovetter, 1973). 그는 가족 및 친족과의 강한 연결(strong ties)보다 그 외 지인들과의 약한 연결(weak ties)이 구직 과정에서 개인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며 약한 연결의 힘(the strength of weak ties)을 강조

하였다. 이후 진행된 연구 중에는 그라노베터의 주장을 뒷받침한 연구도 존재하며(Lin·Dumin, 1986; 원지영, 2010), 이를 반박하며 약한 연결보다는 강한 연결이 구직 과정에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연구 역시 존재한다(Murray·Rankin·Magill, 1981; 이경상, 2001; 김성락·김재훈, 2014). 그라노베터의 주장을 반박하는 일부 연구들은 그의 약한 연결 가설(weak ties hypothesis)이 모든 사회에 일반화될 수 없으며 성별이나 교육 수준, 직종 등에 따라 연결망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성락·김재훈, 2014). 즉, 가족 및 친족, 그리고 그 외 친구 및 지인과의 사회자본이 개인의 구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과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웃 사회자본은 주로 응집-집합적 관점으로 지역 사회의 신뢰와 이웃 간 집합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을 살펴본 사회자본 연구들에서 다루어져 왔다(Sampson·Raudenbush·Earls, 1997; Lochner·Kawachi·Brennan·Buka, 2003; Hipp·Wo, 2015). 개인적 측면에서 이웃과의 연결을 분석한 연구로는 린과 동료들이 개인의 구직과정에서 약한 연결과 강한 연결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이웃과의 연결을 강한 연결에 포함시켜 분석한 것이 있다(Lin et al, 1981). 이웃 사회자본은 개인에게 정보나 도움을 제공하며 다양한 이익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현대 한국의 관점에서 이웃과의 연결을 강한 연결로 간주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보다는 이웃 사회자본을 독립시켜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이 될 것이다.

린과 동료들은 접촉하는 상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인의 구직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했다. 이들은 개인이 구직 활동을 할 때 더 높은 위세를 가진 이와 연결망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위세 원칙(prestige principle)을 강조하며 높은 지위를 가진 이와 연결이 구직자가 더 높은 위세의 직업을 얻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Lin et al, 1981). 이후 마스덴(Marsden)과 헐버트(Hurlbert)는 린과 동료들의 연구를 재현하며 개인이 접촉하는 대상의 지위가 해당 연결망을 보유한 개인이 높은 지위를 획득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다시금 확인하였다(Marsden·Hurlbert,

1988). 싱가포르를 배경으로 진행한 비안(Bian)과 앙(Ang)의 연구 역시 구직을 위해 접촉한 연결망의 지위가 구직자가 획득한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Bian·Ang, 1997).

본 연구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듯 사회자본의 성별 격차와 그에 따른 개인의 자원과 기회의 격차에 관심을 가진다. 앞선 연구들에서 종류별 사회자본의 효과가 맥락에 따라 상이하였고(가족 및 친족 사회자본과 친구 및 지인 사회자본), 선행 연구에 의해 개인적 관점에서 충분히 분석되지 않은 사회자본도 있으며(이웃 사회자본), 그 중요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입증된 종류의 사회자본도 존재함(특정 지위를 가진 이와의 사회자본)을 고려한다면 이처럼 다양한 사회자본을 하나의 사회자본으로 묶어서 측정 및 분석하기보다는 각각을 독립적으로 측정 및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주목한 사회자본들을 종류별로 각각 분석에 포함하려 한다. 이를 통해 개인 수준에서 사회자본의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면, ‘어떤’ 사회자본에서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사회자본의 고학력 성별 격차

성별에 따른 사회자본 격차에 관한 국내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대학을 통해 형성되는 제도적 사회자본을 더 많이 획득하는 경향이 있다(안재희, 2006). 구체적으로는 취업선배와의 관계, 교수와의 관계, 학생회나 동문회 등 자치 활동 참여, 취업지원 중심의 학교조직과의 관계 등에서 남성이 더 많은 사회자본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자본의 효과를 얻는 면에 있어서 대졸 여성이 대졸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취업 후 조직 내에서 역시 사회자본의 성별 격차는 다양하게 관찰되어왔다. 관리직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수한과 안리라의 연구(2018)에 따르면 여성은 직장과 가족으로부터 동시에 요구되는 시간 규범의 충돌을 경험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많은 시간제약을 경험한다. 해당 연구는 이러한 시간 제약이 여성

의 사회자본 형성 및 유지를 방해하며,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커리어를 효과적으로 쌓아나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자본이 중요한 관리직의 특수성에 집중한 또 다른 연구는 남성관리자에 비해 여성관리자가 사회자본을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 안에서 관리자로서 살아남기 위해, 여성들이 전략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덜 요구되는 특정 직무에 스스로를 한정시키기 때문에 성차별적 구조가 공고하게 유지된다고 주장한다(박기남, 2002). 또한 기업조직 내 연결망을 분석한 연구는 조직 내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현저하게 작은 점이 여성의 사회자본 형성에 큰 제약이 됨을 밝혔다(장덕진·황정미, 2003).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공식 연결망과 비공식 연결망 사이의 중첩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덕진과 황정미는 그 이유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자본을 축적할 기회가 적어서 두 영역의 사회자본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제시한다.

여성의 사회자본 격차에 대한 연구들에서 주목할 점은 이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의 직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직종에서 관찰되는 사회자본 성별 격차는 인적자본을 고도로 축적한 고학력 집단일수록 성별 격차의 크기가 클 수 있다는 중요한 함의를 가지지만, 이러한 함의에 대해 아직 본격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학력 여성이 겪고 있는 사회자본 성별 격차의 존재 여부와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고학력 성별 격차) 사회자본의 성별 격차는 교육수준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는가?

여성의 사회자본 격차를 다양한 사회자본에 대해 비교적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박희봉·이희창의 연구(2006)와 조예지의 연구(2016)를 들 수 있다. 우선 박희봉과 이희창에 따르면 남성이 직장여성과 전업주부보다 학부모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체(친목회, 동창회, 향우회, 봉사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취미활동 등)에 더 많이 참여한다. 이들은 응답자의 주변인을 가족,

직장, 일반사회동료로 나누어 응답자가 가정, 직장, 사회문제에 관해 상의할 때 누구와 더 많이 상의하는지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대화상대의 유형이 다양하지 못하고 가족에 치우쳐져 있었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동성과 대화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예지의 연구(2016)도 비슷한 경향을 발견하였는데, 가족, 친지 이외의 사람들과의 일상적 교제빈도와, 조직이나 공식 모임, 집단토론, 공공 활동의 참여 빈도 모두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 친지를 포함한 지인과의 일상적 접촉빈도는 남녀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사회자본을 포괄적으로 살펴본 다른 연구에서 발견한 점은 성별 격차가 모든 사회자본에서 관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사회자본 중 여성이 정확히 어떤 종류의 사회자본에서 성별 격차를 겪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성별 격차가 종류별 사회자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지는 않는지 살펴보려 한다.

연구문제 2 고학력 성별 격차는 어떤 종류의 사회자본에서 주로 나타나는가?

III. 방법론

1. 자료 및 분석 방법

자료로는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를 활용하였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2003년부터 매해 전국 만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을 묻는 문항을 상세하게 포함하고 있는 2012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학력과 사회자본의 관계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4년제 대학 졸업이 예상되는 만 25세 이상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총 표본 수는 948명이다.¹⁾ 분석 방법으로는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2. 종속변수

선행 연구들은 사회자본을 들여다볼 때 가족 및 친족과의 연결과 그 외 친구 및 지인과의 연결(Granovetter, 1973; Murray et al, 1981; Lin·Dumin, 1986; 이경상, 2001; 원지영, 2010; 김성락·김재훈, 2014), 이웃과의 연결(Lin et al, 1981), 특정 지위를 가진 이와 연결(Lin et al, 1981; Marsden·Hurlbert, 1988; Bian·Ang, 1997) 등을 측정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각종 모임을 통한 연결을 보다 상세히 측정할 수 있도록 KGSS 2012에 포함되어 있는 공적/사적 결사체 참여를 추가하고, 소유자에게 특정 기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자본인 해외 연결망을 추가하여 살펴보려 한다.

가족/친족 연결망은 하루 평균 교류하는 가족 및 친척 수를 묻는 문항을, 지인 연결망은 가족·친척 외 하루평균 교류하는 사람의 수, 지인과의 회식 빈도 등을 묻는 문항을 이용했다.

이웃 연결망의 경우 알고 지내는 이웃의 수나 필요시 부탁할 수 있는 이웃의 수 등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가 아닌 개인 수준에서 보유량을 측정하며, 개인이 보유한 인적자본과의 연관이 높은 사회자본을 측정하고자 하기에 KGSS 2012에 포함되어 있는 “이웃을 귀하는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와 “귀하가 필요할 경우에 부탁(예, 애완동물 맡기기, 택배 받아주기 등)을 할 수 있는 이웃은 몇 명이나 됩니까?”라는 이웃 사회자본 관련 질문 중 후자를 활용하였다.

1) KGSS 2012의 총 표본 수는 1396명이고, 이 중 만 25세 이상 표본은 1251명이다. 여기서 부나 모의 학력에 관해 ‘모르겠다/무응답’이나 ‘서당한학’으로 답한 이 282명을 빼면 969명이며, 그 외 변수들에 대한 결측치를 제외한 최종 표본은 948명이다.

KGSS 2012에서는 지위 생성기(position generator)를 이용해 특정 지위를 가진 이와의 연결을 측정하고 있다. 지위 생성기는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 사람과 관계 맺고 있는 이들의 직업적 지위를 측정한다(Lin et al, 1981). 측정한 연결 대상의 지위가 위계 구조에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할수록 사회자본 보유자에게 자원에 대해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한다(Lin, 2001). 즉, 이러한 측정방식은 직업의 위계에 따라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자원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KGSS에서 묻고 있는 10가지의 다양한 직종과의 연결망 보유 여부를 전문직과 비전문직으로 나누어 각각 활용하였다.

모임 참여의 경우 보다 세부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공적 결사체와 사적 결사체를 나누어 측정하였다. 공적 결사체 참여는 사회조직 혹은 모임참여를 묻는 문항에서 정치 모임, 사회봉사 클럽 등 공공성을 띠는 모임에 관한 답변을 이용하였다. 사적 결사체 참여의 경우 사회조직 혹은 모임참여를 묻는 문항에서 동창회, 여가 모임 등 사적 성격을 띠는 모임에 관한 답변을 활용하였다.

해외 연결망은 해외 거주 친척, 친구 및 지인 유무 등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모든 종속 변수에 대해 원활한 비교를 위하여 0점부터 5점 사이가 되도록 표준화하였다.

〈표 1〉 종속변수

세부 유형	측정 문항	응답 및 변수 조작	
가족/친족 연결망	“귀하는 평일 하루에 보통 몇 명의 가족 혹은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과 전화, 우편, 인터넷, 대면 등의 방식으로 접촉하십니까?” (가족/친족)	8점 척도 ^a	0~5점 으로 표준화
지인 연결망	“친지 이외 세 명 이상의 다른 사람들과 밖에서 얼마나 자주 식사를 하거나 같이 술을 마십니까?” (지인) “그러한 상황에서 귀하는 얼마나 자주 새로운 친구를 만납니까?” (지인) “그렇다면, 평일 하루에 보통 몇 명의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들과 전화, 우편, 인터넷, 대면 등의 방식으로 접촉하십니까?” (지인)	5점 척도 ^b 5점 척도 ^b 8점 척도 ^a : 3개 문항 평균	

세부 유형	측정 문항	응답 및 변수 조작	
이웃 연결망	“귀하와 서로 인사하고 지내는 이웃은 대략 몇 명쯤 됩니까?” “귀하가 필요할 경우에 부탁(예, 애완동물 맡기기, 택배 받아주기 등)을 할 수 있는 이웃은 몇 명이나 됩니까?”	5점 척도 2개 문항 평균 ^d	
전문직종 과의 연결망	“귀하 주변에 다음 직종에 종사하는 친척, 친구, 지인이 있습니까? (‘지인’은 귀하와 서로 대화할 만큼 충분히 잘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 대학교수, 변호사, 간호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중학교 교사, 인사 담당자, 경찰관	“있음”(=1) 7문항 합계	
비전문직 종과의 연결망	“귀하 주변에 다음 직종에 종사하는 친척, 친구, 지인이 있습니까? (‘지인’은 귀하와 서로 대화할 만큼 충분히 잘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 농부, 이/미용사, 안내원	“있음”(=1) 3문항 합계	
공적 결사체 참여	“귀하는 다음 조직이나 공식 모임의 구성원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정치 모임, 주민협회와 반사회, 사회봉사 클럽, 시민 사회 단체/소비자 협동조합	3점 척도 4개 문항 평균 ^e	
사적 결사체 참여	“귀하는 다음 조직이나 공식 모임의 구성원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종교집단, 동창회, 여가 모임	3점 척도 3개 문항 평균 ^e	
해외 연결망	“귀하에게는 외국에 사는 친척이나 친구 혹은 지인이 있습니까?” “지인 가운데 외국 출신의 지인이 있습니까?”	“있음”(=1) 2문항 합계	

- a) 0명(1점), 1-2명(2점), 3-4명(3점), 5-9명(4점), 10-19명(5점), 20-49명(6점), 50-99명(7점), 100명 이상(8점), 모르겠다/무응답 결측 처리
- b) 전혀 안한다/안 만난다(1점), 별로 안한다/안 만난다(2점), 가끔 한다/만난다(3점), 자주 한다/만난다(4점), 매우 자주 한다/만난다(5점), 모르겠다/무응답 결측 처리
- c) 구성원이 아니다(1점), 구성원이다. 그러나 모임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2점), 구성원이다.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3점).
- d) 0명(1점), 1-2명(2점), 3-4명(3점), 5-9명(4점), 10명 이상(6점)”

3. 독립변수

주 독립 변수인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 연수에 따라 선형적으로 사회자본이 증가하기보다는 최종 학력에 따라 단계별로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교, 4년제 대학교, 석사, 박사 총 8가지 단계로 교육수준을 세분화한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탐색적 분석을 진행하였고, 해당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수준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총 세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최종 분석에 반영하였다. 준거 집단은 대졸 이상이며 “서당한학”과 “모르겠다/무응답”은 결측 처리하였다. 성별은 여성이 1, 남성이 0의 값을 갖는 이분변수로 측정하였다.

4. 통제 변수

통제변수로는 나이, 소득, 직업위신점수, 혼인 상태, 자녀의 수, 부모의 교육수준을 포함하였다. 소득은 월평균 가구 총소득을 기준으로 다섯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중간값으로 측정하였다. 앞서 검토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관리직의 경우 사회자본이 그 역할이나 효과 측면에서 특수성을 띠다고 보고 관리직 집단을 분리하여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박기남, 2002; 김수한·안리라, 2018). 이처럼 직업이 사회자본의 축적 및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직업위신점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우선 KGSS 2012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 변수를 활용하여 하우스만(Häusermann)과 스완더(Schwander)의 분류법에 따라 직업을 분류하였다(김상진, 2013). 오쉬(Oesch, 2003)는 노동시장을 직종에 따라 15개 계급으로 구분하여 노동시장을 분석하였고, 키첼트와 램은 (Kitschelt·Rehm, 2005)은 후에 오쉬의 계급체계가 5개의 계급집단(블루칼라, 하위서비스기능, 혼합서비스기능, 사회문화전문직, 자산축적)으로 총화된다고 분석했다. 하우스만과 스완더(Häusermann·Schwander, 2010)는 이 다섯 개의 계급집단에 직업분류코드 ISCO-88에 따라 분류된 직업들을 배치하였다(김상진, 2013). 예를 들어 기업

관리자 및 공학 전문가는 자산축적, 교육 전문가 및 생명과학 준전문가는 사회문화전문직, 사무원은 혼합서비스기능, 판매원 및 웨이터는 하위서비스 기능, 농업업 근로자 및 단순 노무자는 블루칼라 계급집단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직과 다섯 개의 계급집단을 무직 0점, 블루칼라 계급집단 10점, 하위서비스기능 계급집단 20점, 혼합서비스기능 계급집단 30점, 사회문화 전문직 계급집단 40점, 자산축적 계급집단 50점으로 설정하였다.

혼인 상태는 기혼과 동거를 묶어 하나의 더미변수로, 사별, 이혼, 별거를 묶어 또 다른 더미변수로 설정하고 미혼을 준거 집단으로 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자녀의 수가 부모의 사회적 활동을 상당히 제한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녀 유무가 아니라 자녀의 수를 그대로 통제변수로 포함했다. 부모의 교육수준의 경우 부와 모의 최종 학력을 교육 연수로 처리한 후 평균을 내어 포함하였다.

IV. 분석 결과

〈표 2〉는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의 기술 통계와, 남성과 여성 간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에 관해 보여준다. 이 중 종속변수인 여덟 가지 사회자본의 보유 현황을 성별에 따라 나누어 정리한 〈그림 1〉을 보면 지인 연결망, 전문직종과의 연결망, 공적 결사체 참여, 사적 결사체 참여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자본은 이웃 연결망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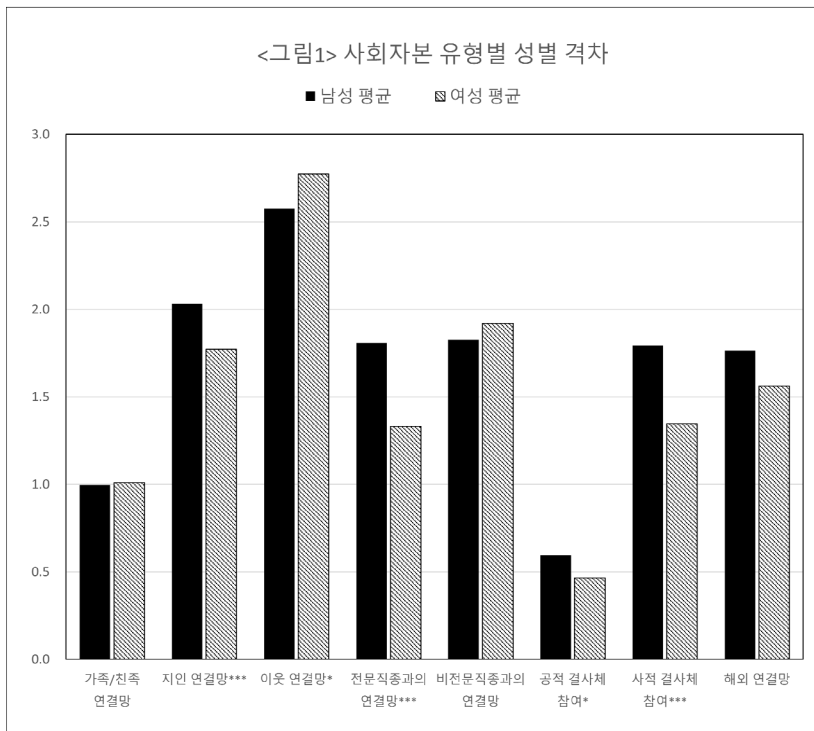
교육수준에서는 대졸 이상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중 여성이 과반을 넘어가며,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약 51세이다. 월평균 가구 총소득의 평균은 약 345만원으로 나타났고,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많으며, 평균 자녀의 수는 2명 정도다. 부모의 교육 수준은 평균적으로 중졸을 넘어가지 않았다.

〈표 2〉 기술통계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남성평균	여성평균	t 검정
가족/친족 연결망	948	1.004	0.679	0.996	1.010	
지인 연결망	804 ²⁾	1.900	0.729	2.032	1.773	***
이웃 연결망	948	2.683	1.458	2.574	2.773	*
전문직종과의 연결망	948	1.546	1.337	1.807	1.331	***
비전문직종과의 연결망	948	1.878	1.417	1.826	1.920	
공적 결사체 참여	948	0.525	0.843	0.596	0.466	*
사적 결사체 참여	948	1.548	1.381	1.793	1.346	***
해외 연결망	948	1.653	1.813	1.764	1.563	
나이	948	51.427	15.503	50.229	52.413	*
소득	948	3.452	2.470	3.589	3.338	
직업위신점수	948	14.968	15.870	17.897	12.558	***
자녀의 수	948	2.117	1.546	1.825	2.358	***
부모 교육수준	948	6.540	4.603	6.911	6.234	*
	전체(948명)		남성(428명)		여성(520명)	
무학~중졸	289		99		190	
고졸	300		128		172	
대졸 이상	359		201		158	
미혼	125		87		38	
기혼/동거	641		296		345	
사별/이혼/별거	182		45		137	

* p<0.05, ** p<0.01, *** p<0.001

- 2) 지인 연결망을 측정하는 데에 포함된 질문 중 “친지 이외 세 명 이상의 다른 사람들과 밖에서 얼마나 자주 식사를 하거나 같이 술을 마십니까?”에서 ‘전혀 안한다’라고 대답한 이들은 후속 질문인 “그러한 상황에서 귀하는 얼마나 자주 새로운 친구를 만납니까?”라는 질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때문에 다른 종속 변수들에 비해 지인 연결망의 표본 수가 적음을 밝힌다.



* p<0.05, ** p<0.01, *** p<0.001

〈그림 1〉 사회자본 유형별 성별 격차

〈표 3-1〉부터 〈표 3-3〉은 총 8가지 종류의 사회자본의 결정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각 종속변수에 대해 첫 번째 모형은 교육 수준 더미, 여성 더미,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추정하고 있고 두 번째 모형은 교육수준 더미들과 여성 변수 간 상호작용항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수준 더미의 준거집단을 대졸이상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교육수준과 여성 더미 간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모형에서 여성 더미의 주효과(main effect)는 대졸이상 집단에서 사회자본의 성별 차이를 나타낸다.

〈표 3-1〉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류별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수준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1)

	가족/친족 연결망		지인 연결망		이웃과의 연결망	
중졸 이하 (vs. 대졸 이상)	0.025 (0.081)	0.038 (0.099)	0.014 (0.089)	-0.076 (0.108)	0.465** (0.165)	0.492* (0.202)
고졸 (vs. 대졸 이상)	0.094 (0.057)	0.132 (0.079)	0.108 (0.061)	0.144 (0.084)	0.312** (0.117)	0.330* (0.162)
여성	0.015 (0.047)	0.046 (0.073)	-0.217*** (0.051)	-0.243** (0.077)	0.033 (0.096)	0.061 (0.149)
여성*중졸 이하 (vs. 대졸 이상)		-0.030 (0.112)		0.183 (0.126)		-0.056 (0.230)
여성*고졸 (vs. 대졸 이상)		-0.072 (0.106)		-0.057 (0.113)		-0.038 (0.217)
나이	0.001 (0.002)	0.001 (0.002)	-0.001 (0.003)	-0.001 (0.003)	0.014** (0.005)	0.014** (0.005)
소득	0.012 (0.011)	0.012 (0.011)	0.037*** (0.012)	0.037** (0.012)	0.026 (0.023)	0.026 (0.023)
직업위신점수	0.001 (0.002)	0.001 (0.002)	0.009*** (0.002)	0.009*** (0.002)	-0.001 (0.003)	-0.001 (0.003)
기혼/동거 (vs. 미혼)	0.163* (0.082)	0.163* (0.082)	-0.309*** (0.088)	-0.290** (0.088)	0.233 (0.167)	0.229 (0.168)
사별/이혼/별거 (vs. 미혼)	0.055 (0.101)	0.055 (0.101)	-0.149 (0.111)	-0.161 (0.111)	0.054 (0.206)	0.055 (0.206)
자녀의 수	0.016 (0.022)	0.016 (0.022)	0.033 (0.026)	0.030 (0.026)	0.105* (0.044)	0.106* (0.044)
부모 교육수준	0.025*** (0.007)	0.025*** (0.007)	0.015* (0.007)	0.015* (0.007)	-0.008 (0.014)	-0.008 (0.014)
상수	0.512*** (0.147)	0.496*** (0.149)	1.799*** (0.163)	1.805*** (0.165)	1.321*** (0.301)	1.309*** (0.306)
N	948	948	804	804	948	948
R2	0.04	0.04	0.138	0.141	0.128	0.128

* p<0.05, ** p<0.01, *** p<0.001

〈표 3-2〉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류별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수준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2)

	전문직종과의 연결망		비전문직종과의 연결망	
중졸 이하 (vs. 대졸 이상)	-0.748*** (0.144)	-0.866*** (0.175)	0.289 (0.170)	0.285 (0.208)
고졸 (vs. 대졸 이상)	-0.345*** (0.102)	-0.394** (0.141)	0.319** (0.120)	0.132 (0.167)
여성	-0.259** (0.083)	-0.363** (0.129)	0.034 (0.098)	-0.086 (0.153)
여성*중졸 이하 (vs. 대졸 이상)		0.236 (0.199)		0.027 (0.236)
여성*고졸 (vs. 대졸 이상)		0.112 (0.188)		0.348 (0.223)
나이	0.018*** (0.004)	0.018*** (0.004)	-0.007 (0.005)	-0.007 (0.005)
소득	0.062** (0.020)	0.062** (0.020)	0.014 (0.024)	0.015 (0.024)
직업위신점수	0.015*** (0.003)	0.015*** (0.003)	0.005 (0.003)	0.005 (0.003)
기혼/동거 (vs. 미혼)	0.026 (0.145)	0.042 (0.146)	0.283 (0.172)	0.269 (0.173)
사별/이혼/별거 (vs. 미혼)	-0.046 (0.179)	-0.051 (0.179)	0.339 (0.212)	0.343 (0.212)
자녀의 수	-0.013 (0.038)	-0.016 (0.039)	-0.009 (0.046)	-0.010 (0.046)
부모 교육수준	0.052*** (0.012)	0.053*** (0.012)	-0.020 (0.014)	-0.022 (0.014)
상수	0.351 (0.261)	0.394 (0.265)	1.800*** (0.310)	1.869*** (0.315)
N	948	948	948	948
R2	0.217	0.218	0.020	0.023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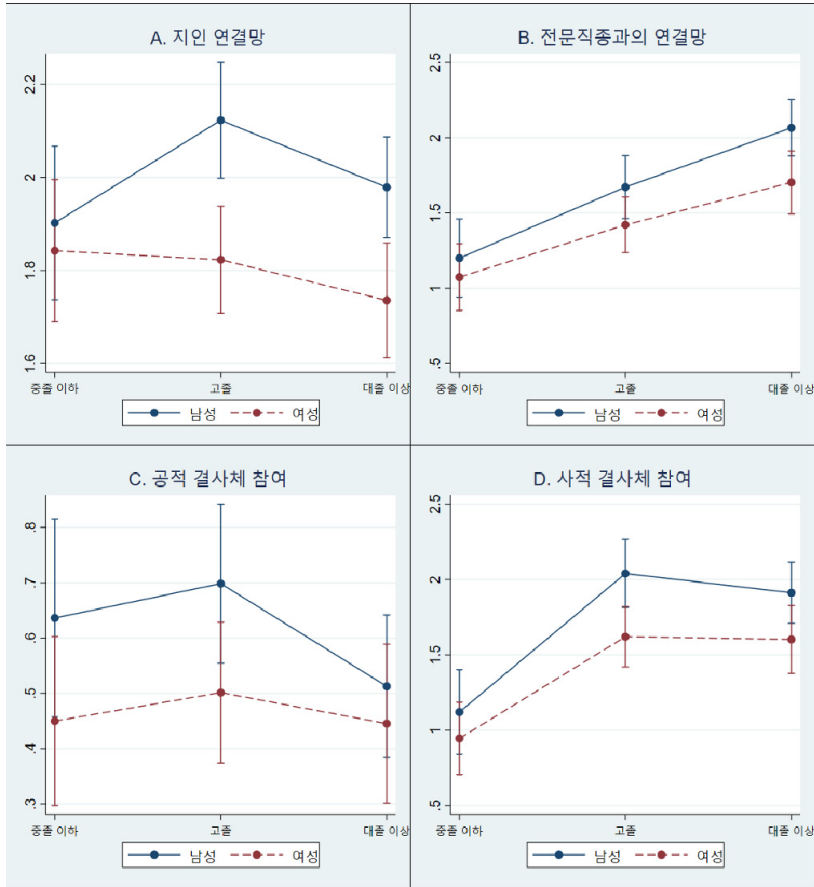
〈표 3-3〉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류별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수준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3)

	공적 결사체 참여		사적 결사체 참여		해외 연결망	
중졸 이하 (vs. 대졸 이상)	0.066 (0.099)	0.124 (0.121)	-0.720*** (0.155)	-0.792*** (0.189)	-1.009*** (0.203)	-1.077*** (0.248)
고졸 (vs. 대졸 이상)	0.122 (0.070)	0.186 (0.097)	0.062 (0.110)	0.128 (0.153)	-0.457** (0.144)	-0.536** (0.200)
여성	-0.143* (0.057)	-0.067 (0.089)	-0.307*** (0.090)	-0.309* (0.140)	0.053 (0.117)	-0.038 (0.183)
여성*중졸 이하 (vs. 대졸 이상)		-0.119 (0.137)		0.135 (0.216)		0.141 (0.282)
여성*고졸 (vs. 대졸 이상)		-0.130 (0.130)		-0.110 (0.204)		0.159 (0.266)
나이	0.009** (0.003)	0.009** (0.003)	0.019*** (0.005)	0.019*** (0.005)	0.024*** (0.006)	0.024*** (0.006)
소득	0.017 (0.014)	0.016 (0.014)	0.093*** (0.022)	0.093*** (0.022)	0.130*** (0.029)	0.130*** (0.029)
직업위신점수	0.005* (0.002)	0.005* (0.002)	0.005 (0.003)	0.005 (0.003)	0.004 (0.004)	0.003 (0.004)
기혼/동거 (vs. 미혼)	0.089 (0.100)	0.084 (0.101)	0.134 (0.157)	0.151 (0.158)	-0.304 (0.205)	-0.298 (0.207)
사별/이혼/별거 (vs. 미혼)	-0.089 (0.123)	-0.088 (0.123)	-0.042 (0.193)	-0.047 (0.194)	-0.192 (0.253)	-0.194 (0.253)
자녀의 수	0.056* (0.027)	0.057* (0.027)	-0.041 (0.042)	-0.043 (0.042)	-0.093 (0.054)	-0.095 (0.055)
부모 교육수준	0.001 (0.008)	0.001 (0.008)	0.010 (0.013)	0.011 (0.013)	0.052** (0.017)	0.052** (0.017)
상수	-0.203 (0.180)	-0.239 (0.183)	0.463 (0.283)	0.454 (0.287)	0.418 (0.370)	0.461 (0.376)
N	948	948	948	948	948	948
R2	0.066	0.067	0.142	0.143	0.149	0.149

* p<0.05, ** p<0.01, *** p<0.001

먼저 종속변수 별 첫번째 모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보유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사회자본은 지인 연결망, 전문직종과의 연결망, 공적 결사체 참여, 사적 결사체 참여이다. 이중 공적 결사체를 제외한 모든 사회자본에서 두번째 모형에서 여성 변수 계수의 절댓값이 첫번째 모형과 비슷하거나 커졌다. 이는 지인 연결망, 전문직종과의 연결망, 사적 결사체 참여에 대해 대졸 이상 집단에서 여성 변수의 부정적인 효과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커짐을 의미한다.

해석을 돕기 위해 이들 종속 변수 네 개를 대상으로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두 번째 모형에 근거해 학력과 성별 효과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모델A와 모델D에서 여성은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지인 연결망과 사적 결사체 참여가 적다. 그러나 대졸 이상 학력에서는 성별 격차가 고졸에 비해 다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모델B를 살펴보자면, 모든 교육수준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전문직종과의 연결망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격차가 특히나 대졸 이상에서 뚜렷해진다. 공적 결사체 참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나타낸 모델C를 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고 고학력 집단에서 그 차이는 좁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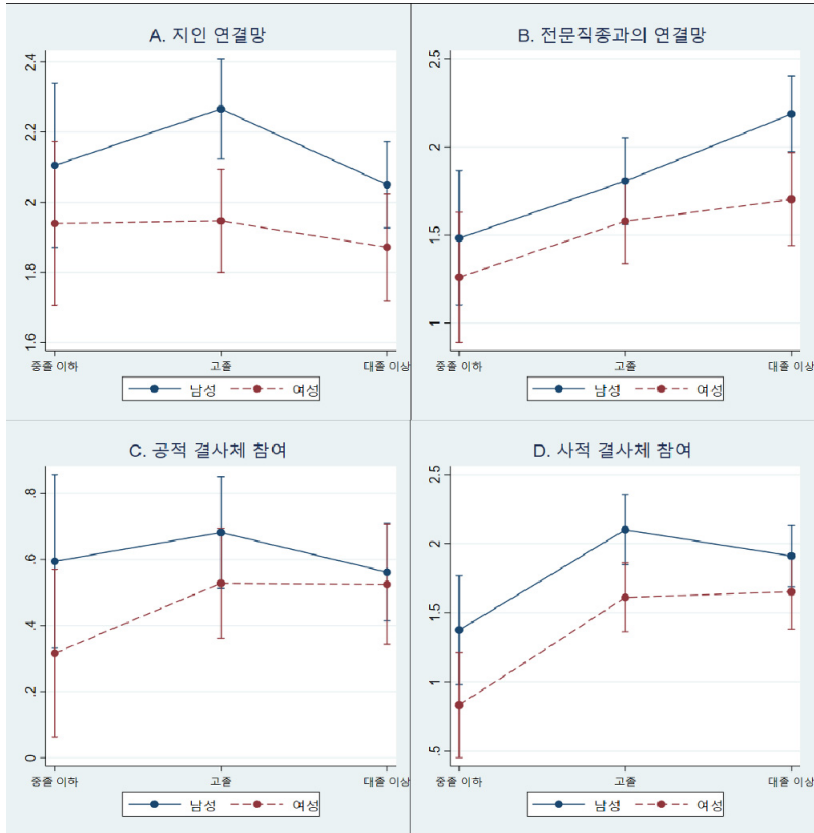
〈그림 2〉 교육수준에 따른 유형별 사회자본 예측값의 성별 격차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자면 <표 3-1>부터 <표 3-3>, 그리고 <그림 2>에서 여성이 더 낮은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회자본은 지인 연결망, 전문직종과의 연결망, 공적 결사체 참여, 사적 결사체 참여이다. 이중 회귀계수에 따르면 공적 결사체 참여를 제외한 모든 사회자본에서 그 격차가 대졸 이상 집단에서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난다. 특히나 전문직종과의 연결망의 경우 <그림 2>를 통해 학력과 성별의 효과를 추정했을 때에도 대졸

이상 집단에서 성별 격차가 벌어진다.

이는 앞서 성별 격차가 발견된 사회자본 중 공적 결사체 참여의 경우에는 여성의 학력성취가 그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지만, 전문직종과의 연결망에서는 여성의 학력성취가 동일 수준 학력 집단 내의 격차를 오히려 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나 첫번째 모형과 두번째 모형 여성 더미의 계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전문직종 연결망에서 가장 뚜렷하게 부정적인 효과가 커진 것은 고학력 집단의 사회자본 성별 격차가 해당 사회자본에서 가장 심각함을 보여준다. 즉, 연구문제 1과 2에 관해, 사회자본 성별격차가 고학력 집단에서 뚜렷이 발견되는 현상이(연구문제1), 전문직종과의 연결망에서(연구문제2) 관찰됨을 알 수 있다.

본 분석에서 응답자의 직업위신점수, 가구 소득, 부모의 교육 수준 등이 통제된 것을 고려하면, 전문직종과의 연결망에서 관찰된 고학력 성별 격차는 고학력 여성의 미취업이나 종사직종 등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함께 분석하여 여성의 미취업으로 인한 사회자본 격차가 포함되어 있을 위험이 있다. 때문에 분석 대상을 취업자로 제한하여 교육과 여성 변수의 효과를 나타낸 <그림 3>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도 전문직종과의 연결망에 대해 고학력 집단에서 성별 격차가 벌어지는 효과는 똑같이 발견되며, 대졸 이상에서 성별 격차는 오히려 <그림 2>에서 보다 더 커진다. 즉, 분석 대상을 취업자로 제한한 경우에도 여러 사회자본 중 전문직종과의 연결망의 고학력 성별 격차가 강하게 나타나고, 이 역시 직업위신점수와 가구소득, 부모 교육수준을 통제했기에 이러한 현상은 본인이 종사하는 직종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그림 3〉 교육수준에 따른 유형별 사회자본 예측값의 성별 격차 _취업자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성별에 따른 사회자본 격차를 어떤 유형에 집중하여 살펴봐야 할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전문직종과의 연결망에서 성별 격차가 대졸 이상의 학력에서 주로 발견된다는 점은, 향후 여성의 학력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가정할 때 이러한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V. 결론

본 연구는 2012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를 이용하여 만25세 이상에 한해 종류별 사회자본에 교육수준과 여성변수가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발견을 얻을 수 있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적은 형태의 사회자본 성별 격차는 지인 연결망, 전문직종과의 연결망, 공적 결사체 참여, 사적 결사체 참여에서 나타났으며, 이중 전문직종과의 연결망에서는 이러한 성별 격차가 대졸 이상의 학력에서 주로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직업 위계에서 상위에 위치하는 직종과의 연결망은 개인의 경력 및 경제적 지위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혀져 있는데(Lin, 2001), 이러한 종류의 사회자본에서 고학력 성별 격차 현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를 고학력 여성이 같은 학력의 남성에 비해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축적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격차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쿼라와 비니컴(Kumra·Vinnicombe, 2010)은 국제적 컨설팅 회사의 여성 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들이 사회자본이 자신의 직업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뚜렷이 파악하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조직에서 영향력 있는 스폰서와의 사회자본을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즉, 고학력 여성들은 직업적 이익을 위해 직업 위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이와 연결망을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 다만 여성들은 성별 고정 관념과 남성중심 기업 문화 때문에 사회자본 형성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뿐이다(Kumra·Vinnicombe, 2010).

이는 고학력 여성들이 연결망을 구축하고 및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얻는 과정에서 같은 학력의 남성과는 다른 현실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함의한다. 본 연구의 발견과 이러한 추론은 사회 경제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서 있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성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연구와 지원 정책으로 이어져 왔으나

(김지경, 2004; 전운정, 2015; 박종서, 2016; 한서영, 2021), 직업적 경력 취득 및 축적 과정에서 성별 불평등은 비혼 여성에게도 뚜렷이 관찰되는 만큼 (박기남, 2011; 김창환·오병돈, 2019) 가정 밖 요인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본고는 교육성취와 연관이 깊은 사회자본에 관심을 갖고 연구했으며, 향후 이러한 사회자본의 형성 과정을 남녀로 구분해 더욱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을 제안한다. 대학(원)생의 사회자본 축적의 기회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는 않는지, 졸업 후 취업 과정에서 여러 요인에 따라 전공-직종 불일치가 여성에게서 더 심하게 발생하여 전문직종과의 연결망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않는지, 고학력 전문직 여성이 남성 중심적 기업 문화 속에서 사회자본 축적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않는지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행위자 수준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런 행위자의 노력을 뒷받침할 제도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정책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위 생성기를 포함한 네트워크-개인적 사회자본을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는 한국의 자료가 드물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2012년도의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사회자본 구축과 그에 따른 자원 획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에 관해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향후 더욱 자세한 자료가 수집, 연구되길 바란다.

2023년 5월 12일 접수
 2023년 12월 15일 수정 완료
 2023년 8월 23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 김상진. 2013. 「노동시장의 분절구조가 사회보험배제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성락·김재훈. 2014. “연결망과 직업관이 일자리 질에 미치는 효과-대졸 신규 입직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15(2): 127-154.
- 김수한·안리라. 2018. “여성관리자의 시간제약과 직장 내 사회자본” 「한국사회학」 52(1): 39-75.
- 김지경. 2004. “젊은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연속성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3): 91-104.
- 김지범·강정한·김석호·김창환·박원호·이윤석·최성수·최슬기·김솔이. 2012.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8」,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창환·오병돈. 2019. “경력단절 이전 여성은 차별받지 않는가?: 대졸 20대 청년층의 졸업 직후 성별 소득격차 분석” 「한국사회학」 53(1): 167-204.
- 박기남. 2002. “관리직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성별 직무 분리” 「한국사회학」 36(6): 109-135.
- 박기남. 2011. “20-30대 비혼 여성의 고용 불안 현실과 선택” 「한국여성학」 27(1): 1-39.
- 박중서. 2016.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2016. 6., 18-36.
- 박희봉·이희창. 2006. “사회자본과 양성평등: 사회자본의 성별 특성과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4): 91-116.
- 안재희. 2006. “대졸 여성의 취업에 대한 제도적 사회자본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6: 85-110.
- 원지영. 2010. “인적 자본과 사회관계망이 청년층의 일자리 유형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0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374-390
- 이경상. 2001. 「취업시장에서의 개인적 연결망의 특성과 직업성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 장덕진·황정미. 2003. “여성의 사회적 자본-기업조직 내 연결망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9: 130-160.
- 전윤정. 2015. “탈상품화·탈가족화 관점에서 본 한국의 일·가족양립정책, 1990~ 2014: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와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1(3): 179-218.
- 조예지. 2016. “취업자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적지위 및 혼인지위를 중심으로” 『사회연구』 17(2): 47-76.
- 한서영. 2021. “상사의 절차적 공정성이 여성관리자의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에 미치는 영향: 남성 및 여성 부하직원 간 관계 및 조직 내 여성비율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여성경제연구』 18(1): 109-135.
- Berkman, L. F. 2000. “Social support, social networks, social cohesion and health.” *Social work in health care* 31(2): 3-14.
- Bian, Y., and Ang, S. 1997. “Guanxi networks and job mobility in China and Singapore” *Social forces* 75(3): 981-1005.
- Brass, D.J. 1985. “Men’s and women’s networks: a study of interaction patterns and influence in an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8(3): 327-43.
-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Hausermann, S. and Schwander, H. 2010. “Varieties of Dualization? Labor Market Segmentation and insider outsider divides across regimes”, Conference paper for ‘The Dualization of European Societies’, Univ. of Oxford.
- Hipp, J. R. and Wo, J. C. 2015. “Collective efficacy and crim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 4(2): 169-173.
- Ibarra, H. 1997. “Paving an alternative route: gender differences in

- managerial network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97(1): 91-102.
- Kawachi, I. and Berkman, L. 2000. “Social cohesion, social capital, and health.” *Social epidemiology* 174(7): 290-319.
- Kawachi, I., Kennedy, B. P., Lochner, K. and Prothrow-Stith, D. 1997. “Social capital, income inequality, and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9): 1491-1498.
- Kitschelt, H. and Rehm, P. 2005. “New Social Risk and Political Preferences”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uropeanists.
- Kumra, S. and Vinnicombe, S. 2010. “Impressing for success: A gendered analysis of a key social capital accumulation strategy.” *Gender, Work & Organization* 17(5): 521-546.
- Lin, N., Ensel, W. M. and Vaughn, J. C. 1981. “Social resources and strength of ties: Structural factors in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3-405.
- Lin, N. and Dumin, M. 1986. “Access to occupations through social ties.”, *Social networks* 8(4): 365-385.
- Lin, 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chner, K. A., Kawachi, I., Brennan, R. T. and Buka, S. L. 2003. “Social capital and neighborhood mortality rates in Chicago” *Social science & medicine* 56(8): 1797-1805.
- Marsden, P. V. and Hurlbert, J. S. 1988. “Social resources and mobility outcom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Social forces* 66(4): 1038-1059.
- Moore, S. and Kawachi, I. 2017. “Twenty years of social capital and health research: a glossary.”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71(5): 513-517.
- Murray, S. O., Rankin, J. H. and Magill, D. W. 1981. “Strong ties and

- job information" *Sociology of Work and Occupations* 8(1): 119-136.
- Oesch, D. 2003. "Labor Market Trends and the Goldthorpe class schema: a conceptual reassessment" *Swiss Journal of Sociology* 29(2): 241-262.
- Rostila, M. 2011. "The facets of social capital."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ur* 41(3): 308-326.
- Shane, S. and Stuart, T. 2002. "Organizational endowments and the performance of university start-ups" *Management science* 48(1): 154-170.
- Sampson, R. J., Raudenbush, S. W. and Earls, F.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5328): 918-924.
- Van der Gaag, M. and Snijders, T. 2004. "Proposals for the measurement of individual social capital." in *Creation and returns of social capital*. London: Routledge.
- Yli-Renko, H., Autio, E. and Sapienza, H. J. 2001. "Social capital, knowledge acquisition, and knowledge exploitation in young technology-based firm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6-7): 587-613.

How much gender gaps in social capital depend on educational achievement

JO, YEEUM
Yonsei University

KANG, JEONG-HAN
Yonsei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if gender gap in social capital varies across levels of human capital and what types of social capital shows the gender gap more than other types. Using the 2012 Korea General Social Survey (KGSS), which comprehensively investigated various types of social capital, this paper analyzed which types of social capital are highly related to human capital, and which types of social capital show the gender gap in high educ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onnections with professional occupations, overseas networks, and participation in private associations increased as the level of education increased. In addition, in connections with professional occupations, it was found that the gender gap in which women had a lower level of social capital than men increased with higher education. Given that women's academic achievement will further increase in Korea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tudy in depth the gender gap in various types of social capital in college graduates and above.

Key Words: social capital, human capital, gender gap, education, highly educated women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hange of the indicators of quality of life in digital society*

Myoung-Jin Lee**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Korea Development Indicators to assess the impact of digital transformation on society, particularly on individuals' quality of life. It focuses on three major trends: the restructuring of sectors in society due to digital transformation, the promotion of emotional culture, and the emergence of a leisure-centric society. The findings suggest that to evaluate quality of life in a digital society, one must consider a wide array of influences, even those that lack sufficient data. The use of self-reported data as provisional indicators becomes essential. Incorporating digital technology-related variables into existing social surveys is vital to comprehend the impact of digital transition effectively. Additionally, developing new tools for measuring these effects is crucial, as current statistical survey methods struggle to handle the vast online data. Exploring alternative data collection methods capable of harnessing this information is essential fo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topic.

Key words: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society, digital technology, Korea Development Indicators, quality of life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faculty research grant from the College of Liberal Arts at Korea University in 2023.

** Department of Sociology, Korea University. leemj@korea.ac.kr

I. Introduction

With the rapid advancement of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in recent times, significant changes are unfolding in industries, economies, and societies. These developments are collectively referred to as ‘digital transformation’ (Gong and Ribiere, 2021; McKinsey, 2023). This transformation has led to the integration of digital and physical elements, giving rise to various new business models and introducing novel changes in industrie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lives. As a result,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society at large are confronting swift changes (Kraus et al., 2021).

The digital transformation is expected to bring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to society. On the positive side, it is anticipated to drive innovation and growth through digital-based industrial innovation and the creation of new industries. However, there are concerns regarding negative aspects such as personal data breaches, security risks, and increased social conflicts.

Various discussions are underway concerning the various facets of the digital society based on the new digital order. These discussions encompass a wide range of areas, including the need to establish discourse on the economic and social principles and ethical standards in the digital era (Hantrais and Lenihan, 2021). Efforts are required to facilitate the digital transformation, promote the convergence of digital economy, and foster a digital culture.

In this context, there is also a need to elevate the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the patterns of societal change resulting from digital transformation. This involves not only analyzing the phenomena brought about by the transition to a digital society but also objectively

observing and measuring the transition process itself.

The impact of rapidly evolving digital technologies on various sectors of society continues to change and expand in diverse ways (McKinsey, 2023).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modify and enhance relevant statistical indicators to align them with technological and societal changes and to develop new statistical indicators to understand and analyze emerging phenomena (OECD, 2019a). However, these tasks are not straightforward, as new technologies and platforms continually emerge in the digital technology landscape, making it challenging to maintain statistical data related to digital transition and societal change up to date and relevant.

Typically, statistical indicators should remain stable over time. However, digital transition and societal statistics tend to lose their significance relatively quickly, requiring regular updates and revisions. Furthermore, as new digital technologies introduce new societal changes, there is a need to continuously update and enhance existing statistical indicators to address the evolving landscape adequately. It is worth noting that digital technology's impact on society is not always straightforward to establish causality, as it often involves complex, invisible interrelationships.

Therefore, there is a pressing need to establish a research framework for creating statistics that can analyze the changes in society resulting from digital transformation. While the impact of digital transformation is expected to influence various aspects of society, this study places a specific focus on the changes in individuals' quality of life (OECD, 2019b; Statistics Canada, 2020). While discussions and measurement efforts related to the macro-level impacts of digital transformation on the economy, industries, and the labor market are relatively active,

efforts to measure the micro-level changes, particularly the changes in individuals' quality of life, remain insufficient (Gluckman and Allen, 2018; OECD, 2019a).

Thus, this study aims to theoretically systematize the impact of digital transformation on individuals' quality of life. It involves an examination of the current status and evaluation of representative Korea Development Indicators in this context. Korea Development Indicators represent a formal indicator system of the government, comprising key indicators for various sectors in Korean society. They are designed to assess the overall development status of the country and set the direction for policy development (Statistics Korea, 2023).

By reviewing Korea Development Indicators with a focus on the mega-trends resulting from digital transformation,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apid societal changes propelled by digital technologies. Furthermore, it seeks to provide insights into the impact of these changes on individuals' lives, facilitating the formulation of policy responses.

II. Reconfiguration of Sectors

This section aims to examine the first major trend of macroscopic change related to the impact of digital transformation on individuals' quality of life.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one of the key characteristics of Western capitalist systems has been the expansion of the public role of the state. The state has extended its reach into areas including security, public safety, democracy, and welfare, thereby mitigating the dismantling tendencies within the “market” and

ensuring the stable development of the capitalist system (Kaufmann, 1991; Weintraub, 1997; Norris, 1999). The expansion of state publicness has also been a prominent feature in the development of latecomer capitalist nations, including South Korea in East Asia. While these nations had distinct structures compared to advanced capitalist states, the expansion of state publicness played a crucial role in their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However, the transformation of authoritarian state publicness following the IMF financial crisis in South Korea has led to a severe crisis of publicness. This crisis is associated with a reduction in the state's capacity to address social issues. Today, the diversification and complexity of social problems resulting from economic development,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extend beyond the diagnostic and problem-solving capabilities of authoritative control systems in developing nations (Kaufmann, 1991; Goldsmith and Eggers, 2004). Simultaneously, not only business entities in the market sector but also civil organizations and engaged citizens have enhanced their diagnostic and problem-solving abilities regarding social issues, challenging the existing state-centered control structures (Carrol, 1991; Wood, 1991; Shaw and Post, 1993; Borzaga and Jacques, 2004).

The core critique lies in the inability of the public sphere to address emerging social problems effectively, thus posing a serious threat to social cohesion (Kaufmann, 1991; Goldsmith and Eggers, 2004). These critiques occur alongside the restructuring of publicness within the changing societal landscape.

These changes in the societal organization and domains are accelerating due to digital transformation. Importantly, the boundaries that traditionally separated the state, market, and civil society are

becoming increasingly blurred. State public sectors, market economic sector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re rapidly evolving into new systems where individual welfare and leisure well-being are no longer confined to the private domain of civil society but are increasingly intertwined with the public and economic sectors. This transformation of social structures can be understood as a process of “reconfiguration of the domains of society” and can be divided into three main aspects:

Firstly, the structure of individual welfare and leisure well-being is becoming more diverse. Notably, the state’s public sector, which previously monopolized publicness closely related to individual welfare, is exhibiting a tendency to diminish authoritative state publicness through privat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Kaufmann, 1991). Consequently, the market and civil society are also undergoing simultaneous transformations. The market can no longer rely solely on pursuing private interests as its sole justification and must internalize the demands of publicness into its activities (Carrol, 1991; Borzaga and Jacques, 2004). Civil society, in addition to its traditional functions of oversight and providing public discourse, is adapting by embracing functional publicness, becoming a subject of monitoring itself (Norris, 1999). This new structure of publicness, shaped by diverse subjects, is characterized by interactivity and interdependence among these subject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coordination and governance.

Secondly, the concrete institutional aspects that ensure publicness are evolving and the boundaries of the public sphere are becoming more flexible. In the past, the public sector in the state-led publicness had clear boundaries betwee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sectors, and the issues covered were mainly limited to public services

and welfare services. Nevertheless, as the functions of publicness shift to the market and civil society, the issues within the public sphere have expanded beyond government-provided public services. The forms of institutionalization in the newly integrated public sphere are ambiguous, with legal status and operational principles that do not clearly distinguish them from the non-public domain (Kaufmann, 1991).

Thirdly, from a performance perspective, the new publicness is characterized by uncertainty. The diagnostic and problem-solving capabilities of the new publicness result from a combination of collaboration among diverse actors and the expansion of flexible sub-domains. Unlike state-led publicness, which relied on bureaucratic autonomy, the flexible organizational relationships of the new publicness are more influenced by the political will of the state, reflective self-regulation of market entities, and the level of organization within civil society (Goldsmith and Eggers, 2004). This political and social vulnerability of the new publicness makes its outcomes less predictable. When considering that the reshaping of publicness leads to a macroscopic societal order transition focusing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tate, market, and civil society, it becomes evident that the structural changes within Korean society and the challenges of social integration cannot be addressed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se aspects of publicness reconfiguration (Park and Kim, 2021).

Historically, the majority of research on individual quality of life has primarily examined the public role of the state or government, or the private role of civil society. However, it is crucial for the concept of 'socially constructed publicness' to accurately reflect the current landscape, where the boundaries and interactions between the state, market, and civil society are expanding. In this evolving reality, the

definitions and implications of quality of life are being redefined through the active and independent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conclusion, the reconfiguration of social constituents poses several implications concerning the development indicators of the state and national quality of life. Firstly, welfare is not prominently featured within Korea Development Indicators or the national well-being framework for citizens' quality of life. While Korea Development Indicators encompass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omponents, South Korea's social indicators include economic and environmental aspects. Furthermore, the well-being indicators for citizens emphasize the improvement of individual quality of life. Despite the importance of welfare, it is not adequately represented as a separate domain. This shortcoming partly results from the characteristics of existing indicator systems, which struggle to incorporate and overlap changing domains effectively.

Secondly, quality of life is somewhat reflected as relatively independent indicators. However, these domains also rely on mechanical and limited frameworks. Leisure is measured in terms of types of leisure activities, experiences, and time spent, while well-being is assessed through subjective satisfaction. Consequently, the impact of the online environment, the uncertainty of the work-leisure boundary, and the blurring of boundaries between state, market, and civil society need to be considered.

Thirdly, the rigid one-dimensional classification of Korea Development Indicators should be reconsidered. Assuming that a single indicator falls neatly into a specific domain is inadequate for reflecting the rapidly changing domains and boundary uncertainties. While the basic structure should be maintained, there is a need for flexibility in

the organization of topics. This can accommodate the overlapping nature of the changing areas more effectively.

Fourthly, the growing importance of welfare and the increasing relevance of state, market, and civil society in this domain must be taken into account. Although it may be challenging to reassign indicators from other sectors to the welfare domain, one approach could involve recognizing overlap and revisiting the secondary reorganization of the welfare sector, especially considering the overlapping nature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boundary uncertainties.

In summary, the reconfiguration of sectors in society due to the mega-trends has several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indicators of individual quality of life. It highlights the need to adapt and be more flexible in representing the dynamic and interconnected nature of modern society.

III. Promotion of the Culture of Emotion

The rapid advancement of digital transformation has led to new desires and shifts in values that challenge traditional theories of modern society. This transformation is propelled by technological progress in digital products, changing consumer preferences, and evolving consumption patterns driven by digital technology (Hwang et al., 2011; Kang et al., 2012).

Understanding these emerging desires and value changes in the digital age is increasingly complex when relying solely on traditional theories of modern society. Instead, to comprehend these shifts, it is imperative to consider elements such as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 digital products, shifts in consumer preferences, and changes in consumption patterns influenced by digital technology(Lee and Bae, 2008). When exploring consumer desires for digital products and services, a pivotal factor is emotional consumption and usage. In the context of modern society, individuals prioritize emotional satisfaction over rational choices, with rationality taking a secondary role during the use of products or services (Featherstone, 1990; Darren and Ian Tucker, 2021).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the “tendency to imitate” in Korean society significantly influences consumer behavior towards digital products. This inclination is closely linked to the collectivist nature of Korean society, where individuals tend to avoid isolation. Additionally, the desire for “differentiated consumption,” which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since the 1990s, is also evident in the consumption of digital products.

Contrary to previous concerns among scholars that consumers would remain passive in the digital society, consumers and users in the digital age have transformed into active participants. This transformation is primarily driven by advancements in digital technology, reshaping consumer behavior.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has empowered consumers to share a wide range of information during the product consumption process, particularly driven by the younger generation, who are more acquainted with digital environments. The modern consumer society is evolving based on digital technology, with the younger generation at its forefront. Therefore, the interplay between digital technology, the younger generation, and consumer society is dynamic and intertwined (Lee and Bae, 2008; Ritzer and Miles, 2018).

So, how is digital transformation influencing changes in emotional experiences? A significant cultural phenomenon stemming from digital technology is the emergence of “emotional culture.” While culture has always encompassed emotional aspects, past modern societies emphasized reason and rationality. However, digital technology enables the pursuit of efficiency while simultaneously highlighting previously suppressed emotional aspects of culture (Darren and Ian Tucker, 2021).

The rise of emotional culture signifies a fundamental societal shift as we transition from modernity to post-modernity. Modernity was characterized by the dominance of reason and rationality, with Western society, in particular, embracing these values since Descartes. During this period, humans were regarded as rational beings who acted logically and established institutions and social cohesion through reason and rationality (Roth, 2019). Under modernity, desires and emotions arising within individuals were considered something to be controlled. This aspect of modernity persisted through the 20th century, forming the basis of the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 Efficiency, derived from reason and rationality, underpinned society and was valued for its utility and practicality (Choi, 2019; Roth, 2019).

However, in the 1960s, Western societies, especially in France, began to criticize the excessive emphasis on reason and rationality. It was argued that this dominance did not lead to transformation but rather stagnation and decline. In modernity, reason and rationality were upheld through written texts, logical systems, interpretive acts, and the use of grammar. This elevated the social status of experts. In contrast, post-modernity places greater emphasis on intuitive perception over texts and concepts. Texts and concepts, in turn, rely on the

power of images for effective communication, making image-based expression the dominant form of communication in contemporary society (Featherstone, 2007).

Digital technology has enabled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images, sounds, and videos, ushering in an era unimaginable without digital technology. Today, we live in a world where images, sounds, and videos produced, distributed, and consumed through digital technology are central, with images playing a pivotal role in shaping videos and controlling sounds (Skurka, and Nabi, 2023). This reflects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ity, giving rise to a society centered around images.

In the past, texts held the highest value, and their interpretation required expertise. In contrast, images were considered lightweight, and image-related work was undervalued. However, in the post-modern era, images have gained significance and drive our reality. We now live in a world inundated with images, from street billboards to television advertisements. The prevalence of digital technology in our daily lives has only accelerated this phenomenon. Even in maintaining social relationships, uploading photos to platforms like Facebook has become essential (Choi, 2019).

Recent digital technologies emphasize intuitive perception over concepts and texts, with texts and concepts becoming more effective when supported by the power of images. The dominance of images as a form of expression is now prevalent. The importance of images extends beyond everyday life, impact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various endeavors. Aesthetics and design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even when functionalities remain similar. In today's fast-paced world, people are initially drawn to aesthetically pleasing

and well-designed devices, emphasizing the significance of effectively 'expressing' what's on the inside externally. In the business world, what's inside is not enough; it must be expressed well to gain recognition. This underscores the characteristics of an emotional and image-based society (Featherstone, 2007).

The rise of emotional culture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 Development Indicators. The existing indicators primarily focus on results and absolute standards, emphasizing policy and economic outcomes of the public sector, especially in industrialized societies. However, in domains such as leisure, well-being, and welfare, emotional and experiential aspects of consumption expose the limitations of such indicators. These areas prioritize both outcomes and the process in which policies and activities are conducted, operating within the context of relative comparisons and procedural fairness.

Korea Development Indicators do not fully reflect these characteristics at present. While well-being is included in quality of life indicators with subjective evaluations, it is challenging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these evaluations encompass the emotional aspect of individuals. Furthermore, the reinforcement of emotional aspects due to digital transformation is based on communication through personal networks, leading to continuous evaluations through comparisons with others who are part of these networks. Without due consideration for aspects of relative comparison and procedural fairness, the indicator might only provide a partial view.

To adapt to changing desires, preferences, and tastes of individuals, it is crucial to consider indicators that reflect the diversity and expansiveness of individual preferences. Expanding indicators related to evaluation and satisfaction in various policies, situations, and

contexts regarding welfare, leisure, and well-being is essential. In summary, the strengthening of emotional culture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 Development Indicators, emphasizing the need to account for the dynamic and evolving nature of contemporary society where emotion and image play essential roles alongside traditional rational and textual aspects.

IV. The Emergence of a Leisure-Centric Society

In an individual's daily life, a range of components, including work, family life, leisure, and education, coexist, and people may emphasize specific aspects or seek a balance. These domains of daily life often reflect broader societal trends that extend beyond individual preferences.

The advancement of digital technology has significantly impacted daily life, particularly in the realm of leisure. The importance of leisure in an individual's daily life has evolved over time, influenced by societal changes. In the past, agrarian societies placed a limited emphasis on leisure, prioritizing family life and collective labor. The transition to industrial societies brought a greater emphasis on work, with leisure being perceived as a privilege of the upper class. As industrial societies developed and accumulated wealth, leisure gained more significance (Kang et al., 2012).

Changes are also observable in the domains of leisure and well-being. In the digital age, shifts in work patterns, evolving values, lifestyle changes, and shifting demographics have led to the blurring of boundaries between work, play, and learning. Unlike in the industrial era, where work and leisure were clearly separated, the widespread

use of digital technology, including remote work and telecommuting, has eroded these boundaries. Additionally, digital advancements have blurred the lines between play and learning (Kang et al., 2012).

This transformation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aspects: the merging of work and play, the blending of learning and play, and the integration of work and learning. In the industrial society, these distinctions were more rigid, characterized by separate work and leisure locations. However, digital technology, along with the shift from repetitive labor to creative work, has disrupted this separation. Similarly, the proliferation of online learning due to digital technology has diminished the distinction between learning and leisure. In the industrial era, work and learning were separated by age, but in a knowledge-based society, individuals are expected to engage in both throughout their lives (Duan, Deng and Wibowo, 2023).

As a result, the boundaries between work and play, learning and play, and work and learning are dissolving, giving rise to an age-integrated model of life stages that encompasses lifelong learning, work, and leisure across different phases of life. This transition reflects the shift from a segmented model of distinct life stages for education, work, and leisure to a more fluid, age-integrated approach (Nam, 2014; Jang et al., 2021).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these shifts rapidly, with leisure's significance in daily life evolving swiftly. Examples include the growth of the film industry, the rise of domestic professional sports, the online gaming boom, and increased international travel. Today, leisure is no longer a peripheral aspect but plays a central role in people's daily lives, with some individuals even working to enhance their leisure experiences (Jang et al., 2021).

Leisure activities that once primarily served labor reproduction are now evolving toward a leisure-centric society, where there is a designated space for labor within leisure activities. Digital technology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this transition, as leisure becomes a central value in the information age. Reduced working hours, increased per capita income, and a wide array of leisure-related products and services have made leisure a fundamental human right. People now focus on satisfying individual desires and securing more opportunities for leisure.

With fewer working hours, individuals have more disposable time due to advancements in digital technology. Mobile devices and smart technology enable remote work and multitasking, allowing people to balance work and leisure. Digital networking and online platforms provide accessibility to a variety of leisure activities, such as the online gaming market and content consumption. Furthermore, individuals can connect with like-minded people through online communities, forming offline leisure groups. The digital transformation has brought substantial changes to the realm of leisure in daily life, shifting society from a “work-centered” to a “leisure-centered” paradigm, where leisure now occupies a central position rather than remaining at the periphery.

The emergence of a leisure-centric society as a mega-trend has several implications for Korea Development Indicators. First, as previously mentioned, Korea Development Indicators do not distinguish welfare as a separate domain. However, when examining indicators related to leisure and well-being, they measure subjective well-being and satisfaction in life as part of subjective well-being. These indicators include leisure time, participation rates in physical activities, cultural

and artistic viewing rates, leisure life satisfaction, and the rate of cultural and leisure spending, all of which are used to measure the level of leisure.

Second,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current indicators in that they predominantly focus on offline activities. The growing importance of online activities due to digital transformation is not adequately reflected. Online elements are significant in their own right but also have extensive hybrid connections with offline activities. There is a need for a measurement system that adequately reflects this.

Third, the concept of an expanded notion of leisure is not fully considered. Leisure is no longer an element that can be viewed as subordinate to work in one's life. It should be considered at a level equal to work. New concepts that reflect a work-life balance need to be incorporated into the indicators.

V. Discussion

In this study, as part of an effort to enhance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patterns of social change resulting from digital transformation, it is imperative to objectively observe and measure the process of change. However, the impacts of rapidly advancing digital technologies on various facets of society continue to evolve and expand diversely. Consequently, there is a necessity to adapt and supplement relevant statistical indicators to align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to develop new indicators that can facilitate the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emerging phenomena.

Nevertheless, the multifaceted nature of digital technologies

necessitates the creation of various statistical indicators to comprehend the societal changes brought about by digital transformation effectively. In this context,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research framework that can analyze the societal changes resulting from digital transformation, focusing particularly on the micro-level dimension of quality of life.

Building upon these discussions, this research seeks to theoretically systematize the impact of digital transformation on individuals' quality of life. Furthermore, it aims to compare and assess the current status of prominent Korea Development Indicators among the indicators currently in use and offer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se indicators in relevant domains. To achieve this, we hav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Korea Development Indicators, particularly focusing on three megatrends brought about by digital transformation: the restructuring of societal domains, the strengthening of affective culture, and the emergence of a leisure-centric society.

In order to adequately capture the impact of digital transformation as indicators, it is essential to consider various factors. The proposals made by the OECD (2019b) could serve as a valuable reference in this regard. Measuring digital transformation is vital because it affects various aspects of people's lives. Thus, to measure well-being and welfare, it is imperative to encompass these aspects and include new effects. For instance, digital technologies and novel business models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achieving goals related to health, aging, and population growth. However, specific evidence regarding the impact of digital technology use on people's mental health and social life is currently insufficient. Therefore, utilizing self-reported data as a provisional measure is essential.

Simultaneously, existing social surveys need to actively incorporate

various variables related to the use of digital technologies. This will enable existing social surveys to serve as an important source for assessing the impact of digital transformation. Developing diverse tools for measuring the impact of digital transformation is also necessary. For instance, alternative data collection methods should be considered. At present, conventional statistical survey methods still fail to encompass the full extent and scope of digital transformation. As a result, the impact of digital transformation on quality of life necessitates changes not only in terms of content but also in data collection methods.

2023년 11월 10일 접수
2023년 12월 26일 수정 완료
2023년 12월 13일 게재 확정

References

- Borzaga, Carlo and Defourny, Jacques. 2004.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Routledge.
- Carrol, B.A. 1991.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s." *Business Horizons* 34: 39-48.
- Choi, Hangsub. 2014. "Fashion, Society, and Media: Theoretical Study." *Culture and Society* 27-1: 259-293.
- Duan, S.X., Deng, H. and Wibowo, S. 2023. "Exploring the impact of Digital Work on Work-Life Balance and Job Performance: a Technology Affordance Perspective", *Information Technology & People* 36-5: 2009-2029.
- Ellis, Darren and Ian Tucker. 2021. *Emotion in the Digital Age: Technologies, Data and Psychosocial Life*. Routledge.
- Featherstone, Mike. 1990. "Perspectives on Consumer Culture." *Sociology*: 24-1: 5-22.
- _____. 2007. *Consumer Culture and Postmodernism*. Sage.
- Goldsmith, S. and W. Eggers. 2004. *Governing by Network, the New Shape of Public Sector*. Brooking Institution.
- Gong Cheng and Vicent Ribiere. 2021. "Developing a Unified Defini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Technovation* 102.
- Gluckman, P. and K. Allen. 2018. "Understanding Well-being in the Context of Rapid Digital and Associated Transformations: Implications for Research, Policy and Measurement",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Government Science Advice*, Auckland.
- Hantrais, Linda and Ashley Thomas Lenihan. 2021. "Social Dimensions of Evidence-Based Policy in a Digital Society". *Contemporary*

Social Science 16:2, 141-155

- Hwang, Ju Sung et al. 2011. *Future Study based on Digital Convergence III*.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Jang, Wonho, Setbyeol Choi, and Su Jung Kim. 2021. *The Emergence of Online-Humans and the Mainstreamization of the Digital Generation*.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Kang, Hongyeol et al. 2012. *Digital Scoio-Humanities Studies*.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Kaufmann, Fanz-Xaver (ed.). 1991. *The Public Sector: Challenge for Coordination and Learning*. Berlin: de Gruyter.
- Kraus, S., Jones, P., Kailer, N., Weinmann, A., Chaparro-Banegas, N., & Roig-Tierno, N. 2021. *Digital Transformation: An Overview of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of Research*. SAGE Open, 11(3).
- Lee, Myoung-Jin and Young Bae. 2008. "Consumer Problems in Ubiquitous Society and Its Implication." *Informatization Policy* 5-2: 62-76.
- Nam, Taewoo. 2014. "Technology Use and Work-Life Balance."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9: 107-1040.
- McKinsey. 2023. *Rewired: A McKinsey Guide to Outcompeting in the Age of Digital and AI*. Wiley.
- Norris, P. 1999.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OECD. 2019a. *How's Life in the Digital Age? Opportunities and Risks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for People's Well-being*. OECD.
- _____. 2019b. "A Measurement Roadmap for the Future", in *Measur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A Roadmap for the Future*. OECD.
- Ritzer, George and Steven. Miles. 2018. "The Changing Nature of Consumption and the Intensification of McDonalidization in the Digital Age." *Journal of Consumer Culture* 19-1: 3-20.

- Roth, Steffen. 2019. "Digital Transformation of Social Theory: A Research Update".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46: 88-93.
- Skurka, Chris, and Robin L. Nabi. 2023. "Perspectives on Emotion in the Digital Age" in Robin L. Nabi, and Jessica Gall Myrick (eds), *Emotions in the Digital World: Exploring Affective Experience and Expression in Online Interactions*. New York: Oxford Academic.
- Statistics Canada. 2020. *In-depth Review of Measuring Well-being in the Era of the Digital Society: Implications for Official Statistics. The Bureau of the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 Statistics Korea. 2023. Korea Development Indicators.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ProgressIndicator.do?cdNo=210>
- Shaw, B. and F.R. Post. 1993. "A Moral Basis for Corporate Philanthrop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2: 745-751.
- Wood, D. 1991.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Revisited."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6: 691-718.
- Weintraub, J. 1997. "The Theory and Politics of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in J. Weintraub & K. Kumar. *Public and Private in Thought and Practice: Perspectives on a Grand Dichotomy*. Chicago.

디지털 사회에서 삶의 질 지표의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 명 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요 약

이 연구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 변화 양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변화 과정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하기 위하여 국가발전지표를 검토하였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디지털 전환에 따른 거시적 변화인 사회 영역의 재구성, 감성 문화의 강화, 여가 중심의 사회의 등장이라는 세 가지 메가트렌드를 중심으로 국가발전지표의 현황과 수정 방안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사회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향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향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 영향에 대한 관련 데이터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잠정적으로는 자기보고 자료를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시에 기존 사회조사에서 각종 디지털 기술 활용 관련 변수를 적극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사회조사를 디지털 전환의 영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소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의 개발도 필요하다. 현재의 통계조사 방법은 온라인에서 대규모로 생산되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자료 수집 방법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디지털 전환, 디지털 사회, 디지털 기술, 삶의 질, 국가발전지표

최재석 농촌사회학의 전통과 확장* **

김 철 규***

요 약

이 연구는 한국사회학계 내에서 매우 독특한 위상을 가진 사회학자 최재석의 농촌 관련 연구를 지식사회학적으로 조명한다. 구체적으로는 최재석의 농촌사회학 연구의 특징, 의의, 한계 등을 평가하고, 제도로서의 한국농촌사회학회에서 최재석의 역할을 검토한다. 이어 최재석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후속세대 연구자들의 활동을 통해 최재석이 어떻게 한국 농촌사회학의 학문적·제도적 확장에 기여하였는가를 탐구하였다. 최재석의 농촌연구는 학문적 엄밀함과 자연부락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특징으로 하며, 교육 방식은 도제식으로 매우 소수의 제자를 키웠다. 하지만 최재석이 뿌린 농촌사회학 연구의 씨앗은 제자들과 농촌사회학회라는 조직을 통해 커다란 나무로 자랐다. 직접 사사한 제자뿐 아니라 최재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넓은 의미의 제자들이 농촌사회학회 틀 안에서 협력하고 연구하며, 농촌사회학의 외연을 먹거리나 지속가능학으로 확장시켰다. 또한 최재석 농촌사회학의 이론 부재 문제를 식량체제론이나 상품체제론 등의 이론적 논의를 통해 극복하기도 했다. 농촌의 위기에 대해 고민했지만 현실 참여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최재석과는 달리 그의 후속세대들은 적극적으로 현실 변화와 대안 모색에 참여했다. 고인이 된 최재석의 1세대 제자들도 이미 환갑을 넘게 되었지만, 2세대 젊은 연구자 제자들이 농촌 문제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제어: 최재석, 농촌사회학, 먹거리와 지속가능성, 농촌연구 후속세대

* 이 연구는 2023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거친 논문의 초고를 꼼꼼하게 읽고, 수정 제안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I. 문제제기

연구자는 시대의 산물이며 동시에 시대를 만들어가는 주체이다. 20세기 초반에 태어나 21세기 초반에 작고한 최재석은 한국사회의 격렬한 변동 과정에서 시대변화와 상호작용하며 연구자로서 치열하게 살다 갔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4년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문의 길을 걷기 시작한 최재석은, 2010년 경 “논문집필에 대한 강한 요구가 사라졌”음을 고백하며, “85세가 나의 한계란 말인가?”라는 마지막 문장으로 자신의 회고록을 마무리한다(최재석, 2015: 313). 50여 년의 긴 학문적 여정을 열심히 걸어온 노학자의 고백 앞에 새삼 경건해진다. 그의 삶은 연구자로 조로하고 탄 것하는 한국의 학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기도 한다. 한국에 사회학자는 많지만 공부에 대해 최재석만큼 진심이었던 학자는 찾기 어렵다. 대학교수의 본분이 가르치기와 연구하기라고 한다면, 최재석은 연구를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준 연구자였다. 최재석의 연구분야는 사회사, 가족사회학, 농촌사회학, 그리고 한일고대사 등을 포괄한다.

이 글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그리고 은퇴 후에 수많은 연구 성과를 낸 공부하는 사람 최재석의 농촌 연구의 전통을 검토하고, 그가 농촌사회학계에 남긴 크고 긴 영향력에 대해 정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최재석 농촌연구의 특징, 의의, 한계 등에 대해서 그의 저술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어 최재석이 초대 학회장으로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던 한국농촌사회학회와 학술지 『농촌사회』를 통해 그의 기여를 평가할 것이다. 한국농촌사회학회와 『농촌사회』는 최재석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후속세대들이 연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되었다. 그 틀 내에서 후속세대 연구자들이 농촌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획을 모색할 수 있었다. 농촌연구의 외연 확장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주로 최재석의 (광의의) 제자들이 함께 10년간 진행한 ‘먹거리와 지속가능성’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최재석의 정신을 이어받았지만, 연구 주제, 이론적 경향, 현실 참여 등에 대해서는 달랐던 후속세대들의 활동을 정리한다.

이러한 작업은 농촌사회학이라는 분과학문의 변화와 동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한다.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학문이 구체적인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세대적 계승을 통해 만들어지고 확장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재석의 학문적 궤적과 그의 영향에 대한 지식사회학적 분석을 통해 한국 농촌사회학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기획의 가능성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II. ‘공부하는 사람’ 최재석의 인생 궤적과 평가

1. 최재석의 삶과 학문

최재석은 1926년 경상북도 경산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에 대해 별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대체로 넉넉치 않은 집안에서 자랐고 일찍 부모를 여의었기 때문에 큰형과 큰누님의 돌봄을 받은 것으로 구전되고 있다(정수복, 2021). 그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역경의 행운』(2015)¹⁾에 따르면, 최재석은 1932년부터 1938년까지 출생지 근처의 용성공립보통학교(현 용성초등학교)를 다녔고, 이어 춘천공립농업학교로 진학했다. 1948년 춘천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에 입학하여 1953년에 졸업했다.²⁾ 졸업 후 바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1956년에 석사학위를 받았다. 석사학위 논문은 〈충청남도 신도리의 종교집단의 구성〉이었다. 한동안 중등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던 최재석은 1963년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거쳐 1966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로 부임한 뒤 1991년 퇴임하였다. 교수의 판짓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던

1) 원래 이 회고록은 2011년 3월에 출간되었으나 얼마 뒤 절판되어 2015년에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이 글에서는 2015년 개정판을 활용하였다.

2) 이때 입학 동기 여러 사람 가운데는 나중에 고려대 사회학과 동료로 함께 근무하게 될 이순구가 있다.

최재석은 보직을 전혀 맡지 않았고, 학술단체인 한국사회학회 회장(1973)과 한국농촌사회학회 회장(1990)을 역임했다.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최재석은 〈사회인류학〉, 〈농촌사회학〉, 〈가족사회학〉 등의 과목을 담당했다. 최재석의 강의는 학생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렸는데, 적어도 그가 연구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았다는 데 대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³⁾ 연구자의 태도와 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최재석 수업의 브랜드와 같은 것이었다.

최재석은 수백 편의 저술을 남겼는데, 연구분야로는 농촌사회학, 사회사, 그리고 은퇴 이후에 집중했던 고대 한일관계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최재석의 최초의 저서는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1965)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교적 쉽게 읽히고 대중적으로도 꽤 알려졌다. 이후 『한국가족연구』(1966), 『한국농촌사회연구』(1975), 『제주도의 친족조직』(1979), 『한국가족제도사연구』(1983), 『한국농촌사회변동연구』(1988), 『한국사회사의 탐구』(2009) 등 사회사 및 농촌 관련 13권의 저서를 집필하였다. 최재석은 회고록에서 말년에 집중해서 연구한 고대 한일관계사 관련 저서를 따로 분류했는데, 그에 따르면 『백제의 야마토왜와 일본화과정』(1990), 『통일신라·발해와 일본의 관계』(1993), 『고대한일관계와 일본서기』(2001), 『고대한일관계사 연구』(2010) 『일본서기의 사실기사와 왜곡기사』(2012) 등 총 11권이 있다.

2. 최재석에 대한 평가

학자로서의 최재석에 대한 평가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높다. 미국의 저명

3) 필자는 〈사회인류학〉과 〈가족사회학〉을 수강했는데, 그가 여러 번 강조했던 일본 연구자들의 태도에 대한 칭찬을 기억한다. 한국의 학자들이 대부분 제너럴리스트이고 출세와 보직에 관심이 많은데 비해 일본의 학자들은 한 분야만을 깊이 평생 파고든다는 요지였다. 특히 ‘메뚜기 똥구멍’을 평생 연구한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최재석의 이러한 발언은 한국 사회학계에서 주변인으로서 자신의 존재 방식을 정당화하는 것이기도 하고, 연구자로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이었다고 추정해본다.

사회학술지 *Contemporary Sociology*에 한국 사회학을 소개하는 글을 쓴 윤정노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학자로 먼저 최재석을 꼽은 바 있다.

내 동료들은 가장 존경할 만한 학자들을 꼽는 데 비교적 쉽게 동의했다. 내 견해로는 최재석, 신용하, 그리고 박영신 등이 오랫동안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쉬지 않고 훌륭한 성과를 쌓아왔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학을 대표하는 학자들이다.… 『한국가족제도사연구』는 1950년대부터 해당 분야에 집중해온 최재석의 최대 역작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Yoon, 1997: 309, 필자 번역)

윤정노는 최재석과 학연과 같은 특별한 접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용하, 박영신과 더불어 최재석을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학자로 소개하며 『한국가족제도사연구』를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같은 글의 말미에 최재석이 한국사회학회의 학술상을 수상한 유일한 학자임을 밝히고 있다(Yoon, 1997: 310).

최재석이 한국사회학계의 주변인 혹은 ‘아웃사이더’라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듯하다(김홍주·김철규, 2017; 정수복, 2021). 다른 학자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지 않았고, 학연이나 지연 등의 관계망에 속해 있지 않은 채 연구실에서 혼자 연구에 매진한 사람이었다. 성격적으로 그다지 사교적이지 않았고, 학과 교수들이나 학계 연구자들과의 관계도 매끄럽지 않았다(최재석, 2015). 그런 의미에서 1994년 한국사회학회에서 제정한 학술상 초대 수상자로 최재석이 선정된 것은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은 의외의 사건이었다. 한국의 각종 시상이 정치적·사회적인 고려를 하고, 다양한 사회관계망이 작동하는 까닭에 한국사회학회의 결정은 사회학회 자체의 공정성과 학술상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다.

1994년에 최재석에게 수여한 한국사회학회 학술상 상패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선생님께서서는 1958년 사회학 강의를 시작하신 이후 1991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서 정년퇴임하실때까지 평생을 사회학 연구와 교육에 헌신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한국가족제도사연구’를 비롯한 13권의 저서, 208편에 달하는 학술 논문과 65편의 준 학술논문을 저술하셔서 한국 가족과 농촌사회의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한국사회학회 회원들은 선생님의 변함없는 연구의 열정과 진지한 학문적 자세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 상을 드려 그 업적을 기리는 바입니다.

1994년 12월 16일 한국사회학회 회장 신용하

짧막한 상패글에도 최재석의 연구에 대한 열정과 학문적 자세, 그리고 연구 분야 등이 압축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상은 한국 사회학계에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최재석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사건이었고, 사회적 주변인에서 학문적 중심인으로 그 위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⁴⁾ 한국사회학회 역사에 학술상은 최재석이 유일하며, 이후에는 ‘우수논문상’과 ‘저서상’으로 나누어 해당 년도의 주요 연구성과를 시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최재석은 한국사회학회가 인정한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학술 연구자로 공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최재석의 학문관과 학문적 자세

최재석은 학문하는 자세에 대해 회고록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학자에게 필요한 학문적 자세를 ‘묘심(貓心)’이라는 표현으로 요약한다. 고양이 특성인 호기심, 자존(自尊), 고독(非社交) 등의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 세 가지 덕목이 바로 연구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4) 학술상 수상과 관련해서 최재석은 그 시상의 의례성에 대해 일침을 가하며, 수상 소감을 5분 이내에 끝내라는 주최측의 요청에 유감을 표한다. 학자로서 저술에 관한 여러 논의를 하려면 최소 30~40분은 필요한데 ‘요식행위’로 수상 소감을 하라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지극히 최재석다운 생각이다. 덧붙여 최재석은 이 상패에 기록된 논문수 208편이 2010년 즈음에는 326편으로 증가했음을 자신의 회고록에 적시하고 있다(최재석, 2015: 289).

(최재석, 2015: 123). 돌이켜 보건대, 실제 최재석은 묘심에 충실하게 평생을 연구자로 살다가 떠났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2010년까지 고독하게 자존심을 지키며 지적인 호기심 속에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다.

최재석의 드문 제자 가운데 한 명인 김홍주는 최재석이 “연구자는 현지 연구 이외에는 연구실을 떠나면 안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힌다(기념 좌담, 2010: 37).⁵⁾ 이러한 학문적 자세는 교수가 강의와 연구 이외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자세 때문에 학교 보직이나 학회장 등의 활동을 스스로 경계하기도 했고, 다른 교수들의 그런 행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판짓을 하는 “많은 교수들과 최재석은 분명히 달랐으며, 평생을 오직 공부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이런 그의 학자적 자세에 대해서는 그를 좋아했던 사람이든 싫어했던 사람이든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부에 대한 그의 열정은 때로는 집착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열정이 있었기에 최재석은 평생에 걸쳐 319편의 연구논문, 50편의 준연구논문, 24권의 연구저서를 출간할 수 있었다”(김홍주·김철규, 2017: 185).

최재석은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는 경쟁심이 있었던 것 같다. 특히 노년에 고대 한일 관계사 연구에 매진하면서 일본 연구자들을 일종의 준거집단으로 설정하고, 스스로를 독려했다. 예컨대 『역경의 행운』 개정판 머리말에서 최재석은 “발표된 연구논문의 질이나 수량에 있어서 이웃 나라 학자들에 지지 않으려고 50여 년간 노력해왔다”(2015: 8)고 밝히고 있다.⁶⁾

5) 이 좌담회는 학술지 『농촌사회』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김일철, 김홍주, 정명재, 조옥라 등이 참석해서 학술지의 역사와 의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연히 초대 회장인 최재석과 학술지 창간에 대한 회고가 적지 않았다.

6) 1990년대 중반 필자가 새해 인사를 드리러 가면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일본 학자와 자신의 연구실적수를 비교해서 자료로 보여주던 기억이 생생하다.

Ⅲ. 최재석 농촌사회학의 전통

1. 농촌연구의 내용과 특징

최재석의 연구 방식은 그야말로 품을 많이 파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농촌사회학 연구는 주로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꼼꼼한 기록을 바탕으로 지역의 구조와 변화를 분석했다. 이문웅·김홍주(1992)에 따르면, 최재석의 농촌사회 연구는 2개의 시기로 나누어진다. 즉 1970년대의 연구는 공식적인 접근방법을 통한 농촌사회의 구조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1980년대의 연구는 통시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농촌사회의 재편성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관심을 가졌다(이문웅·김홍주, 1992: 14). 이러한 변화는 그의 2개의 저서, 『한국농촌사회연구』(1975)와 『한국농촌사회변동연구』(1988)의 대비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1988년) 필자의 지적 욕구는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도시화·산업화의 결과 이러한 농촌사회의 전통적 사회구조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하였는가 하는 점으로 바뀌기에 이르렀다. 본서는 이러한 농촌사회의 구조변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모은 것이다. ...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특히 중요한 변화의 요인으로 필자가 고려한 것은 농촌주민의 대량 이촌현상이다. 이러한 이촌현상이 변동의 결과이기 보다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외생적 변화요인으로 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촌락사회의 구조적 변동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최재석, 1988: 1-2)

반면 1975년 발간한 『한국농촌사회연구』는 서구문화의 영향이 적고, 전통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예컨대 조사지 선정에 있어 문중재산이 많거나 사당 또는 종가택이 있는 동족을 기준으로 했다(최재석, 1975: 211-212). 이러한 접근은 당시 한국의 전통적인 농촌사회의 구체적인 모습과 내부 관계가 잘 연구되지 않은 상황에 적절하다. 또한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의 동족 마을에 대한 이념형적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연구 결과를 보다 일반적인 사회학적 개념과 이론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례지역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이문웅·김홍주, 1992: 17).

최재석은 많은 연구를 현지조사를 통해 진행했다. 주로 문헌자료의 수집 및 정리, 참여관찰 및 비형식적 면접 등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최재석의 연구방법은 서구적 의미의 사회학적 조사방법이나 엄밀한 의미의 인류학적 참여관찰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본인과 대학원 연구원들이 직접 지역에 들어가 깊이 있는 관찰과 면접을 진행한 것은 해당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한국 농촌사회의 특수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잡은 '자연부락'을 통한 한국 농촌사회의 이해는 그의 큰 성취로 평가할 수 있다. 자연부락은 오랜 역사 속에서 구조화된 농민들의 자족적 생활권이자 독립적이고 통일적인 단위로, 자연부락의 발견은 한국 농촌연구의 중요한 전환을 마련했다(이문웅·김홍주, 1992: 18-19). 이러한 경험적 연구 결과, 최재석은 미국의 농촌 공동체(rural community)나 일본의 자연촌과는 다른 한국 농촌의 특수한 지역집단을 자연부락으로 개념화하였다(〈표 1〉 참조).

〈표 1〉 한국, 일본, 미국의 농촌 단위

자연부락(한국)	자연촌(일본)	rural community(미국)
- 부락의 신은 자연신 - 조직성이 없는 근린관계 포함 - 家 < 자연부락	- 부락의 신은 동족신 - 다수의 기능적인 근린 '집단' 포함 - 家 < 小字・組 < 자연촌	- 지방도시적 취락을 중심으로 하여 거기서 방사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받는 일정지역 내의 농가를 둘러싼 동심원상의 상권

출처: 김홍주·김철규(2017)

자연부락의 발견은 최재석의 농촌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전통적인 한국 농촌의 정주형태와 공동체적 삶의 구조를 경험적

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석의 미시적 접근방식은 구조에 대한 이해의 결여라는 한계를 가진다. “한국 전체의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자본의 농업침투로 인한 농촌 지역집단의 변화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다(이문웅·김홍주, 1992: 21). 최재석은 한국 농촌의 자본주의적 맥락이나 그 이론화 작업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최재석이 강조하듯 『한국농촌사회변동연구』는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농촌사회의 구조변동에 주목했다. 이러한 관심의 확대는 농촌경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게 하였다. 즉 농지의 경작규모 변동 추이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농지 임대차 관계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수집했던 것이다. 예컨대 사례지역의 경우, 1960년대에는 경작규모가 소규모 소농층(900평-2000평)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1970년대에는 임대 등을 통해 중농층(3000-6000평)으로 증가했고, 임대농과 임차농 간의 관계가 평등화했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준다(최재석, 1988: 471). 이와 관련해서 이문웅·김홍주(1992: 29-30)는 최재석의 연구가 ‘중농표준화론’과 유사하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중농표준화론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최재석의 경험적 연구 결과는 아쉬움과 한계를 낳는데, 이는 최재석의 경험적·미시적 관점의 한계이다. 즉, 한국의 농업 및 농촌 문제가 보다 거대한 변화, 즉 2차세계 대전 이후의 자본주의 발전과 남한의 개발주의 프로젝트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맥마이클, 2015). 이는 『한국농촌사회변동연구』의 서문에서 “중요한 변화의 요인으로 필자가 고려한 것은 농촌주민의 대량 이촌현상이다. 이러한 이촌현상이 변동의 결과이기 보다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외생적 변화요인으로 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촌락사회의 구조적 변동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1988: 3)는 서술의 의미와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농촌주민의 대량 이촌현상’이 한국 전쟁 이후 진행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재편과정, 냉전체제에서 실행된 농지개혁 및 식량원조, 그리고 남한의 수출지향적 공업화 등의 세계사적·거시적 변화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김철규, 2018). 최재석 농촌연구의 이론 부족 및 거시적 구조와의 연결성 미흡이라는 문제는 후학들의 과제로 남겨졌다. 이러한 작업은 1990년대 이후 새로운

농촌사회학적 시각에서 농업·농촌·농민문제를 연구하는 젊은 연구자들의 몫으로 남겨졌다(김철규, 2003, 2018; 김홍주외, 2015, 윤병선, 2015).

2. 최재석의 제자들과 연구 전통의 계승

최재석은 연구자로서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별로 많지 않았다. 최재석의 회고록이나 정수복의 저서 등으로 추정하건대, 대학원 지도를 통해 배출해서 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자는 이창기, 안호용, 김홍주 정도이다. 이는 최재석의 교육방식이 도제식이라는 점과 관련되는 것 같다.⁷⁾ 영남대 명예교수인 이창기는 학부 입학 면접 때부터 최재석의 눈에 들어 학문의 길을 걷게 된다. 원고 정리와 자료 관련 심부름 등 도제식 훈육을 통해 이창기는 최재석과 인연을 맺는다. 본격적인 학문적 훈련은 이창기가 학부 3학년 때 최재석의 경북 경산 현지 조사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방학 때마다 여러 현지 조사에 함께했다. 대학원에서도 이러한 작업은 계속되었고, 이창기는 1976년 <동족집단의 변화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고, 2006년 일본 고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주대를 거쳐 영남대학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2014년 퇴직하였다. 그는 가족사회학, 농촌사회학 분야의 여러 연구들을 발표하였고, 주요 저서로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1999), 『영해지역의 반촌과 어촌』(2015) 등이 있다.

이창기가 하던 원고 정리, 자료 심부름, 현지 조사 등의 작업을 이어받은 최재석의 연구실 ‘제2대’는 안호용이라고 할 수 있다.⁸⁾ 안호용은 최재석이 1980년대 출간한 주요 저서들, 즉 『한국가족제도사연구』(1983), 『한국고대

7) 최재석은 한 학부 제자에게 학문하는 자세를 몇 가지 가르쳐주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내 연구실에 자주 들러 내가 어떻게 연구하는지 몸소 보고 배워라. 도제식 공부방법이야말로 연구방법을 전수받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밝히고 있다(최재석, 2015: 142).

8) 최재석에 따르면 ‘제 2대’는 최재석의 저서를 다수 출간한 일지사의 편집장이 사 용한 표현이었다. 최재석은 “나는 나의 학생들에게 내 ‘손때’가 묻기를 원했다”고 표현하며 다시 한 번 도제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최재석, 2015: 131).

사회사방법론』(1987), 『한국고대사회사연구』(1987) 등의 원고 교정, 색인 작성 등의 작업을 적극 도왔다. 안호용은 <가족형태와 핵가족적 태도에 관한 연구>로 1983년에 석사학위를, 그리고 1989년 <조선전기 상제의 변천과 그 사회적 의미>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안호용은 사회사, 가족사회학 분야를 연구하였고, 1995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안호용은 교수로 부임한 뒤에도 최재석의 학술적 지원자 역할을 이어갔다. 2000년대 저술들, 예컨대 『한국사회사의 탐구』(2009), 『고대한일관계사 연구』(2010) 등은 모두 안호용의 도움이 컸다고 고백하고 있다(최재석, 2015: 137). 안호용은 2019년 퇴임하였다.

최재석의 학문적 막내 제자는 원광대에 재직 중인 김홍주이다. 최재석은 1984년 <농촌사회학> 수업 시간에 학부생 김홍주를 처음 만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당시 수업시간에 김홍주는 한국의 지주소작 실태에 관한 매우 인상적인 발표를 하여 최재석의 관심을 끌었을 뿐 아니라 “1975년 『한국농촌사회연구』로 일단락을 맺은 농촌사회에 대한 연구 열정을 일깨워주었다”(최재석, 2015: 139). 이후 김홍주는 최재석의 연구실에 상주하게 되었고, 1985년 농촌사회변동 연구에 연구보조원으로 투입되었다. 현지조사의 대상지는 김홍주의 고향이기도 했던 전라북도 임실군의 한 마을이었고, 약 2년간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농촌사회변동연구』(1987)가 출간될 수 있었다. 이후 대학원에 진학한 김홍주는 최재석의 지도로 1989년 <현행 소작제의 성격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그리고 1994년 <한국 농민가족의 변화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홍주는 2005년 이후 원광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재석에 따르면 김홍주는 농촌사회학과 사회복지학을 접목하려는 노력을 해왔고(2015: 141), 그 결과물들이 편져서 『사회적 경제와 공공성』(김홍주, 2021)이나 논문 “사회적 농업을 통한 공동체 돌봄의 실현 조건”(김홍주, 2022)이라고 할 수 있다.

최재석과 김홍주의 인연은 ‘한국 농촌사회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80년대 말, 산업화와 근대화 속에서 한국의 농촌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었고, 농촌사회학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모색되었다. 그 결과가 1990년

3월 창립된 한국농촌사회학회였다. 서울대 김일철, 부산대 홍동식 등이 학회 창립을 적극 추진하였고, 최재석을 한국농촌사회학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최재석이 학회장 활동을 하던 시기 ‘이사급’ 간사를 맡아 학회의 초석을 닦는 데 기여한 제자가 바로 김홍주였다(최재석, 2015: 140). 이후 김홍주는 한국농촌사회학회에서 여러 역할을 맡아 학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재석의 학문적 자세와 농촌연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도제식 훈련을 망설이거나 직접 제자가 되지 않았지만 그의 학문관을 높이 평가하는 후학들이 적지 않았다. 그중 한 사람이 김철규이다. 김철규는 학부에서 최재석의 수업을 2과목 수강했고,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학부 졸업 후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1987년 미국 조지아 대학에서 *Agrarian Question and Land Reform in South Korea*로 석사학위를, 그리고 1992년 *Capitalist Development, the State, and Restructuring of Rural Social Relations in South Korea*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로 부임한 후, 김철규 역시 한국농촌사회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김철규는 김홍주와 학문적 교류를 이어갔다. 최재석의 직계·방계 제자들이 그가 만든 한국농촌사회학회의 틀 안에서 함께 연구하고, 학술지를 만들고, 학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3. 한국농촌사회학회의 출범과 학술지 『농촌사회』의 창간

한국농촌사회학회는 1990년 창립되었다. 당시는 한국사회학회의 회원도 그다지 많지 않은 비교적 느슨한 학술단체였으며, 분과학회의 조직화도 별로 이뤄지지 않은 시절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농촌사회’를 전문으로 하는 학회가 필요한가에 대한 토론이 제법 치열하게 이뤄졌다(기념 좌담, 2010: 32-33).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농촌문제와 우르과이 라운드 등 농촌위기에 대한 연구자들의 역량 결집의 필요에 의해 학회 창립을 시도하게 되었다(김철규, 2010). 학회 발기인들이 모여 여러 실무적 준비를 하는

가운데, 발기인들 대부분이 최재석을 회장으로 추대하고자 했다. 하지만 최재석은 회장 제의를 여러 번 고사하였다. 계속된 설득에 최재석은 1년만 회장을 맡기로 하고 회장직을 수락했다. 그리고 임기 동안 학술지 창간호를 발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재석이 1년만 회장직을 맡겠다고 한 것은 정년퇴임 시기와의 관련이 있었던 것 같다(정명채, 2017: 230).

한국농촌사회학회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최재석은 약속대로 1991년 학술지 『농촌사회』를 발간하였다. 1991년 창간된 『농촌사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해왔다. 연간 1회 발간되던 『농촌사회』는 만 10년이 되던 2011년부터 연간 2회 발간되기 시작하였고, 2023년 10월 33집 2호가 발간되었다. 한 번의 결호도 없이 33년째 꾸준히 학술지가 출간되고 있는 것이다. 후학들의 노력과 정성도 높이 평가받아야 하지만, 그 작업의 토대를 마련해준 최재석의 헌신과 열정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사회』 창간호에서 최재석은 아래와 같은 창간사를 통해 그 소회를 밝히고 있다.

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공업화의 여파가 한국농촌사회학의 침체 및 퇴조를 부채질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농촌사회학이 설 땅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론적·실천적 과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최근 농촌사회의 제반문제가 점차 누적되어가고 있다는 일반의 인식이 고조되고 있어서 그만큼 농촌사회학적인 연구과제가 산적되고 있다. 따라서 철저히 ‘쟁이’ 정신을 가진 농촌사회학자들의 내적 성장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1991: 3)

창간사에서 최재석은 그의 ‘쟁이’ 정신을 강조하며, 농촌사회 연구자들이 농촌의 여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이론적·실천적 과제 해결에 정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치열한 문제의식과 노력 덕분에 후속 연구자들이 농촌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며, 한국 농촌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최재석 농촌사회학의 확장과 전환

1. 한국농촌사회학회의 성장과 『농촌사회』의 외연 확장

최재석은 한국농촌사회학회 초대 회장으로 그리고 학회지 『농촌사회』의 창간으로 그 역할을 마무리했다. 그가 뿌린 농촌연구의 씨앗은 농촌사회학회라는 조직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창립 후 3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한국농촌사회학회는 농촌연구자들의 학술단체이자 연구 공동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사이 최재석은 고인이 되었지만, 조직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재석이 어려움 속에서 정성을 기울여 만들었던 학술지 『농촌사회』는 2011년 사회학 학술지 중 가장 먼저 등재지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는 당시 편집위원장 김익기, 총무 한도현과 편집위원들의 역할이 컸다. 특히 한도현은 일찍부터 등재 관련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농촌사회』의 등재화를 추진하여 학술지의 제도적 안정성에 기여하였다.

최재석 이후 역대 학회장으로는 김일철, 왕인근, 최재율, 류태영, 김동일, 한상복, 윤근섭, 정명채, 최상호, 김주숙, 조옥라, 정기환, 김종덕, 박민선, 박대식, 김철규, 윤수종, 김홍주, 허장 등이 있다. 한편 최상호, 김태현, 김동일, 김익기, 김종덕, 김철규, 김홍주, 윤수종, 윤병선, 허장, 김원동, 이해진, 박병철 등이 학회지 편집위원장을 맡아왔다.

학회 창립 당시 대학원생으로 학회 간사 역할을 맡았던 김홍주는 학회의 운영위원, 총무, 편집위원장 등을 거쳐 2021년 학회장(2021-22년)으로 학회 발전에 기여했다. 최재석의 학부 학생 가운데 하나였던 김철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편집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이후 김철규 역시 학회장(2017-18년)을 역임했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학부에서 최재석에게 배운 김원동(강원대)은 한국농촌사회학회의 편집위원장, 감사 등으로 활동하였고, 농민시장에 관한 연구를 깊이 있게 진행하여 농촌사회학 발전에 기여하였다(김원동 2017; 2018). 고려대 출신 이해진(충북대) 역시 학회 총무와 편집위원장을 맡아 학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최근 농촌사회의 연구분야는 어떻게 확장되어 왔을까? 아래의 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한국의 『농촌사회』에 게재되었던 논문을 미국과 유럽의 농촌사회학회지와 비교한 것이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 그동안 한국 농촌사회학의 연구 주제도 많이 변했고, 외연이 확장되어왔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최근 한국 농촌사회학자들은 조직/리더십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또한 여성/젠더, 사회적 가치, 먹거리, 귀농 등도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였다. 이는 『농촌사회』 초창기의 논문 주제들이 주로 인구, 가족, 빈곤 등이었던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 예컨대 본격적으로 특집을 처음 기획했던 제2집의 주제는 ‘한국농촌의 인구·노동력·가족문제’와 ‘한국농촌의 빈곤문제’였고, 관련 논문들이 각각 4편씩 게재된 바 있었다.

<표 2> 미국, 유럽, 한국의 농촌사회 학술지의 연구주제: 2019-2021

순위	미국		유럽		한국	
	연구주제	논문 편수	연구주제	논문 편수	연구주제	논문 편수
1	환경/재난	18	먹거리/종자	17	조직/리더십	10
2	여성/젠더	12	농촌/개발/공간	14	농촌/개발/공간	9
3	이주/인종	9	정책/정치	13	여성/젠더	7
4	농촌/개발/공간	8	환경/재난	10	사회적 가치	7
5	인구/가족/노인	7	불평등/빈곤	9	먹거리	5
6	불평등/빈곤	7	이주/인종	8	농민	4
7	먹거리	5	여성/젠더	7	노동, 귀농	3

출처: 김철규(2021)

2. 농촌사회학 연구의 확장 - ‘먹거리와 지속가능성’

1) 대안의 모색과 공동 프로젝트

앞에서 지적하였듯 최재석의 농촌사회연구는 자연부락이라는 장소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었지만, 농촌변화를 추동하는 외부적

힘에 대한 설명과는 연결되지 못했다. 외부적 큰 변화는 막연히 산업화·도시화로 표현되었을 뿐이다. 최재석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외부적 힘, 즉 자본주의적 변화와 세계 농식품체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김철규, 김홍주, 이해진, 그리고 건국대의 농업경제학자 윤병선 등의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 농업의 위기와 그 대안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던 일군의 학자들은 2000년대부터 로컬푸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물리적·사회적 관계를 줄이는 것이 지구화된 농식품체계의 대안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소규모 세미나 등을 진행하던 이들 연구자들은 2009년 ‘먹거리 위기와 로컬푸드’라는 3년짜리 공동연구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이해진, 허남혁 등 젊은 연구자들과 윤병선, 김홍주, 김철규(연구책임) 등 중견 학자들이 미국의 공동체지원농업, 농민장터 등에 대해 공부하고, 일본 현지 답사를 통해 일본형 로컬푸드인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들은 한국의 농업이 당면한 위기가 전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자본주의의 구조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더불어 신국제 분업구조 속에서 한국의 수출지향적 경제발전 모델의 왜곡된 경로가 한국 농업 및 농촌의 위기의 원인이라고 분석한다(김철규, 2003, 2021; 김홍주 외, 2015).

한국 농업 및 농촌의 위기 기제를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집단적인 노력은 2010년 교육부 연구지원 사업인 Social Science Korea(SSK)를 통해 보다 체계화되었다. SSK 사업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2010년 3월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연구교수였던 김선업을 비롯, 김철규, 김홍주, 이해진, 그리고 윤병선 등이 계획서 작성 작업을 진행하였다. 여러 차례의 준비회의 끝에 ‘먹거리와 지속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5월 한국연구재단에 계획서를 제출했다. 연구의 책임자는 최재석의 제자이자 원광대 교수인 김홍주가 맡게 되었다. 2010년 8월 31일에 선정이 공지되고, 바로 9월 1일자로 연구 사업이 개시되었다. 당시 대학원생 연구보조원으로는 고려대의 김현진, 건국대의 송원규, 원광대의

하영진 등이 참여하였다. 이 사업은 처음에 92팀에 대한 지원으로 시작하여, 해마다 평가를 통해 팀수를 줄이고 팀당 연구비 규모를 늘리는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경쟁을 통해 연구 성과를 늘리겠다는 신자유주의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먹거리와 지속가능성 연구팀’(이하 먹거리팀)은 부담 갖지 말고 재미있게 연구하다 조기 탈락해도 괜찮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고, 무려 10년간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2) 연구 프로젝트 ‘먹거리와 지속가능성’의 성과와 의의

소박하게 시작된 SSK 먹거리와 지속가능성 프로젝트는 중형, 대형으로 진화하며 10년 동안 지속되었다. 201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공동으로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었다. 먹거리팀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 농촌 및 먹거리 관련 연구자들은 물론 국외 저명 학자들과 함께하기도 했다. 또한 김홍주가 소속된 원광대 사회복지학과와 김철규가 소속된 고려대 사회학과의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후속세대를 양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더 나아가 먹거리팀의 연구원들은 시민교육과 지방자치단체의 먹거리 정책 개발 및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도농상생, 로컬푸드, 지속가능한 농식품체계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려는 노력을 경주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3년 11월에는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선정 최우수연구과제상을 받았고, 다양한 자리에서 먹거리팀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었다. 그동안의 성과를 영역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관련 성과

공식적으로 먹거리와 지속가능성 연구진이 10년 동안 출간한 저역서는 9권, SSCI를 비롯한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논문수는 26편, 그리고 국내 등재학술지 게재 논문수는 50편에 달한다. 대표적인 공동 저역서로는 『먹거리와 농업의

사회학』(2013), 『한국의 먹거리와 농업』(2015), 『먹거리, 지구화 그리고 지속가능성』(2015), 『석유식량의 종언』(2016), 『세계 농업과 먹거리의 정치경제학』(2016) 등이 있으며, 개인저술로는 Cheaponomics: The High Cost of Low Prices(Carolan, 2014), 『밥의 인문학』(정혜경, 2015), 『농업과 먹거리의 정치경제학』(윤병선, 2015) 등이 있다. 그밖에 SSK에 직접 사사하지 않은 참여 연구진의 저서도 다수가 있다.

먹거리팀은 비교적 넉넉한 연구비를 기반으로 먹거리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으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전국민 조사를 3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2011년에 제1차 전국민조사인 <먹을거리 위기와 한국인의 식습관에 관한 조사>가 이뤄졌다.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400명을 대상으로 먹거리 위험, 식습관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수의 연구논문이 작성되었다. 제2차 대규모 조사는 2015년에 <한국인의 식습관과 먹거리 소비에 관한 조사>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10년 간의 긴 공동연구를 마무리하며, 2020년 제3차 전국민의식조사인 <한국인의 식습관과 먹거리 소비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여러 경험적 연구가 출간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해진·김철규(2021)의 “농의 가치와 먹거리 시민권”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농업·농민·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시민권이 중요하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있다. 농의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먹거리시민을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촌 및 한국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밖에도 여러 소규모의 자료수집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2014년 6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진행된 <친환경농업생산자 현황 및 의식조사>를 꼽을 수 있다. 이 조사는 634명의 친환경 농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지속가능한 농식품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대량으로 투입하는 관행농업을 탈피하고, 친환경 농민들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농촌의 실태를 밝혔다.

먹거리팀은 연구결과를 학술장에서 발표하고 토론했으로써 먹거리와 농업 문제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 관련 학술단체들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예컨대 2011년 4월에는 한국환경사회학회-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와 함께 <구제역을 통해 본 자본주의 시대의 환경과 생명>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2012년 5월에는 SSK-한국농촌사회학회-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12월에는 비판사회학대회에서 특별 세션을 구성하였고, 강원대의 김원동이 좌장으로 참여하였다. 이때 발표된 글의 제목은 “먹거리 위기와 한국 농식품 체계의 지속가능성”(김철규·윤병선·김홍주), “위험사회에서 먹거리 소비양식의 사회경제적 분화”(김선업), “소비자에서 먹거리시민으로”(이해진) 등인데, 각각은 연구팀의 깊은 고민을 담고 있었다. 그밖에도 한국사회학회, 한국농촌사회학회 등에서 특별 세션을 구성하여 활발하게 연구 발표를 하였다.

국제학술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2014년 7월 일본 요코하마 세계사회학대회 및 치바대학과의 연합세미나를 예로 들 수 있다. 치바대학에서 한국과 일본의 로컬푸드에 대한 비교 발표를 통해 양국의 대안 모색을 위한 노력을 공유하였다. 또한 비슷한 기간 요코하마에서 열린 세계사회학대회에 참여하여 대안 농식품 소비와 식량주권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2015년 4월에는 중국 사천성 사회과학원과 <한·중 농업과 음식문화>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회를 가졌다. 김철규, 김홍주, 윤병선 등이 발표를 통해 중국 학자들과 교류했다. 가장 큰 규모의 국제학술회의는 2015년 5월 SSK 먹거리팀-한국농촌사회학회-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가 <Rethinking Food and Sustainability>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였다. 제프리 로렌스(세계농촌사회학회회장), 마이클 캐롤란(콜로라도주립대), 원태준(중국 인민대), 히사노 슈지(일본 교토대) 등 저명한 외국학자들이 대거 내한하여 발표하였고, 김철규, 윤병선, 스옌(중국 공동수확농장 대표) 등이 참여하였다.

2017년 5월 한국농촌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는 <전환의 시대, 한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당시 학회장 김철규는 이 행사를 최재석을 추모하는 자리로 기획했다. 이를 위해 학술회의 장소를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최재석-이춘계 강의실로 정하고, 따로 최재석 세션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김홍주가 “최재석교수의 농촌사회 연구”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먹거리팀은 그동안 축적한 연구역량과 성과를 아시아농촌사회학회를 통해 과시하였다. 2018년 8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아시아농촌사회학회 학술대회에 대거 참석하였다. 인도네시아의 마카사르에서 개최된 제6회 아시아농촌사회학회(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Rural Sociology)의 ‘Learning from Alternative Food Movements in Asia: Are there Asian Paths to Sustainable Food Systems?’라는 세션에서 교수들뿐 아니라 김태완, 박동범, 송인주, 송원규, 이지웅 등 다수의 젊은 연구자들이 발표했다. 이 학회에서 김철규는 아시아농촌사회 학회 이사로 선임되었다.

(2) 학문적 네트워크와 교류의 확장

먹거리팀은 국내의 다른 전공자들, 그리고 외국의 학자들과도 교류하고 실제 몇몇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켜 한국 농식품사회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2011년에 세계농촌사회학회 회장이었던 호주 퀸즈랜드 대학의 제프리 로렌스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다. 2013년 중형으로 프로젝트 규모를 키우고 연구주제를 “대안 먹거리 체계와 지속가능성 연구”로 특정하면서 또 다른 외국학자들이 참여했다. 콜로라도 대학의 마이클 캐롤란과 일본 치바대학의 미마 니시아마 등이다. 또한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상황에서 식품영양학자이자 한식 전문가인 호서대 정혜경, 그리고 서울대학에서 한국 축산업의 변화에 대한 우수한 박사논문을 집필한 송인주가 참여하였다. 이후 세계사회학회 ‘농업과 먹거리 분과’(RC40) 위원장을 역임하고 세계식량체제론을 만든 코넬대의 필립 맥마이클이 합류했다. 외국학자들과 몇 차례 회의를 하고 직접 만나 학문적 교류를 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공동작업은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개별 연구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형태에 머문 것이 아쉬운 점이다.

(3) 시민교육과 지식 공유

먹거리팀은 연구진이 생산한 지식을 일반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먹거리의 사회생태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도시민들과 농민들에게 연대의 자원이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시민 단체와의 협력 하에 다양한 먹거리 강좌를 개설하였다. 2011년 10월부터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시민강좌라는 이름으로 <희망의 사회학: 먹거리 대안 찾기>라는 주제로 시민교육을 시도하였다. 또 2014년 4월에서 약 두 달 동안 한살림서울 식생활교육센터-SSK 시민강좌 <지속가능한 농과식을 위하여>를 운영했다. 2014년 10월-11월에는 먹거리 시민강좌 <지속가능한 농과 식을 위하여>를 서울시농업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설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연구자의 전문적 지식을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식품체계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4) 정책 및 사회 참여

먹거리팀의 연구진들은 그동안 연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농업 및 먹거리 정책에도 개입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공급식 관련이었다. 서울시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와의 협조 속에 집담회를 하기도 하고, 연구자들이 친환경급식의 기획 및 운영에 참여하였다. 또 지역 단위의 먹거리 정책 구현과 시민단체를 통한 문제 해결에 힘을 썼다. 예컨대 김홍주, 정혜경, 안윤숙 등이 시민단체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윤병선, 김철규, 김홍주, 정혜경, 이해진, 김선업 등은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에 깊이 관여했다. 2017년부터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윤병선은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장과 공공급식분과 위원장을 역임했다. 김철규는 ‘먹거리 전략 2030’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위원장을 역임했고, 김홍주는 ‘먹거리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T/F 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김선업은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서울시 먹거리 통제조사’를 기획하여, 서울 시민의 먹거리 실태를 분석하고 농의 가치 확산을 위한 자료를 축적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⁹⁾

연구진의 일부는 직접 먹거리 관련 협동조합을 만들어 대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 7월에 먹거리팀 하계워크숍이 익산 청년식당에서 열렸다. 청년식당은 안윤숙과 김홍주가 주도하여 만든 먹거리 협동조합으로 청년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공급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농민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대적으로 먹거리 취약성이 높은 청년층에게 음식을 통해 건강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연구가 실제 현실의 조직으로 확장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 후속세대 양성

대학원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모임 역시 먹거리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이였다. 김선엽의 주도하에 대학원생들과 더불어 *The Hand Book of Food Research* 등에 대한 원서 강독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졌다. 먹거리팀의 지원을 받은 대학원생들 가운데 송원규는 건국대 경제학과를 수료하고, 네덜란드 바헤닝언(Wageningen) 대학에 1년간 유학하여, 학위 논문 작성 기회를 가졌다. 2017년 고려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한 김태완은 충남 홍성군에 장기간 머물며 농촌의 대안적 마을운동에 대한 깊이 있는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했다. 먹거리팀의 재정지원을 받아 박사학위를 받은 젊은 연구자는 총 6명이고, 석사 학위자는 5명이다. 10년의 연구비 수혜 기간 동안 이보다 더 많은 대학원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충북대 교수로 재직 중인 이해진은 먹거리팀이 거둔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해진은 먹거리팀 출범 때부터 공동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농촌 및 지역에 관한 연구를

9)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서울시 먹거리 시민위원회는 점진적으로 약화되었고, 현재는 거의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윤병선, 김철규, 김홍주 등이 만들었던 시민참여적 거버넌스와 먹거리 정책의 틀도 해체되었다. 거시 정치의 중요성과 선출직 지자체 장이 제도의 형성과 그 해체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활발히 진행하였다. 아시아농촌사회학회와 Agri-Food Research Network 등의 국제학술대회에도 부지런히 참여하여 연구와 학술교류의 폭을 넓히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이해진은 어려운 환경을 딛고 교수로 부임한 뒤, 농촌사회학회의 총무이사 와 학술지 『농촌사회』의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편집위원장 재임 시 특 집기획, ‘이슈와 비판’ 등의 코너를 마련하며 학술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 3〉 먹거리팀 연구지원을 받은 대학원 학위자들

성명	학위취득 학교	학위 취득연도	학위명
박길태	원광대	2012	사회복지학 박사
안운숙	원광대	2012	사회복지학 박사
이철	고려대	2014	문학박사(사회학)
송원규	건국대	2018	경제학 박사
김태완	고려대	2020	문학박사(사회학)
이효희	건국대	2021	경제학 박사
이현진	원광대	2014	사회복지학 석사
이지웅	고려대	2014	문학석사(사회학)
김태완	고려대	2016	문학석사(사회학)
이대암	고려대	2016	문학석사(사회학)
한승범	고려대	2022	문학석사(사회학)

V. 결론

최재석은 학문적 주변인이었고, 공부의 길을 고독하게 달렸던 연구자였다. 소수의 제자들이 그를 끔찍하게 좇았지만, 최재석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외로운 존재였다. 하지만 그가 뿌린 공부의 씨앗은 직계·방계 제자들과 한

국농촌사회학회를 통해 풍성한 수확을 거뒀고, 다음 세대를 낳았다. 그런 의미에서 고인이 된 최재석은 적어도 농촌사회학 분야에서는 주변인이나 외로운 존재가 아니다.

최재석의 미시적이고 사례 중심적 연구는 한국 농촌사회학에 큰 족적을 남겼다. 경험적 분석 단위로서의 자연부락을 발견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가 물음표로 남겨 놓았던 혹은 다소 모호하게 산업화·도시화로 표현했던 한국 농촌의 위기 기제는 후학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최재석이 초대회장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출범시켰던 농촌사회학회와 학술지 『농촌사회』는 농촌 관련 연구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학문적으로 교류하는 중요한 광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재석이 뿌린 농촌사회학의 씨앗은 한국농촌사회학회라는 제도적 뿌리를 내리게 했다. 그 뿌리를 바탕으로 학회지라는 줄기를 뻗게 했으며, 농촌사회 연구자들이라는 열매를 맺게 했다. 그 첫 수확물이 김홍주, 김철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김홍주와 김철규라는 씨앗은 다시 다음 세대의 수확물을 낳았다. 그들이 ‘먹거리와 지속가능성’이라는 SSK 장기 프로젝트의 토양 위에서 새롭게 자라난 젊은 연구자들이다. 먹거리팀의 지원을 받아 박사학위를 받고 양성된 김태완(한국섬진흥원 부연구위원), 박길태(신경대 교수), 안윤숙(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 이사장), 이철(노동정책연구소 연구원), 송원규(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부소장), 이효희(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소장) 등은 각자 자기가 맡은 곳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 중이다. 송원규는 농민권, 농민기본소득 등의 문제에 대해 활발한 연구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지웅은 농협의 개혁과 민주화를 위해 농민들과 공부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재석이 농촌사회학회장에 취임하며 걱정하던 “농촌사회의 제반문제”는 최재석의 학맥을 이은 후속 세대 연구자들에 의해 그 해결책이 강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재석의 농촌연구와 그 후속세대의 작업을 가족 및 농촌사회학적 비유로 다소 감상적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손이 귀했던 최재석은 평생 소수의 직계 제자, 즉 학문적 자식을 셋(이창기, 안효용, 김홍주) 밖에 갖지 못했다. 그중 막내인 김홍주는 농촌사회학이라는 척박한 땅을 물려받아 농사를 지어

왔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최재석의 조카들(김선업, 김원동, 김철규, 이해진 등)이 함께 자갈을 고르고, 땅을 만들어 농사를 지어왔다는 점이다. 최재석의 막내와 조카들은 다행히 출산율이 높은 편이어서 후손들은 제법 번성하였다. 이들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농촌사회학이라는 땅을 갈고, 농사를 짓고 있다. 좀 힘들어도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건은 녹록치 않다. 그 래도 이게 옳은 일이고, 해야 할 일이기에 직접 뵙지 못한 할아버지의 귀한 ‘쟁이 정신’ 생각하며 묵묵히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 속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농촌사회학자들의 분발을 요구했던 최재석의 목소리가 지속가능한 세상 만들기라는 작업으로 전환되어 왔다. 거침없이 달려온 한국의 발전 모델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다. 극도로 낮은 출산율, 낮은 행복도, 높은 자살률 등은 이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이제 농촌은 한국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희망의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농촌사회학 역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가는 미래의 학문으로 전환중이다. 최재석 농촌사회학의 전통이 그 후속세대에 의해 이어지고, 확장된 결과이다.

2023년 12월 12일 접수
 2023년 12월 27일 수정 완료
 2023년 12월 20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 김원동. 2017. 『농민시장의 사회학』. 따비.
- 김원동. 2018. 『미국의 농민시장과 공동체 지원농업』. 따비.
- 김철규. 2010. “한국의 농촌사회학과 『농촌사회』 20년.” 『농촌사회』 20(2): 7-27.
- 김철규. 2018. 『사회학의 눈으로 본 먹거리』. 따비.
- 김철규. 2021. “세계체계의 변화와 한국의 농식품체계.” 『아시아리뷰』 10(2): 85-112.
- 김철규. 2022. “농촌사회학 연구의 동향과 농촌사회학의 과제.” 『농촌사회』 32(2): 7-39.
- 김흥주 외. 2015. 『한국의 먹거리와 농업』. 따비.
- 김흥주·김철규. 2017. “최재석 교수의 농촌사회 연구: 궤적과 업적.” 『농촌사회』 27(1): 177-217.
- 맥마이클(Phillip McMichael). 2015. 『거대한 역설』. 조효제 역. 교양인.
- 보나노와 부시(Alessandro Bonanno and Lawrence Busch). 2015. 『세계의 농업과 먹거리의 정치경제학』. 윤병선의 역. 따비.
- 염재호. 1999. “어느 사회학자의 역사연구.” 『사회비평』 20: 167-174.
- 오스터비르와 소넨펠드(Peter Osterveer and David A. Sonnenfeld). 2015. 『먹거리, 지구화 그리고 지속가능성』. 김철규외 역. 따비.
- 윤병선. 2015. 『농업과 먹거리의 정치경제학』. 울력.
- 이문웅, 김흥주. 1992. “최재석교수의 한국 농촌사회 연구.” 『농촌사회』 2: 11-35.
- 이해진·김철규. 2021. “농업·농촌·농민(농農)의 사회적 가치와 먹거리 시민권.” 『지역사회학』 22(3): 97-133.
- 정명채. 2017. “한국농촌사회학회의 출범과 최재석 교수.” 『농촌사회』 27(1). 219-245.
- 정혜경. 2015. 『밥의 인문학』. 따비.

- 정수복. 2021. 『역사사회학의 계보학』. 푸른역사.
- 기념 좌담. 2010. “농촌사회 창간 20주년 기념 좌담.” 『농촌사회』 20(2): 29-44.
- 캐롤란(Michael Carlolan). 2013. 『먹거리와 농업의 사회학』. 김철규외 역. 따비.
- 파이퍼(Dale A. Peiffer) 『식유식량의 종언』. 김철규·윤병선 역.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 최재석. 1965.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 최재석. 1966. 『한국가족연구』.
- 최재석. 1975. 『한국농촌사회연구』. 일지사.
- 최재석. 1979. 『제주도의 친족조직』.
- 최재석. 1983.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일지사.
- 최재석. 1988. 『한국농촌사회변동연구』. 일지사.
- 최재석. 1990. 『백제의 야마토왜와 일본화과정』
- 최재석. 1991. “창간사.” 『농촌사회』 창간호: 3-4.
- 최재석. 1993. 『통일신라·발해와 일본의 관계』.
- 최재석. 2001. 『고대한일관계와 일본서기』.
- 최재석. 2009. 『한국사회사의 탐구』.
- 최재석. 2012. 『일본서기의 사실기사와 왜곡기사』.
- 최재석. 2015. 『역경의 행운』. 만보당.
- Yoon, Jeong-Ro. 1997. “In Search of Identity in Korean Sociology.” *Contemporary Sociology* 26(3): 308-310.

The Tradition and Expansion of Jae Seok Choi's Rural Sociology

Chul-Kyoo Kim

Department of Sociology, Korea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carry out a sociological analysis of Jae Seok Choi's rural sociology. I analyze the features, values, and limitations of Choi's research on rural Korea as well as his contribution to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Society. In addition, I have explored how Choi has contributed to the academic and institutional expansion of Korean rural sociology by younger generation including Choi's former students. Choi's research on rural society is characterized by academic rigor and empirical analysis of Korean rural villages, or Jayon-burak, while his way of educating graduate students was based on apprenticeship. The seeds that Choi had planted have grown into fairly big trees through Choi's former students and within the organization of Korean Rural Sociological Society. Not only Choi's very few number of graduate students but also other former students who have been influenced by Choi have been collaborating together in the field of rural sociology in Korea. Important result of this collaboration has been expanding the realm of rural sociology to issues of food and sustainability. In addition, younger researchers have directly dealt with the issue of rural crisis by bringing in theories such food regime perspective and commodity systems analysis. More over, Choi's next generation of researchers and their students have been quite active in making voices and changes in rural issues and policies unlike their teacher Choi. While Choi has passed away and even Choi's first generation students are now getting old, the second generation students of Choi are active in the field of rural sociology.

Key Words: Jae Seok Choi, rural sociology, food and sustainability, young rural researchers

박근혜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혁에 관한 연구: 정당과 거부권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 원 섭**

요 약

이글의 목적은 박근혜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의 성격과 개혁을 가능하게 한 정치적 요소를 밝히는 것이다. 입법 과정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은, 비록 제한적이지만, 복지확대를 지향한 개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보수 정부의 확대개혁을 가능하게 요소는 우선 한국 보수정당의 복지이념에서 찾을 수 있다. 보수정당은 잔여적 복지이념인 자생복지와 생존보장 모델을 발전시켰으며, 이 모델은 공공부조제도의 확대에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보수 정부의 복지개혁은 유리한 정치제도적 조건에 의해 성공할 수 있었다. 체벨리스의 거부권자의 세 가지 요소인 거부권자의 수, 거부권자 간 거리, 거부권자 내부의 응집성 모든 측면이 정책변화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거부권자였던 야당은 복지확대를 억제하기보다는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론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 복지개혁이 당파성이론과 거부권자모델의 결합으로 더욱 잘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당파성이론, 거부권자모델, 개별급여체계, 박근혜정부, 복지개혁

* 이연구는 2023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I. 서론

한국 복지국가가는 오랫동안 저발전한 상태였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한국의 복지제도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복지국가의 급속한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유력한 연구는 민주화 이후 변화된 제도적 환경 속에서 행위자들의 역할에 주목한다. 이에 따르면 복지확대는 김대중정부 이후 중도좌파 노선이 강화된 민주당계열 정당¹⁾, 새롭게 등장한 진보적 시민운동, 그리고 노동운동의 연합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이들 연구는 김대중정부를 역사적 분기점으로 삼아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전환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김대중정부 이후 한국의 복지정책의 압축적인 성장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이혜경, 1993; 김원섭, 2008). 하지만 이들 연구는 주로 민주당계열 정부의 복지정책에 집중하여 보수 정부의 복지정책 특히 복지확대를 설명하는 것에 무력하다는 문제가 있다. 보수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노동배제적 및 분할적 복지라고 평가하거나(주은선, 2014), 심지어 실제로는 복지축소로 귀결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이상이, 2014). 하지만, 복지제도의 확대는 중도좌파성향의 민주당계열 정부뿐 아니라 보수성향의 새누리당계열 정부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추진되었다. 더구나, 한국은 보수 정부가 더 자주 집권한다. 이에 따라, 보수 정부의 복지정책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한 복지확대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민주화 이후, 보수 정부 중 복지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박근혜 정부이다. 박근혜정부는 복지를 전면에 내세운 최초의 보수 정부였다. 또한, 박근혜정부는 핵심공약이었던 기초연금제도 도입,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무상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중 상당 부분을 실행하였다. 그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은 박근혜정부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맞춤형 복지의

1) 한국의 정당은 자주 명칭을 변경하여 제도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보수정당과 자유주의 내지는 중도좌파성향 정당의 양당 구도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거대 정당을 민주당계열과 새누리당계열 정당으로 구분한다.

핵심 개혁이었다(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나아가, 공공부조 제도는 복지지출에서 비중은 크지 않으나 규범적 측면에서 최저생계보장이라는 복지국가의 핵심 목표를 보여주는 정책이다. 따라서, 정부의 복지개혁 성격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대상이 된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의 연구 질문은 보수주의적 박근혜정부의 복지개혁 성격은 무엇인가? 그리고 개혁이 성공한 요인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이다.

다음 장은 한국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당파성 이론(Partisan Theory)과 거부권자 모델(Veto Player Model)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개혁의 이념적 기반으로써 한국 보수 정당의 복지이념을 구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과정과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4장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거부권자 모델을 사용하여 개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 제도적 요인을 확인한다.

II. 이론적 논의: 기존 연구 검토와 당파성 이론 및 거부권자 모델

한국 복지정책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 중 가장 유력한 접근은 복지동맹론이다(이혜경, 1993; Kim, 2008; 안병영, 2000). 이 이론은 우선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전제한다. 이들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한국은 5대 사회보험을 전부 도입하고 법적으로는 보편적인 적용범위를 달성하였다. 또한, 보육 정책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한국 복지 지출의 수준은 아직은 낮지만, 그 증가속도는 매우 빠르다. 이 접근은 복지정책이 경제발전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권으로서 사회발전의 핵심 원칙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 이 접근에 따르면, 이러한 발전의 초석은 정치적 민주화이다. 민주화는 억압적 국가 기제를 해체하고, 이후 변화된 환경에서 성장하고 발전한 행위자들 특히 진보적 정당, 시민사회운동, 노동운동의 친복지연합의 형성을 추동하였다.

또 다른 이론적 접근은 제도적 권력자원론이다. 이 접근은 한국의 복지제도 발전에서 노동자의 계급적 힘과 조직적 상황을 강조한다. 양재진(Yang, 2013)은 노동조합의 힘이 약하고, 분산되어 한국을 자유주의적인 작은 복지국가로 발전시켰다고 본다. 그는 노동계급의 정치적 힘을 제약하는 내외적인 제도적 조건을 강조한다. 한국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조 원칙으로 조직되어 기업복지를 넘어서는 복지정책의 확대에는 이해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나아가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가 선거에서 정책 이슈의 중요성을 반감시키고, 이는 정당이 복지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지 않게 하였다.

양 접근 모두 복지정책의 발전을 행위자들이 제도적 제약 속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한 결과로 본다. 하지만 이들 이론 모두 복지정책의 발전을 진보 정치세력이나 노동조합의 역할을 중심으로 설명하려 한다. 따라서, 보수 정부에 의한 복지개혁의 설명에는 취약하다.

한국 복지국가 연구에서 보수 정부의 복지개혁은 주로 삭감개혁이나 규제 완화 개혁에 대한 것이었다(김순영 2011; 김원섭 외, 2019). 보수 정부가 복지정책을 확대하거나 공고화하는 개혁을 실시한 사례에 관한 연구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보수 정부의 복지개혁은 노동 배제적 또는 분할적 복지라고 규정되거나, 심지어 실제로는 복지축소로 귀결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평가되었다(주은선, 2014; 이상이, 2014). 하지만, 이들 연구는 정부의 초기 기간에 집중하여 복지개혁의 전체 그림을 보지 않고, 박근혜정부가 복지공약을 실행한 비율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이효빈, 2016).

이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박근혜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상단되는 주장이 있다. 한편으로 박근혜정부의 개혁이 공공부조 제도를 실제로 확대하고 개선했다고 보는 주장들이 있다(노대명 2015; 이승운과 박윤영 2016). 다른 한편으로 개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양적 또는 질적으로 후퇴시켰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김종수(2014)는 박근혜정부의 개혁이 공공부조 제도에서 정부의 행정재량권을 강화시켜 사회권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개혁의 성격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여, 개혁의 과정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과정에 대해서는 남은희 외(2021)의 연구가 있다. 남은희는 킹덤의 다중흐름모형을 사용하여 개혁과정을 분석했는데, 개혁의 성공은 개혁에 우호적인 정치적 세력의 집결이나 정책대안의 합의보다는 송파 세 자매 사건이라는 우발적이지만 사회적 파문이 큰 사건이 열어 준 기회의 창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이루세(2016)는 박근혜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의 정책과정 분석에서 정당을 고려하여 정치적 요소를 강조하는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는 정치행위자로 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고려하여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하지만, 정당 이외의 정치제도적인 요소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보수 정부의 복지개혁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고, 박근혜정부의 핵심 복지개혁의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일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복지정책의 발전에 관한 연구에서 보수 세력과 보수 정당의 역할은 더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 보수 정당이 중도좌파 정당보다 더 오래되고 강력한 집권세력이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집권한 8개의 정부 중 5개의 정부가 보수 정부이다. 나아가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김대중정부 이전에 도입되었다. 이 결과 한국 복지제도에는 보수 정부의 영향이 강하게 유지된다. 이에 반해, 복지제도의 연구에서 보수 정부 복지개혁의 과정과 결과에 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복지제도 연구의 이 결함을 채우고자 한다. 즉 이 연구는 박근혜정부의 공공부조 개혁을 대상으로 하여 그 결정 과정에 집중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 복지확대의 동력에 관한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제도적 행위자로서 정당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복지정책변화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먼저 당파성 이론을 연구대상인 공공부조 개혁사례에 적용하고자 한다. 당파성이론(Partisan theory)은 장기적인 사회적 균열구조를 정당형성의 사회경제적 근거로 삼는다(Hibbs, 1977; 1992). 즉 정당은 사회구조의 경제적, 종교적, 지역적 갈등구조를 반영하여 형성된 사회계급 및 그룹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 정당은 다양한 계급적 및 계층적 이익을 이념적, 정책적으로 대변한다. 이때 이념적 차별성은 전통적인 좌-우 스펙트럼에 근거하여 구분된다. 즉 좌파정부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이념과 정책을 지향하고, 우파정부는 자본가와 부유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추구하게 된다.

하지만, 당파성 이론은 설사 특정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자신들이 추구했던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거나, 간혹 반대되는 정책을 실행하는 사례들에 직면하게 된다. 즉 좌파정부가 고용촉진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대신, 물가억제를 위한 엄격한 통화정책을 시행하거나, 우파정부가 복지확대를 추구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Scharpf, 1987). 당파성 이론(Schmidt, 1996)은 정부의 이러한 무능력의 원인을 정부의 역량을 제한하는 제도적 조건에서 찾았다. 따라서, 이들은 정책변화에 미치는 정당의 역할은 정부를 둘러싼 여러 제도적 제약 요인을 제대로 파악할 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결정권을 제한하는 제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었지만, 가장 혁신적인 연구는 체벨리스의 거부권자 이론이다(Tsebelis, 1995; 2000). 거부권자 이론의 중요한 혁신은 제도분석에 통합적 시각을 제공한 것이다. 이전까지 제도주의 이론은 정부 유형(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국회 제도(단원제와 양원제), 정당제도(다당제와 양당제) 등 다양한 개별 제도요소에 따라 정치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의 정치제도는 지배적인 하나의 제도 요소보다는 다각적인 차원의 제도들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치제도에 관한 연구가 이 모든 차원을 다 분석에 포함하면, 분석이 복잡해져 의미있는 비교가 힘들어 진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거부권자 이론은 개별 정치제도의 유형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정치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Tsebelis, 2000: 441).

체벨리스(2009: 53)는 거부권자를 "제도의 변화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개별적 및 집단적 행위자"로 정의한다. 거부권자는 제도적 거부권자, 당파적 거부권자, 이익집단적 거부권자로 나누어질 수 있다. 제도적 거부권자가 법적인 그리고 공식적인 지위를 기반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반면, 당파적 거부권자는 정치적 당파성에 기반하여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익 집단적 거부권자는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한다.

체벨리스(Tsebelis, 1995)에 따르면, 정책변화의 가능성은 거부권자 수와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즉 정책변화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거부권자의 수, 거부권자 사이의 입장의 차이, 거부권자 내부의 응집성이다. 거부권자의 수는 정치제도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즉 정치제도가 대통령제이거나 의원내각제, 합의제 민주주의, 다수결 민주주의, 연립 정부나 단독 정부 등에 따라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부권자의 수가 달라진다. 정책의 안정성은 정부 형태, 정당제도와 같이 개별적 요소보다는 거부권자의 총합에 의해 결정된다. 즉 정치제도가 정부형태나 정당체계가 달라도 거부권자를 합한 수가 같다면 정책안정성의 가능성은 유사한 것이다. 다음으로, 거부권자 간의 거리는 거부권자들의 정책적 입장의 차이를 의미한다. 거부권자들의 정책의 차이가 클수록, 정책의 변화는 어려워진다. 정책에서 입장 차이는 당파적 거부권자에게 뚜렷이 나타난다. 또한, 거부권자의 응집력은 집단적 거부권자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의 일치성이다. 응집력은 당의 기강과 구분된다. 당의 기강은 당원들이 당론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만, 응집력은 당의 노선이 결정되기 이전에 형성된 내부구성원들의 이념적 일치성을 의미한다. 또한, 당의 응집력은 당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정책 선택의 폭이 좁아서 선택의 여지가 제한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

종합하면 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거부권자가 적을수록, 거부권자들의 입장 차이가 작을수록, 그리고 거부권자의 내적 응집성이 약할수록 커지게 된다.

III. 박근혜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1. 개혁 이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과 쟁점

한국의 공공부조 제도는 1961년 박정희 군사정부 하에서 제정된 생활보호

제도이다. 이 제도는 18세부터 65세까지 근로가능 인구를 배제하고 있었고, 급여는 현물급여 위주로 충분치 않았고, 수급 대상자도 많지 않았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빈곤이 급속도로 확산하자 진보적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공공부조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김대중정부는 1999년 새로운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아래의 측면에서 이전의 제도와는 뚜렷이 구분된다. 첫째, 최저생계의 보장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한다. 또한, 이를 실행할 절차는 법률적으로 명시되고 보장된다. 둘째, 최저생계를 실현할 제도적 장치로 최저생계비원칙을 도입한다. 이전의 제도에서 급여 수급과 급여 수준에 관한 결정은 개인적 필요가 아니라 정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었다. 반면, 새로운 제도는 최저생계의 계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별적 필요에 맞추어 급여를 지급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마련하였다. 또한,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급여가 인상되고, 급여의 종류도 확대되었다. 셋째, 새로운 제도는 수급자 범위를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여 보편적 최저보장을 시행하였다. 근로능력자인 경우에도 근로를 조건으로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Kim, 2008: 2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그동안 한국의 복지제도에서 거의 사문화되었던 최저생계비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구체화하여 사회적 시민권의 진전을 이루었다(Kim, 2008). 그런데도 제도의 실행 후 여러 정책적 문제들이 노출되었다. 이 중에서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핵심인 최저생계 보장과 급여보편성과 관련되어 지속해서 논란이 된 것은 아래와 같다.

먼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 중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처한 국민이 많았다. 이들은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아니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빈곤율이 높아도 수급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도 나타났다(이인제 2022:577). 2009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 약 515만 명 중 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175만 명으로 전체 빈곤

소득자의 34%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중 100만 명(19.4%)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여, 240만(46.6%)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였다(김미곤, 2010:6). 정부는 이후 이에 대응하여 부양 능력 판정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인상하였다(2006년 7월). 또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차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줄이고(2005년 7월), 2차로 부양의무자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을 제외하고(2007년 1월),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했으나 사각지대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이인제, 2020:576).

둘째, 통합급여원칙이 가지는 all or nothing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요건을 채운 빈곤자는 모든 종류의 공공부조 급여를 통합하여 수급하는 반면,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빈곤자는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한다.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체의 근로활동을 않은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탈빈곤과 근로의 유인을 저해하게 된다. 더구나, 통합급여는 제한된 수의 수급자만을 포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빈곤자들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사각지대의 확대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노대명 외 2006; 김미곤 2010).

이외에도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가치의 하락 문제가 나타났다. 수급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전물량방식으로 계측된다. 이는 먼저 최저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선정하고 이들의 시장가격의 합이 최저생계비로 결정된다. 이 방식에서 최저생계비의 수준은 물가수준에 연동되어 경제성장이 지속할 경우 비수급자의 소득인상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중위소득대비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1999년 당시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901,357원으로 도시근로자 4인 가구의 중위 경상소득 1,968만 원의 45.5%에 달하였다. 이후, 2007년에 계측된 최저생계비 1,232,569원은 도시근로자 4인 가구의 중위 경상소득의 35.8%로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김미곤, 2010:7). 그 결과 수급자의 범위가 제한되고 급여수준의 상대적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2. 보수 정당과 박근혜정부의 복지이념과 공공부조 정책의 목표

박근혜정부가 실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은 보수 정당의 이념에 근거해 실시되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수 정당의 복지이념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근혜정부가 기반을 둔 새누리당은 한나라당을 전신으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보수 정당인 신한국당과 자유주의 정당인 민주당의 통합정당이지만 민주화 이후 사회변화를 따라 당의 성격을 자유주의 정당으로 표방하였다. 이에 따라 창당 당시인 1997년 11월에 만들어진 당의 강령 전문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었다(나무위키). 동시에 한나라당의 강령에서는 경제정의, 복지사회, 기회의 균등, 쾌적한 환경 등 개혁적인 방향도 포함되어 개혁주의적 자유주의의 이념을 표방하였다. 특히 9개의 강령에서 네 번째 강령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복지강령이 당의 핵심 목표로 포함되었다.

한나라당은 이를 발전시켜 2006년 강령 개정 시 복지이념을 자생복지로 구체화하였다. 자생복지는 첫째, 전 국민이 아닌 ‘장애인을 비롯한 원천적인 약자와 시장경제에서 낙오된 취약·소외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자생복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경쟁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초안전망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셋째, 자생복지는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폴리TV, 2011.05.20.). 즉 이 모델에 따르면, 복지는 국민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의 기초보장을 목적으로 하되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생복지 모델은 전형적인 자유주의적 잔여적 복지모델로 한국 보수 정당의 복지모델로 정착했는데, 이 모델은 공공부조 제도의 확장적 적용을 그 특징으로 한다(Esping-Andersen, 1990).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던 2012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개정하였다.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수 정당의 이념을 계승하면서도 강령상의 기본정책을 전면 개편하였다(미래한국 2012.02.12.).

이중 복지목표는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 복지강령인 ‘더불어 행복한 복지국가’와 함께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가 10대 기본정책으로 포함되었는데, 이로써 복지와 고용, 양 목표가 당의 핵심 정책목표로 명시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당 강령은 행복한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평생 맞춤형 복지’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존중’을 선택하면서 ‘자생복지’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런 점에서 새누리당의 당강령은 약자를 위한 생존보장과 고용 확대를 결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폴리TV, 2012.01.25.).

새누리당의 복지와 고용정책의 방향은 18대 대통령선거의 박근혜후보자의 선거공약에도 반영되었다. 선거공약은 10대 핵심공약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가계부담 덜기(1), 국가책임 보육(2), 교육비 걱정 덜기(3),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4),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5), 근로자 일자리 지키기(6), 근로자의 삶의 질 올리기(7) 등 대부분 정책이 복지와 고용에 관련된 정책이었다(새누리당, 2012).

집권 후 박근혜정부는 복지와 고용중심 국정운영의 방향을 유지하였다.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세 가지가 복지와 고용 관련 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였다. 다른 한편으로 박근혜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확대를 추구한다(폴리TV, 2012.01.25.). 복지목표인 맞춤형 고용·복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네 가지의 전략을 통해 구현되었다. 그중 앞의 세 가지 전략이 모두 공공부조 제도의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었다(제18대대통령인수직위원회, 2013). 이런 맥락에서 공공부조 제도 개선은 복지개혁의 핵심이었다.

박근혜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 공약에서 발표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42.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으로 재정리되었다(새누리당, 2012;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71). 개혁은 다각적인 방향을 추구하였다. 개혁의 주된 목적이 수급자의 탈수급과 근로유인강화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대선공약집에서 새누리당은 기존의 통합급여체계는 탈수급시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였다(새누리당, 2012:82). 하지만,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기준의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등의 정책도 주요 정책으로 포함되었다(새누리당, 2012: 196-198).

이런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정책은 선거를 위해 고안되었지만, 근로유인과 탈수급유인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강령인 복지와 고용 중심 정책의 방향과 일치하고, 공공부조 정책의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정당의 복지이념인 '생존보장'에 기반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3. 박근혜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과정 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의 과정은 개정법의 입법화 과정을 통해 분석될 수 있다. 개정법의 입법화 과정은 3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에는 18대 대통령선거 전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가 공론화되고 개편 방향이 제시되었다. 두 번째 시기에는 정부와 여당에서 개정안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마지막 시기에는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논의가 재점화되고 논쟁과 협의를 거쳐 개정법안이 통과되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의 공론화와 개편 방향 제시: 2012년 6월 ~ 2013년 2월 2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이었다. 주요 당의 후보들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관한 논의는 대통령선거 전에 시작되었다. 주요 쟁점은 급여 사각지대의 문제와 근로유인의 문제였다.

우선 급여 사각지대 문제는 빈곤 문제의 추세와 관련이 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빈곤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2000년 이후 빈곤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2년 빈곤율은 12.1%로 1999년의 빈곤율인 11.4%보다 높은 수준이었다(노대명, 2019). 빈곤의 악화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키웠고, 넓은 급여 사각지대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급여체계의 소위 all or nothing 급여 지급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다수 전문가가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급여종류별로 수급요건을 달리하는 소위 개별급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후보는 개별급여체계의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공약하였다(새누리당, 2012). 개편의 핵심은 근로의욕 저하와 탈수급 회피 방지를 위해 통합급여방식을 맞춤형 급여체제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박근혜후보는 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빈곤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중위소득 50%로 상향하고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소득분배상황을 반영하는 상대빈곤선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공약에 포함되었다.

이에 반해, 문재인후보는 사각지대 해결을 주된 목표로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개선하고자 했기 때문에, 공약은 간략했고, 전체 복지공약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의 중요성도 크지 않았다. 문후보는 부양의무자 범위를 제한하고 부양 능력 기준을 완화할 것을 공약하였다. 또한, 그는 개별급여로의 전환 없이도 생계급여 외의 급여(의료, 주거, 교육, 자활)를 차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함으로써 수급자의 개별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민주통합당, 2012).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공약의 중요성은 재확인되었고, 핵심 내용은 국정 목표로 구체화되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의 제출과 협의 과정: 2013년 3월 ~ 2014년 2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의 두 번째 시기(2013년 3월 ~ 2014년 2월)는 정부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에 의해 정책 대안이 구체화하고, 이에 대해 논쟁이 벌어진 시기이다. 그리고, 정책대안이 개정안으로 만들어져서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체제로 재편하는 것이 국정목표로 설정된 후, 보건복지부는 본격적으로 정책대안을 수립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157). 우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하였다. 보사연 연구팀이 인수위 안에서 제시된 개별급여체제를 정당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노대명 외, 2013). 2013년 6월 27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연구결과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토연구원, 2013). 첫째, 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와 빈곤 함정 문제에 있다. 둘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급여체제를 개별급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되던 급여체제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개별급여화한다. 또한, 개별급여체제는 급여대상자의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급여기준선을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의 상대기준선을 사용하는데, 급여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이때, 수급자 선별을 위한 소득 기준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주거급여는 45%,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교육급여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다른 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위소득 수준 이상으로 상향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급여개편이 총수급가구를 83만에서 130만~150만으로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이를 위해 6.4~6.7조의 추가적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2013: 1). 정부는 2013년 5월 14일 이 연구보고서의 핵심 내용인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환, 그리고 부양의무자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

보장 등 개편 방향>을 제1차 사회보장심의회위원회에서 발표하였다.

새누리당의 보건복지소위 간사인 유재중의원은 2014년 5월 24일 정부의 개편안을 반영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논의의 장은 국회로 옮겨졌다. 이 법안은 통합급여체계를 개별급여체제로 전환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수급자 선별기준과 급여 수준이 급여별로 다르게 규정하였다. 또한, 각 급여별 책임 부처도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다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소관 부처별로 주택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과 같은 개별법으로 규제하려 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생계급여를 포함한 급여지급에서 수급권 범위와 급여 수준의 결정을 이제는 최저생계비를 기반으로 한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2013).

개정안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시민단체의 비판은 주로 공공부조의 권리성 약화를 겨냥하였다(참여연대, 2013.06.09.). 첫째, 이들은 법적 최저생계비가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는 핵심요소이며, 이의 무력화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행정부의 재량급여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둘째,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범위와 급여 수준과 같은 핵심 원칙들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되는 것은 공공부조의 권리성과 보충급여 원칙을 폐기하는 것으로 보았다. 셋째, 이들은 또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권한 축소도 비판하였다. 이들은 이 위원회가 전문가와 공익대표의 참여로 제도적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적 도구라고 보고, 위원회의 권한 축소로 공공부조 급여에 대한 주요 결정이 행정 편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았다.

야당도 개정법을 비판하였으나 그 중점은 개별급여체제의 전면적 거부는 아니었다. 상임위의 토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다수 의원이 개별급여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 비판은 주로 개별급여체제의 실행방법에 있었다. “지금 물론 개별급여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느냐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남인순 보건복지위 위원) (국회사무처, 2013).

야당의 비판은 아래와 같은 부분에 집중되었다. 첫째, 수급자의 선정기준이 법률로 명시되지 않아 행정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다. 둘째, 개별급여들이 국토부와 교육부와 같은 다른 부처에서 실행될 경우 통합적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셋째, 급여체제 운영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이 약화되고 대신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면, 행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이다. 넷째, 제도 전환 시기에 불이익을 받는 수급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국회사무처, 2013).

보건복지소위의 심의과정에서 야당은 개정안의 내용과 형식이 부실함을 지적하였고, 정부도 이들 비판을 수용하고 개선된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법 통과는 보류되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입법경쟁과 개정 법안의 국회 통과: 2014년 2월 ~ 2014년 11월

마지막 시기(2014년 2월 ~ 2014년 11월)에는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공공부조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어나고, 이를 반영하여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해 입법 경쟁을 벌이고, 협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장기간 보류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법의 논의를 재점화시킨 것은 2014년 2월에 송파에서 발생한 ‘세 모녀’ 사건이었었다. 세 모녀가 생활고로 자살에 이를 동안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은 빈곤 문제 해결에서 복지제도의 결합을 드러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관한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세 모녀 사건은 사회보장의 최후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논의지형도 변화시켰다. 한편으로 야당은 이번 사건을 복지를 강조하던 박근혜정부의 실패로 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제출을 통해 제도적 개선을 시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 여당은 국민의 비판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응하였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으로 2014년 3월 16일 창당한 새천년민주당은 당을 '민생중심정당'으로 선언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세모녀법을 추진하였다. 새로운 정당의 제1호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이었다(YTN, 2014.04.04).²⁾

입법안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여당의 개편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부분적 수정을 시도하였다(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2015). 야당의 개정 방향은 아래의 세 가지였다. 첫째, 제도 개편의 주요 방향은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였다. 19대 국회에서 40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그중 10개가 부양의무자 요건의 완화에 대한 것이었고 대부분 새천년민주연합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양승광, 2015: 8). 2014년 3월 28일 당 대표인 안철수위원을 대표로 129명의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법 개정법은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즉 직계 혈족의 배우자(사위와 며느리)를 부양의무에서 면제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법률로 명시한다. 김용익의원 대표발의안(2014.03.28.)과 김진표의원 대표발의안(2014.05.09.)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개혁의 둘째 방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 절차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2014년 3월 28일 최동익의원 외 129인이 발의한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그 대표적인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서비스전달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간의 협력과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서비스 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고절차를 개선하고, 신고된 대상자에 대한 조사, 상당, 안내, 의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이언주위원의 대표발의안(2014년 5월 16일)과 이상직의원

2) 세 모녀법은 김한길의원이 대표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당 대표였던 안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 최동익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수급자의 발굴 및 지원법 제정안(2014.03.28.)으로 구성된다.

공동발의안(2014. 4. 7), 양승조의원 대표발의안(2014.09.15.)도 급여신청과 급여지급 등 행정절차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승기, 2015).

개혁의 세 번째 방향은 수급자의 복지권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2014년 7월 18일 이목희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개별 급여체제로의 전환을 받아들여 중양생활보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또한, 2014년 강창일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은 수급권자가 아니지만, 특례로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를 행정 재량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였다.

다른 한편, 정부와 여당도 세 모자 사건을 개혁의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여당은 이를 위해 개정안의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여당은 2013년 5월에 발의되었던 개정안을 2013년 6월 임시국회에 다시 상정하였고, 이후 2014년 2월과 3월에 다시 발의하였다. 여당과 야당은 공식 및 비공식 협의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야당의 핵심 비판을 수용하였고, 이 결과 수정안을 12월 국회에 다시 제출하였다(국회사무처, 2014b; 임호근, 2014).

수정안에서 반영된 야당의 주요 요구는 아래와 같다. 우선, 여당은 권리성 침해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수용하였다. 야당은 개정안이 제도의 핵심 요소를 법률보다는 시행령에 위임하여 행정의 재량을 넓힌다고 비판하였다. 이 비판을 수용하여 수정안은 기준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하여 생계급여를 비롯한 개별 급여의 선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수정안은 부칙에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적용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수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한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도 상향되고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세대일 때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게 하였다. 나아가, 이 수정안은 야당의 주장대로 부양의무자 규정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서 명시하였다.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5호). 이외에도, 수정

안은 교육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를 폐지하고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발굴 체제의 구축을 명시하였다.

끝으로, 여당은 최저생계비 무력화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일부 수용하였다. 수정안은 이를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는 것으로 최저보장수준 개념을 도입하고, 이의 산정 절차를 법률로 명시하여 수급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의 기준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여지를 줄였다. 나아가, 수정안은 상대 빈곤 기준이 적정수준을 보장하고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욕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 2).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급여 수준과 포괄범위에 대한 평가가 시행되게 되었다(김문길, 2021).

수정안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2014년 12월 8일 여야는 합의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결과는 재석 205명 중 찬성 199명이었고, 반대 1인 기권 5인이었다. 기권은 대부분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에서 발생하였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3).³⁾ 이런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 정도는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다.

4. 박근혜정부 공공부조 제도 개혁에 관한 평가

개정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격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다는 것은 모든 연구가 동의한다. 하지만, 그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이 연구는 개정법이 실행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실시되기 때문에, 개정법이 어떤 정책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상에서는 개정안의 세 가지 주요 정책 조치의 효과를 복지권의 측면에서 파악함으로써 제도 변화의 특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개정안의 주요 정책 조치는 개별급여체계의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무력화로 볼 수 있다. 또한,

3)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기권이 2표 발생하였으나 1표는 기표 실수, 다른 표는 김기준의원이었다. 김기준의원, 통진당, 정의당의원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철폐를 요구하면서 개정안에 반대하였다

복지권의 측정은 법제화 정도와 급여의 질적 측면(수급자 범위와 급여 수준)으로 측정한다(Kim, 2008).

먼저 개별급여체계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여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조치였다. 개별급여체계는 탈수급의 동기를 강화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도 부분적으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이를 위해, 수급자 선정기준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의료급여는 40%로 개별적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급여의 관할권도 주거급여는 국토해양부,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다르게 배정되었다(국회사무처, 2014a).

개별급여체계 전환에서 가장 큰 논란은 법제화였다. 기존 수급자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의 설정이 법적 절차에 의해 통합적으로 보장된 것에 반해, 개별급여별 선정기준은 애초에는 시행령으로 규정되게 되어있었다. 하지만, 이후 여당이 야당의 비판을 수용하여 개별급여의 선정기준을 모두 구체적 수치를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국회사무처, 2014a).

다음으로는 급여의 질적 측면은 수급자의 수로 측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개별급여체제로의 전환으로 수급자의 수는 늘어났다(보건복지부 2020:260). 개편 전 수급자 수는 2009년 156만 명에서 2014년 132만 명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다. 하지만, 개편 후인 2015년 수급자 수는 164만 명으로 반등하였다. 총인구 중 수급자 수의 비중도 2009년 3.22%에서 2014년 2.6%로 하락하다가 2015년 3.2%로 다시 회복하였다.

마지막으로 수급자 수의 증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지출증가를 동반하였다(보건복지부, 2020:260). 개편 후인 2015년 지출의 연증가율은 7.3%, 2016년은 6.9%로 개편 이전인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 증가율인 4.3%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국민총생산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지출은 0.6%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런 점에서 지출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넘어서는 수준은 아니었다.

또한, 개별급여의 확대가 기존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축소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는 실현되지 않았다. 전체 지출에서 생계급여 지출의 비중은

2014년 28.6%에서 2015년 28.5%로 0.1%p 감소하였지만, 2016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0년에는 기존의 31.1%를 회복하였다. 의료급여의 경우 개편 후 그 비중이 50.2%에서 47.8%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2019년에 50.3%를 회복하였다(보건복지부, 2020:267).

이런 점에서 개별급여체제로의 전환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 법제화의 수준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실행되었고, 그 결과 수급자의 수는 이전의 수를 회복하였다. 또한, 제한적 수준이지만 지출 규모는 증가하였고, 지출구조도 단기적으로만 변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의 두 번째 정책 조치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였다. 우선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였지만, 법 개정으로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었고, 이것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달리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조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 단서)으로 명시되었다.

나아가, 개별급여체제 도입 후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급여별로 설정될 수 있게 되면서, 기준의 완화도 개별급여의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제도개편으로 당장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이후 2018년에는 주거급여의 기준도 폐지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는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개편 이후 부양의무자 가구 중에서 부양 능력 없음 판정을 증가하였다. 2014년 부양의무자 가구 137만 중 부양 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가구는 86.2%(118만 가구)였으나 2015년에는 94.6%(144만 가구)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도 94%(145만 가구)를 유지하였다(보건복지부, 2020, 180).

이 결과 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의 수도 줄어들었다. 제도개편 이전 2014년 기준 4차 실태조사에서 비수급 빈곤층(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선정소득인 기준 중위소득의 40%보다 낮지만, 수급하지 못하는 빈곤층)은 118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개편 이후인 2015년 기준 5차 실태조사에서 그 규모는 93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적 완화되면서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2018년에는 73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김문길, 2021: 11). 이 조치들이 급여 사각지대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각지대의 완전한 해결과는 거리가 있었다. 제도개편에서 야당의 요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더 폭넓게 추진하게 하였다.

마지막 정책 조치는 최저생계비의 무력화이다. 제도개편으로 최저생계비는 유지되었으나 수급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적정성 평가의 기준으로만 사용된다. 여기서 적정성 평가는 최저생계비 대신 사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유지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 4). 개정법은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개념을 도입하였다. 최저보장수준은 개별급여별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을 한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된다. 이때,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의 자료에 근거해 결정되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6조 2).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이 되는 상대적 빈곤선은 빈곤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수일 뿐 최저생활의 욕구와는 직접적 관련은 없기 때문에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으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법적 절차에 따라 산출된 최저생계비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반해, 최저보장수준은 최저생활과 관련이 없이 행정적인 기준으로 결정되어 공공부조의 소득기준을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문진영, 2015).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응하여, 최저보장수준이 도입되고, 이의 결정에 대한 법적 절차는 상당 부분 보완되었다. 그리고, 개별급여별 수급자 선별 기준소득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행정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최저생활보장선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 기준을 제시할 위험은 법적으로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⁴⁾.

이런 점에서, 제도개편으로 설정된 선정기준소득과 기존 최저생계비를 기준

4) 예를 들면 경제가 극도로 나빠지면 기준 중위소득도 같이 내려가 최저보장수준이 최저생활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급여의 인하와 수급자 범위의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최악의 경우가 일어날 경우는 많지 않다.

으로 한 선정기준소득을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에 따르면(이승윤과 김윤영, 2016: 114), 제도개편 후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소득은 하락하지는 않았다. 개편 전인 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 1인 선정기준소득은 389,285원, 4인 기준으로는 1,052,122원이었다. 2015년 중위소득 28%로 개편 후 1인 기준 437,454원, 4인 기준 1,182,309원으로 선정기준소득은 인상되었다.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소득도 대폭 인상되었다. 2015년 개편 전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소득은 1인 기준 110,003원, 4인 기준 297,306원으로 중위소득의 7%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개편 후 선정기준소득이 중위소득의 43%로 설정됨으로써 1인 기준 671,805원, 4인 기준 1,815,689원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이런 점에서 개별급여체제로의 전환은 선정기준소득을 상승시켜 수급자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미약하나마 인상하는 효과가 예상되었다.

결론적으로 제도개편의 세 가지 핵심 조치인 개별급여체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무력화를 수급권의 측면에서 검토해보면, 이 조치들은 대부분 법적인 규정으로 명시되어 개편 전보다 행정재량권을 지나치게 확대하였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애초 행정 재량을 확대하려는 여당의 시도는 야당의 요구로 대부분 취소되었다. 급여체계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개선되었지만, 그 정도는 제한적이었다. 여기에서도 야당의 요구는 제도개편의 효과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IV.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의 정치제도적 조건: 거부권자 모델

박근혜정부는 보수 정부였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법적 및 제도적으로 제한된 수준이지만 개선하였다. 보수 정부의 2014년 복지개혁은 경제위기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압력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 2010년 이후 한국은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거의 회복하였고, 경제성장률도 2010년 6.8%, 2011년에 3.7%, 2013년에 3.2% 등으로 나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2010년 3.7%, 2014년 3.5%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또한,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사회적 이슈가 개편의 계기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기에 기초연금제도 도입, 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복지 개혁이 이러한 사회적 이슈 없이도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남은희 외, 2016 참고).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보수 정부의 복지확대 개혁을 가능하게 한 요인을 정치제도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이 장에서는 2014년 박근혜정부 복지개혁의 정치적 조건을 분석하기 위해 체벨리스의 거부권자 모델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정책변화의 조건을 규명하기 위해 거부권자의 수, 거부권자의 거리, 거부권자의 내부 응집성 세 가지 요소를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의 거부권자

한국은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도적 거부권자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 두 지점이다. 국회는 당파적 거부권자인 여당과 야당으로 구성된다. 즉 한국의 거부권자는 대통령, 여당, 야당 세 개가 된다. 한국의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국회의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어서 강한 거부권자가 된다. 또한, 대통령제하에서 정부와 분리된 여당도 거부권자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야당의 경우 거부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입법 시도를 국회에서 독자적으로 무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선거와 같은 시기에 실시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152석을 차지하여 전체 의석 300의 과반수를 달성하였다(위키백과). 이후 2013년 4월과 10월, 2014년 7월과 8월 여러 번의 보궐선거를 거쳐, 2014년 4/4분기 당시 여당은 158석을 차지하여 안정적인 과반수를 유지하였다. 이에 비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4/4분기 당시 130석을 차지하여 의석의 43.6%를 차지하였다(NSP통신, 2024.02.13.). 이 결과 개혁 당시 여당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여 단점 정부를 형성하고 있었다. 단점 정부일 경우에는 야당은 거부권자의 지위를 얻기 어렵다(문우진, 2012). 하지만, 18대 국회의원 1212년 5월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이 상황을 변화시켰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 의안처리와 소수당의 물리적 저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의장이 행사하는 직권상정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의 설정을 통해 가증정족수를 도입한 것이었다⁵⁾. 이에 따라, 다수당일지라도 재적의원 5분의 3을 확보하지 못하면, 소수당의 협조없이 법안처리가 쉽지 않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현출(2014)은 국회선진화법이 협의와 다수결 간 갈등하에 있던 국회의 운영원리를 합의제로 전환시켰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국회선진화법 하에서는 단점 정부라도 야당의 협조가 법안 통과에 필요해 졌기 때문에 야당도 거부권자가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하는 능력이 강한 편이다(문우진, 2012:83). 또한, 당시 김무성대표와 이완구원내대표는 박근혜대통령의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실질적 거부권자는 대통령의 정부와 야당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거부권자 수의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의 조건은 정책안정성이 낮아 변화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둘러싼 거부권자의 거리

정책안정성을 판단하는 거부권자 모델의 다음 요소는 거부권자 간 정책적 입장의 차이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둘러싼 박근혜정부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와 여당 개혁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의 주요 문제로 논의되던 탈수급유인의 강화에 있었다. 개혁의 핵심 내용은 통합급여원칙을 개별급여 원칙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여당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주요 목표로 포함하였다. 또한, 개정안의 주요 정책원칙을 시행령에 유보한 것도 복지권과 수급권 약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보다는 행정 기술상의 고려에 기반한 것이었다.

5) 신속처리안건의 조항은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군사비상 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이다(국회법 84조1).

이에 비해, 새천년민주연합의 주요 관심은 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수급권을 확대하는 것에 있었다. 새천년민주연합은 세 모녀사건을 계기로 당의 입장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를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하였다. 동시에, 정부 개정안이 복지권을 약화시키고 행정 재량을 강화시켜 급여 수준과 수급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낼 수 있음을 비판하였다. 하지만, 개별급여체계 자체는 거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개별급여원칙이 제대로 설계된다면 차상위계층으로 급여를 확대하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개별급여로 간다고 했을 때 어쨌든 개별급여가 분명히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찬성을 했던 것 같아요”(국회 보건복지소위 위원 남인순)(국회사무처, 2013: 37).

개혁의 논의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양측의 차이는 보다 좁혀졌다. 여당은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법제화와 부양가족의무자 기준 완화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였다. 그리고 제도개편 이후 급여하락을 방지하는 경과조치를 부칙에서 명시하였다.⁶⁾ 그 결과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개편의 핵심 원칙들이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명시되었고,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가 더욱 진전된 방식으로 포함되었다.

이런 점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는 근본적인 정책원칙이 아니라 실행방법에 있었고, 이마저도 상당 부분 논의과정에서 수용되었다. 거부권자들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정책안정성을 낮추어 개혁의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의 거부권자들 내부 응집성

정책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마지막 요소는 집단적 거부권자들이 공유하는 핵심 내용의 범위에 있다. 이 범위가 커질수록 입장의 유연성이 커지고 이에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법률 제12933호, 2014.12.30.>, 5조에서 종전 수급자의 현금급여액이 개정안을 적용한 후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한 금액을 보전하여 지급할 것을 명시한다.

따라 협상의 여지가 넓어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안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은 거의 일치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안은 여러 목적을 추구하였다. 이에 따라, 개혁안이 포함할 수 있는 입장의 폭이 넓었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이에 비해, 야당의 내부 응집성은 여당보다 낮았다. 세 모녀 사건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완화하는 입법 활동에 주력하였다. 동시에, 정부의 개별급여체계 개혁안에 대해서는 전면적 거부보다는 보완조치를 주장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국회 외부의 시민단체들은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정부의 개혁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13). 이들은 개정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질적 부분인 최저생계비를 무력화시켜 수급권을 약화시킬 것이라 비판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는 수급권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며 정해진 법적 절차에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최저생계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부의 예산 능력에 좌우되는 “예산맞춤형” 시혜성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2014).

이들 시민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정책 수립에서 시민단체와 협업을 했던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 중에서도 시민단체와 연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들과 주장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복지소위의 김용익의원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최저생계비 무력화를 비판하였다 “기초법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권리로 보장한다는 것이고 그 개념이 최저생계비에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중위소득을 도입해 상대적 개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 중략. 이는 개념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법 제정 취지에도 벗어난다”(비마이니, 2014.02.13.).

한국의 정당은 정당 기율이 강력하여 개별의원은 당론을 따라 표결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전진영, 2010).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에서 정부·여당의 입장은 야당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만큼 다각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야당도 또한 정당 외부의 정책적 영향에 자유롭지는 않았다. 이런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시 거부권자의 응집성은 아주 높았다고 할 수는 없다. 즉 거부권자의 응집성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변화의 가능성은 열려있었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이 글은 박근혜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의 성격과 개혁을 가능하게 한 정치적 요소를 밝히고자 하였다. 개정법의 입법 과정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은, 비록 제한적이지만, 복지확대를 지향한 개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개혁의 주요 정책 조치였던 개별급여체계의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무력화는 법제화 측면에서 행정 재량의 급격한 확대를 가져오지는 않았고, 급여체계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제도의 축소보다는 확대를 추구하였다.

보수 정부의 확대개혁을 가능하게 요소는 무엇보다 한국 보수 정당의 복지이념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 보수 정당은 자유주의 복지이념인 자생복지 모델을 발전시켰으며, 이 모델은 박근혜정부에 와서 취약계층을 위한 생존보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이 모델은 복지와 고용중심 정책의 핵심요소로 자리를 잡았다. 생존보장 모델은 복지정책에서 공공부조 정책의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개혁은 보수 정부의 핵심정책이 되었다.

보수 정부의 복지개혁은 또한 유리한 정치 제도적인 조건에 의해 성공할 수 있었다. 체벨리스의 거부권자의 세 가지 요소인 거부권자의 수, 거부권자 간 거리, 거부권자 내부의 응집성 모두 정책변화를 추진하기에 불리하지 않았다. 실질적 거부권자의 수는 정부 여당과 야당으로 매우 적었고, 그들 간의

입장 차이는 개별급여체계와 관련된 원칙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이를 실행하는 법제화 방법에 있었다. 또한, 의견이 불일치한 부분도 협의와 타협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 마지막으로 거부권자 내부의 응집력에서도 정부와 여당의 응집성은 아주 높지는 않았고, 야당의 응집력은 낮은 수준이었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거부권자였던 야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제화와 제도확대를 지지하였다. 이 때문에 거부권자인 야당은 정책변화를 제어하기보다는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런 점에서 연구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사례는 보수 정부 복지확대의 성공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 보수 정부가 복지확대 정책을 수행할 시, 거부권자인 진보 야당의 협조를 얻기 수월한 제도적 조건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보수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이다.

이론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 복지개혁이 당파성 이론과 거부권자 모델의 결합으로 보다 잘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정부의 당파성과 거부권자 간의 특정한 결합이 특정한 개혁 방향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Avdagic, 2013 참고). 예를 들면, 한국과 같이 진보 정당도 보수 정당도 주도권을 완전히 가지지 못한 환경에서 복지삭감 개혁은 진보 정부가 시도할 때 관철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복지확대 개혁은 진보 정부보다는 보수 정부가 추진할 때 성공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2023년 12월 6일 접수
2023년 12월 28일 수정 완료
2023년 12월 15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 강신욱. 2016. “기초생활보장 개편의 효과: 선정기준 변화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6(11): 20-31.
-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2014. “[공동성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은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매우 부적절.” 2014.12.10.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3 “의안검색-상세검색-제19대(2012-2016)”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검색일: 2023.10.01.)
- 국회사무처. 2013. 국회 제316회-보건복지소위 제1차회의록, 2013.06.17.
- 국회사무처. 2014a. 국회 제322회-보건복지소위 제2차회의록, 2014.02.18.
- 국회사무처. 2014b. 국회 제329회-보건복지소위 제11차회의록, 2014.12.04.
- 김문길. 20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 범위 평가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1(2): 6-17.
- 김미곤. 2010. “2010년 기초보장제도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159: 45-53.
- 김순영. 2011.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정책의 후퇴?” 「현대정치연구」 4(1): 127-152.
- 김종수. 2014. “현대사회의 빈곤층의 규범기준은 무엇인가?-기초생활보장수급권의 요건에 관한 법개정안 검토-”. 「법률가들에게 한국형 소득보장제도의 미래를 묻다」. 한국사회법학회 제6회 학술대회, 2014.10.24.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304호, 107-132.
- 김원섭. 2008. “참여정부에서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신자유주의 국가?” 「한국사회」9(1): 29-53.
- 김원섭·유진숙·전세훈. 2019. “이명박 정부의 노동개혁에 관한 연구: 비정규직보호법과 노동조합 관계법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3(1): 95-132.
- 남은희·박운영·김우현.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정 연구: 맞춤형급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2): 631-640.
- 노대명·신영석·이현주·이태진·박능후·선병돈·최승아·원일. 2006. “국민기

- 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체계 도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06-86
- 노대명·이현주·강신욱·김문길·신현웅·신화연·황덕순·홍경준·손병돈·장덕호·임완섭·이주미.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3-73.
- 노대명·강신욱·이현주·임완섭·김문길·우선희.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실행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5-19.
- 노대명. 2019.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제는 개편해야 한다, 현안과 정책 23,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https://www.good21.net/issuepaper/?q=YTox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ljt9&bmode=view&idx=1676053&t=board> (검색일: 2023.10.26.)
- 문우진. 2012. 한국 대통령 권한과 행정부 의제설정 및 입법결과, 거부권 행사자 이론. 한국정치학회보. 47(1): 75-101.
- 문진영. 2015. “빈곤선 측정방식에 대한 비교 연구.” 「비판사회정책」. 46: 202-236.
- 민주통합당. 2012.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 광장
- 보건복지부.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대현. 20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김승기. 20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보건복지위원회 2015. 11.
- 새누리당. 2012, 국민행복 10대 공약, 새누리당
- 안병영.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38(1): 1-50.
- 양승광. 20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와 부의 기피·거부.” 「사회보장법연구」 4(2): pp. 1-30
- 이루세. 2016. 「한국 보수주의정부의 복지개혁에 관한 연구, 박근혜정부 국민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논문.
- 이상이. 2014. “증세 없는 복지국가, 안녕들 하십니까 : 박근혜 정부의 조세 정책과 복지정책.” 「시민과 세계」 24(1): 84-98.
- 이승윤·박윤영. 2016. “박근혜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체계 개편 논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판사회정책」. 51: 92-132.
- 이인제·류진석·권문일·김진구. 2022. 「사회보장론」 나남.
- 이현출. 2014.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의 국회운영 평가.” 「현대정치연구」 7(2): 5-34
- 이혜경. 1996.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국가의 발달: 한국의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21: 162-191.
- 이효빈. 2016. “한국 민주주의 진단 -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에 따른 복지 정책 평가.” 「민중화기념사업회 연구소 학술행사 자료집」: 24-30.
- 임호근.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설명,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국민공청회, 2014.04.08. 국회의원회관 2층 제2 소회의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 전진영, 2010, 제 대18 국회 원내정당의 정당응집성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9(2): 119-139.
- 제18대대통령인수직위원회. 2013. 박근혜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 주은선. 2014. “변화하는 스웨덴 모델과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 「스칸 디나비아 연구」 15: 103-142.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5113)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보고서. (검색일: 2013.06.0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토연구원. 2013.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 개최. 보도참고자료. (검색일: 2013.06.27.)
- Avdazic, Sabina. 2013. “Partisanship, Political Constraints, and Employment Protection Reforms in an Era of Austerity.”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5(3): 431-455.

- Esping-Andersen, Goesta. 1990. The Three World of Welfare Capitalism.
- Hibbs, D. A, Jr. 1977. "Political Parties and Macroeconomic Polic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4): 1467-1487.
- Hibbs, D. A. Jr. 1992. "Partisan Theory after Fifteen Year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8(3): 361-373.
- Kim, Won Sub. 2008. "Die Entstehung neuer Wohlfahrtsstaaten und globale Policy Diffusion -das Beispiel Suedkorea". *Zeitschrift fuer Soziologie* 37: 186-205
- Scharpf, Fritz. 1987. Sozialdemokratische Krisenpolitik in Euroa. Frankfurt/Main: Campus.
- Schmidt, M. G. 1996. "When Parties Matter: A Review of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Partisan Influence on Public Polic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0(2): 155-183.
- Tsebelis, George. 1995. "Decision Making in Political Systems: Veto players in Presidentialism, Parliamentarism, Multicameralism, and Multipartyism."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5: 289-326.
- Tsebelis, George. 2000. "Veto Players and Institutional Analysis" *Governance: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and Administration* 13(4): 441-474.
- Yang, Jae-jin. 2013. Parochial Welfare Politics and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Comparative Politics* 45(4): 457-475.

신문보도

- 미래한국. 2012.02.12. 새누리당 강령, 어떻게 바뀌었나,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6>, (검색일: 2023.10.02.)
- 비마이너. 2014.02.13. "기초법 개정안, 탈빈곤 효과 없다" 지적,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6464> (검색일: 2023.10.02.)
- 플리TV. 2011.05.20. 정태근, '새로운 한나라' 비난에 불났다... "좌고우면 않겠다",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835>,
(검색일: 2023.10.01.)

폴리TV. 2012.01.25. 한나라, ‘좌클릭’ 당 정강·정책, 민생·복지 강화키로,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224>,
(검색일: 2023.10.11.)

NSP통신, 2024.02.13. <https://www.nspna.com/news/?mode=view&newsid=114991>, (검색일: 2023.9.11.)

YTN, 2014.04.04. 안철수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민생 해결” https://www.ytn.co.kr/_ln/0101_201404041005379902, (검색일: 2023.10.12.)

인터넷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 (검색일:
2023.10.01.)

나무위키, 한나라당, <https://namu.wiki/w/%ED%95%9C%EB%82%98%EB%9D%BC%EB%8B%B9#s-3.2>, (검색일: 2023.10.11.)

위키백과, 대한민국 제19대 국회,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C19%EB%8C%80_%EA%B5%AD%ED%9A%8C, (검색일: 2023.10.11.)

A study on the reform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under Park Geun-hye government: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and veto players

Kim, Won Sub
Korea University

Abstract

In this study, we evaluate the reform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implemented by the Park Geun-hye government, as well as th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that made it possibl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egislative process, the 2014 reform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can be considered a welfare expansion despite its modest nature. The welfare ideology of Korea's conservative party provided the foundation for extensive reform. A model of self-reliance welfare and existence guarantee was developed by the conservatives, which laid the foundation for the reform of a public assistance system. It was the favorable political-institutional conditions that enabled welfare reform to succeed. There were favorable conditions for policy change in all three elements of Tsebelis's veto player model: the number of veto players, the distance between veto players, and the cohesion within each veto player. Moreover, the opposition party, which had the veto power in this process, actually promoted rather than suppressed welfare expansion. It suggests that Korean welfare reform can be better understood using partisan theory and the veto player model.

Key Words: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partisan theory, veto player theory, Park Geun-hye government, welfare reform

코로나19와 가치 변화: ‘안전’을 중심으로*

임 준 경** · 김 상 학***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안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의 가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전국 대표 표본 1,5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2000년대 이후 사회과학 분야에서 수행된 안전 관련 경험적 연구를 검토하였고 한계와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안전을 포함한 가치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슈워츠의 가치 연구가 갖는 특징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가 경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팬데믹을 거치면서 안전 가치의 상대적 중요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특정 가치 항목들과의 인접성도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이나 감염병 확진 여부, 증상의 경중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난 가치 변화일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치 변화가 갖는 함의를 정리하고 관련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코로나19, 가치, 안전

I. 서론

가치란 무엇을 더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의미한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

* 이 성과는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8R1A5A7025522).

** 제1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jun418@kihasa.re.kr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sanghag@hanyang.ac.kr

들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 지향에 따라 사안의 우선 순위를 판단하고 선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즉, 행위의 일반적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는 인간의 행위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과학 분야의 보편적 관심 대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가치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가치들이 한 개인 안에 공존하지만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서열화된 구조를 이루며(Schwartz and Bilsky, 1987), 생애과정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 구조가 유지되지만, 거시적 사회 변동과 맞물린 적응의 결과로 변할 수 있다는(Schwartz and Bardi, 1997) 점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은 연구자라면, 큰 규모의 사회 변화가 사람들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언급에 대해,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다음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의 가치에 변화를 주었을까? 변화가 생겼다면, 어떤 양상의 변화일까?’ 기존 문헌에서 가치 차이가 주로 거시적 수준의 경제적, 정치적 차이와 연결되었다는(예컨대, Inglehart, 1997; Inglehart and Baker 2000) 점에서 코로나19의 구체적 영향력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최초 발생 이후부터, 2023년 5월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해제 이전까지, 전지구적 전염병으로 위세를 떨치며 수백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낳았고, 지속적인 의료,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사회,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로 인한 개인 가치의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논문이 출판되고 있지만, 이를 가치 변화와 연결하여 분석한 기존 연구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예외적으로, Bojanowska, Kaczmarek, Koscielniak, and Urbańska, 2021; Steinert, 2021 등) 팬데믹과 가치 변화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는 쉽지 않다. 다만, 코로나19가 평범한 개인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심리적 지향성을 강화시켰을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안전이라는 가치가 다른 가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가치로 변화

하였는가라는 경험적 검증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가치는 행위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특정한 가치 지향의 강조는 그에 어울리는 행위 유형을 강화시킨다는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사실 코로나19를 전후로 안전 가치의 중요도 변화를 살펴보려면 개인의 가치를 반복적으로 측정한 종단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한다면, 코로나19 이전에 안전을 포함한 여러 가치들이 어떤 구조로 어떻게 서열화되어 있었는지를 밝힌 기존 연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추가적으로, 만약 코로나19 이후의 조사가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를 제시한다면, 코로나19가 안전 가치를 변화시켰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대답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슈워츠의 가치 이론에 (Schwartz, 1992; 2012) 근거하여,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의 안전 가치 변화를 탐색하였다. 먼저 최근 20여 년 동안 사회과학 분야에서 수행된 안전 관련 연구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이어서 슈워츠 이론을 안전 가치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경험적 분석에서는 전국 대표 표본 1,506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슈워츠 가치 및 코로나19 관련 경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II. 기존 문헌 검토

1. ‘안전’ 관련 기존 연구 검토

‘안전’을 키워드로, 2000년대 이후 진행된 경험적 자료 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자료의 성격에 따라 객관적 지표를 사용한 연구와 주관적 지표를 사용한 연구로 나뉘볼 수 있다. 객관적 지표는 행정 구분에 따른 지역이나 국가 전체 수준에서 교통사고, 화재, 범죄와 같은 안전 저해 요인들을 수치화하여 전반적인 사회 안전 정도를 나타낸다. 주관적 지표는 안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나 생각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고 점수화한다. 코로나

19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객관적 지표의 결과와 무관하게, 주관적 지표를 사용한 연구들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된다.

객관적 사회 안전 지표를 활용한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전반적인 안전 지수의 개선이 확인된다. 화재나 교통사고, 범죄 등 일부 세부 지표가 나빠지기는 했지만, 풍수해 피해, 산업재해, 붕괴폭발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을 포함한 재난 안전 지수가 과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재열·신창섭·서문기·박두용·박재만·류관호·임동균·한민경·손정은·여명재, 2005; 신창섭·김성민·황석근·이경덕·이재열, 2006). 코로나19 발생 시기까지를 포함하는 객관적 지표를 살펴보면, 2020년 이후 야간보행 안전 정도, 산재사망률, 화재사망자 수,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등 일부 지표의 개선이 확인되지만, 범죄피해율, 아동안전사고 사망률과 같이 안전 위협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항목들에서 지표 악화가 관찰되었다(심수진·남상민, 2021).

주관적인 사회 안전 평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성별, 연령, 생애주기, 거주지역 등에 따른 안전 의식 차이나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고연령층보다는 저연령층이 전반적인 사회의 안전 정도를 낮게 평가하였다(정해모·최준호·홍원화, 2010; 임동진, 2016). 연령 효과에서는 단순한 선형관계를 벗어나는 유형도 확인되었는데,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54세 이상 64세 미만의 예비 노인 세대에 비해 안전 정도를 낮게 평가하였다(정순돌·오은찬·김고은, 2011). 교육 수강 경험이나, 사고 경험 등도 안전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화재사고나 소방안전 교육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안전 정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해모 외, 2010). 성숙한 시민의식 등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자본도 안전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일정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임동진, 2016).

개인적 속성이나 경험 이외에, 거주지역 자체의 특성이나 이에 대한 주관적 판단, 예컨대 거주지의 경제적 수준, 인구 구성, 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

등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거주 지역이 빈곤하고 인구 구성이 다양하며, 공동체 의식이 낮을 수록 거주지의 안전 정도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박영희·민소영, 2015).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무질서, 구성원 사이의 유대감 결여, 부족한 사회통제 등도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 의식을 낮추는 요인이었다(이유미·장현석, 2015). 또한 메르스와 같이 예측이 어려운 사회적 재난이나, 불안정한 대북관계와 같은 통제 불가능한 외적 환경 요인 등도 안전 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서재호·이승중, 2012; 정영철·최익수·배용근, 2016).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인의 건강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안전 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연구의 수와 범위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코로나19가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었는지,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일차적으로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염려나 관심을 포함하여, 안전을 둘러싼 전반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확인되었다(김지범·심재만·신인철·김옥태·김솔이, 2020; 고동우·서현숙, 2021). 흥미로운 사실은, 코로나19 발생 당해 연도의 조사에서, 사회 안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통계에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는 항목에 동의한 사람이 31.8%였는데, 이는 2018년 조사에 비해 11.3% 증가한 수치다(통계청, 2020). 또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미래는 현재보다 더 안전해질 것이다'라는 낙관적 평가가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조사 결과도 존재한다(황인창, 2021). 이러한 결과는 사회의 안전함 정도가 실제로 높아졌기보다, '방역 모범 국가'라는(김진욱, 2021) 조사 당시의 국제적 평가에 대한 대한민국 응답자들의 상대적 반응이나,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안전 정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채정민·고윤승, 2021) 기존 연구 결과의 관점에서 풀이될 수 있다. 또한 팬데믹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자체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고 심리적, 정서적 안정이 회복되었다는(문화체육관광부, 2020) 해석도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안전 의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인, 저소득층, 저학력층, 소도시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 안전도 평가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는 점도(김지은, 2021) 언급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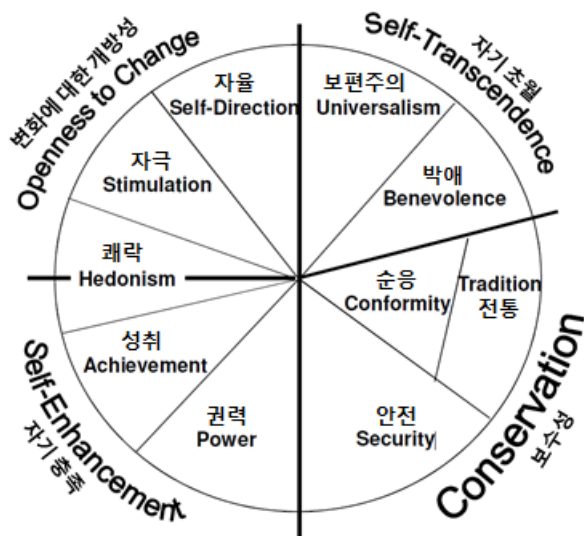
기존 연구를 살펴본 결과, 90년대 이후 ‘위험사회’(Beck, 1986)라는 화두를 시작으로 전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의가 담론의 수준에서 활발히 전개된 것에 비하면, 안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정리해 보면, 첫째, 안전 측정의 결과를 시, 공간 기준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체계적인 지표가 부족하다. 물론 안전 측정의 범위나 내용이 변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 수준의 안전을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측정 방식이나 영역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객관적 지표를 사용한 연구에서 두드러진다. 둘째, 안전 의식에 주목하는 연구의 경우, 주관적 평가 결과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부족하다.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같은 응답자의 고유한 속성에 따른 차이, 안전 교육이나 재난 경험, 생애과정에서 겪는 특정한 경험 유무와 같은 개인차나 코호트 차이에 의한 변이, 조사 시기와 관련된 시기 효과(temporal effect) 등, 주관적 평가는 평가 대상의 객관적 상황을 넘어서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코로나19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지만, 많은 경우 단순한 응답률의 차이나 인구 집단별 비교 결과만을 기술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에서 자료 분석이 진행되었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셋째,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누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론적, 방법론적 체계가 부족하다. 사회과학적 접근을 위한 지침이 없다 보니 개별 연구가 파편적으로 진행되기 쉽고 조직적인 분석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안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근거한 연구들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다양한 비객관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회심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이론적 자원과 방법론의 적용이 있어야만,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슈워츠 가치 이론에 근거하여, 안전에 초점을 맞춘 코로나19 이후의 가치 변화를 살펴

보려고 한다. 슈워츠의 가치 연구는 안전을 포함한 다양한 가치들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해 준다. 또한 가치 측정을 위한 검증된 방법론을 제공함으로써, 경험적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2. 슈워츠 가치 이론

슈워츠의 기본적 인간 가치 이론(Theory of Basic Human Values)(Schwartz, 1992; 2012)에 따르면 인간 사회에는 범문화적으로 존재하는 가치들이 있고, 이들은 서로 간의 구조적 관계에 따라 배치된다. 여기서 가치란, 바람직한 상태나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한 상황을 초월하여 작용하고,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서열화되어 있으며, 행동이나 사건을 선택하거나 평가할 때 일종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Schwartz and Bilsky, 1987). 슈워츠의 이론에서는 10개의 가치 항목이 <그림 1>과 같은 원형 배치의 형태로 표현된다. 여기서 서로 간의 거리가 가까운 가치는 동기 요인으로서의 유사성이 높아 양립 가능성이 크고, 먼 거리에 위치한 가치들은 상반된 성격을 띠기 때문에 양립 가능성이 작다. 10개의 가치는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보수성', '자기 충족'과 '자기 초월'이라는 기저 차원에 따라 다시 구획된다. 개방성 차원에 해당하는 '자율'과 '자극'은 서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보수성 차원에 해당하는 '안전', '전통', '순응'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유사한 방식으로, 자기 충족 차원에 속하는 '권력'과 '성취'는 서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자기 초월 차원에 속하는 '박애', '보편주의'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쾌락' 추구 항목의 경우, 개방성과 자기 충족 차원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림 1〉 슈워츠의 가치 모형 (출처: Schwartz, 1992)

슈워츠의 이론이 가치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특정 가치 항목의 존재 유무와 이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가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집단 간 비교 연구나 다수의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이다(예컨대, Bilsky, Janik and Schwartz, 2011; Davidov, Schmidt, and Schwartz, 2008; Schwartz, 2006 등). 국내 연구에서도 슈워츠 이론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고(김연신·최한나, 2009; 박용한·김은예·한수연, 2019), 앞서 언급한 가치 항목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가 대략적으로 확인되었다. 국가 당 수백 명 이상의 자료가 82개 국가에서 수집되었고(Schwartz, 2012), 그 결과 가치 항목들 사이의 구분과 상대적 중요도, 구조적 관계가 유사하게 관찰되었다는 점에서, 슈워츠 이론을 하나의 준거점으로 사용하여 가치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슈워츠 이론에서 안전은 개인적 또는 집단적 수준에서 요구되는 본질적 동기로서, 위협이 없고 안정적이며 조화로운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

한다(Schwartz, 1992). 전통적 욕구 단계 이론(Maslow, 1959)에서는 기본적인 생존 욕구 다음의 원초적 욕구로 제시되지만, 일단 충족되고 나면 더 이상 동기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결핍 욕구라는 속성을 감안했을 때, 안전이 항상 다른 가치보다 우선한다고 가정하기는 어렵다. 가치가 인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추구되는 바람직한 상태를 뜻하지만, 복수의 가치가 항상 동시에 작용하고, 그 사이에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서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안전 역시 사회적 맥락과 상황적 특수성에 따라 다른 가치들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다.

슈워츠 가치 이론을 바탕으로 1990년대에 주로 수행된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종합해보면, 10개 가치 항목 중 안전의 상대적 중요도는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구체적으로, 대표 표본을 대상으로 한 13개 국가의 조사에서는 평균 네 번째, 학생 표본을 활용한 54개 국가에서는 평균 다섯 번째, 교사 표본을 활용한 56개 국가에서는 평균 네 번째의 중요 가치로 평가되었다(Schwartz and Bardi, 2001). 동일한 연구들에서, 박애와 자율은 대표 표본, 학생 표본, 교사 표본 조사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고되었고, 자극, 전통, 권력은 가장 덜 중요한 가치로 평가되었다.

다른 가치 항목들과의 양립 또는 대립 관계로 나타나는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면, 안전의 경우, 순응 및 권력 가치와의 유사성이 먼저 확인된다. 안전과 순응은 질서에 대한 보호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조화로움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안전과 권력은 관계나 자원에 대한 통제를 통해 불확실성이 초래하는 위협을 최소화하거나 극복하려고 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대립적 위치에 주목했을 때, 순응, 전통 등과 함께 보수성 차원을 이루는 안전은 자극과 자율 가치로 표현되는 개방성 차원과 갈등 관계에 놓인다. 즉, 독립적인 사고나 행위, 변화에 대한 선호는 순종적인 자기 절제나 전통적 관습에 대한 보존, 안정성 유지 등의 가치와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들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은 개인 내부의 심리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가치 항목들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여러 경험적 연구들에서 일관된 양상으로 나타났고(Schwartz, 1992), 본질적 동기로서의 안전 역시

특정 가치 항목들과 가깝거나 먼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슈워츠의 이론에서 범 문화적 보편성이나 일반 이론으로서의 일관성이 더 강조되기는 하지만, 기존 문헌에서 응답자들의 연령이나 성별, 다른 사회 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차이가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예컨대, 연령 집단에 따른 가치관 차이는 다양한 세대론과 결합하면서 일반 대중이나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았다. 젊은 세대일수록, 타인지향적 가치보다 개인적 성취나 자율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내적 가치의 추구보다 외적 동기 부여 기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rcus, Ceylan, and Erigin, 2017; Twenge, Campbell, and Freeman, 2012; Twenge, Campbell, and Gentile, 2012). 안전의 경우, 두드러지는 가치 항목으로 독자적인 주목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지만, 보수성 차원의 전통이나 순응 가치와의 유사성을 감안할 때, 안전 지향에 대한 연령 효과의 일정한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슈워츠 가치 측정 결과의 성별 차이에 주목한 연구(Schwartz and Rubel, 2005)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박애와 보편주의를, 남성의 경우 권력, 자극, 쾌락, 성취, 자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가치는 성별에 의한 차이가 크지 않거나, 일관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가치가 문화의 주요 구성 부분이라는 점에서, 연령이나 성별 이외에도, 문화적 규범과 관련되어 있는 여타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개인 간의 가치 차이를 예상할 수 있다. 안전 가치에 주목했을 때, 어떤 사회적 사건이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변화시켰다면, 그 변화가 개인이 속한 다양한 범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살펴보는 일은 후속 연구를 위한 필수적 과정이 될 것이다.

사실, 가치란 그 정의상 안정적인고 지속적인 개인의 지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Rokeach, 1973). 설령 일정한 차이가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그 변화는 근대화와 같은 거시적 사회변동이나(Inglehart and Baker, 2000), 특정 국가가 경험하는 급속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격변(예컨대, Danis, Liu, and Vacek, 2011)과 같은 강력한 외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과연 코로나19는 개인의 가치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까? 확실한 답을 제공하기는 어렵겠지만, 2019년 이래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가 개인의 건강, 질병, 생존과 같은 원초적 문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최소한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안전 가치에 대한 민감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최근 코로나19와 가치 문제에 함께 주목한 연구들(예컨대, Bojanowska et al., 2021; Wolf, Haddock, Manstead, and Maio, 2020)이 등장하고 있지만,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으며, 가치를 다루는 연구의 본질적 속성상,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연구가 더 요구된다는 점에서 국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의 일차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슈워츠 가치 이론의 특징과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다음 세 가지 연구문제를 중요하게 다룬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안전 가치의 상대적 중요도와 구조적 위치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둘째,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안전 가치의 변화 양상은 성별, 연령 및 다른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가? 셋째,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관련 경험(예컨대, 감염 여부, 증상의 심각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가?

III. 연구방법

1. 자료와 측정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20세 이상 65세 미만 전국 성인 남녀 1,506명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한국리서치'의 마스터샘플에 기반하여,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고려한 비례할당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2022년 11월에 웹서베이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성별, 연령, 거주지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구분		n	%
성별	남성	772	51.3
	여성	734	48.7
연령	20~29	290	19.3
	30~39	296	19.7
	40~49	355	23.6
	50~59	381	25.3
	60~64	184	12.2
	대도시	868	57.6
거주지	중소도시	552	36.7
	군/농어촌	86	5.7
	중졸 이하	9	0.6
	고졸	281	18.7
학력	전문대졸	260	17.3
	대졸	793	52.7
	석사	132	8.8
	박사	31	2.1
	미혼	550	36.5
혼인상태	기혼	871	57.8
	사별/이혼/별거	85	5.6
	없음	798	53.0
종교	천주교	164	10.9
	기독교	312	20.7
	불교	197	13.1
	기타	35	2.3
합계		1,506	100.0

안전을 포함한 가치 항목에 대한 평가는, 가상적 인물의 특징이 응답자와 얼마나 비슷한지를 묻는 10개의 슈워츠의 가치 설문(Portrait Values Questionnaire, PVQ)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PVQ를 사용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40개(예컨대, Schwartz, Melech, Lehmann, Burgess, Harris, and Owens, 2001) 또는 21개(예컨대, European Social Survey, 유럽사회조사) 문항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그보다 적은 10개 정도의 문항으로도 슈워츠 가치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Lindeman and Verkasalo, 2005; Sandy, Gosling, Schwartz, and Koelkebeck, 2017), 조사의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문항 수를 조정하였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가치를 표현하는 진술들에 대해, 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상의 인물과 자신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전혀 비슷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비슷하다'(6점) 사이의 점수로 평가하게 된다. 10개 가치에 대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 (성취), '사람과 자원에 대한 권력을 갖는 것' (권력),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는 것' (안전), '문화적 전통을 따르고 존중하는 것' (전통), '사회적 규범과 도리에 맞게 행동하는 것' (순응), '주변 사람들을 돕고 보살피는 것' (박애), '사회 전체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는 것' (보편주의),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것' (자율),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하는 것' (자극), '재미를 추구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 (쾌락). 괄호 안에 명시된 가치는 설문지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안전 가치에 영향을 끼쳤을 만한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 경험 유무, 양성 판정자의 증상 정도(무증상, 경미한 증상, 심한 증상), 음성 판정자의 의심 증상 정도(무증상, 경미한 증상, 심한 증상), 코로나19에 대한 주관적인 두려움 정도(5점 척도) 등을 측정하였다. 추가적으로, 한국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가 현재 느끼는 안전 정도에 대한 대체적 평가(5점 척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2.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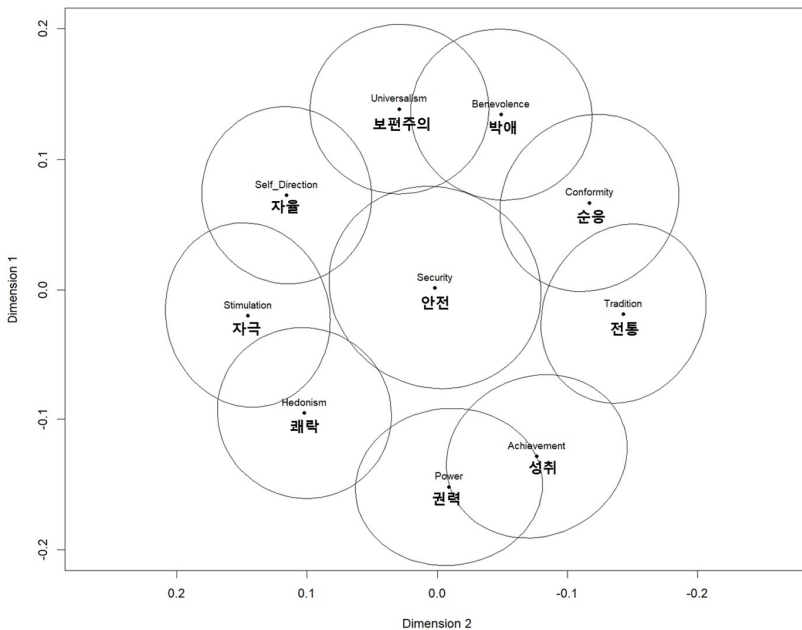
10개 가치 항목 사이의 구조적 배열은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차원척도법은 측정된 항목들 사이의 거리나 유사성을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 2차원 또는 3차원 공간 안에 제시해 준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하위 항목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는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서도 분석될 수 있지만, 고유한 요인의 추출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경우, 가치들 사이의 연속적 배열을 가정하는 슈위츠 이론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Schwartz, 2011), 다차원척도법이 슈위츠 가치 분석에 더 많이 활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R 프로그램의 smacof 패키지를 이용하여 다차원척도법을 구현하였다. 추가적으로 해당 패키지의 confEllipse 함수를 활용하여 의사 신뢰 타원(Pseudo Confidence Ellipses)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차원척도법을 통해 가깝거나 또는 멀리 떨어져 존재하는 것으로 그려진 가치들이, 서로 얼마나 중첩되어 있는지 또는 분리되어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안전성을 포함한 가치 항목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에서는, 원점수에서 개인별 가치 평균 점수를 뺀, 중심화(centering) 점수를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두 응답자가 안전 항목에 대해 같은 3점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한 명은 다른 가치 항목들에 대해서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주었고, 다른 한 명은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면, 동일한 점수 3점의 의미가 두 응답자에게 같을 수 없다. 따라서 일종의 개인별 표준 점수로서의 중심화 점수가 가치의 상대적 위계를 설명하는 데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안전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분석에서는 자료에 성격을 고려하여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 상관관계 분석, 일원 변량 분석, 회귀 분석 등을 각각 사용하였다.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영향 요인을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슈위츠의 안전 가치 항목 이외에, 한국 사회의 안전도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를 추가적인 종속 변수로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다차원척도법으로 제시한 10개 가치 항목들의 구조적 배열은 <그림 2>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자료의 시각화 결과를 슈워츠 가치 이론이 제시한 원형 모형과(<그림 1> 참조) 비교해 보면, 뚜렷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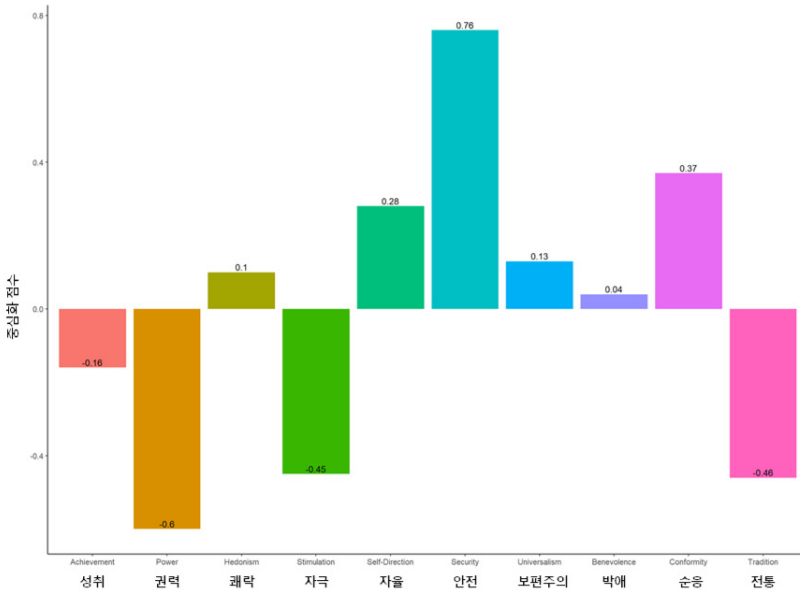
<그림 2> 다차원척도법에 의한 가치 배열

먼저 ‘자기 충족’ 차원의 일부로 간주되는 ‘성취’의 경우, 이론적 모형의 예측대로 ‘권력’과 인접해 있으며, 두 가치 간 의사 신뢰 타원의 중첩 역시 두드러진다. ‘변화에 대한 개방성’ 차원을 이루는 ‘자극’과 ‘자율’도 이론적 모형과 유사한 인접 가치로 표현되며, 두 기저 차원(‘자기 충족’과 ‘변화에

대한 개방성') 사이에 '쾌락'이 위치하는 것도 이론적 모형과 동일하다. '자기 초월' 차원을 이루는 '보편주의'와 '박애', '보수성' 차원을 이루는 '순응'과 '전통'도 각각 상당 부분 중첩된 의사 신뢰 타원을 나타내며 서로 간의 인접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 개별 가치 항목들의 구조적 배치가 이론적 모형과 유사하다는 점과 아울러, 대조적 기저 차원으로 여겨지는 '자기 충족'과 '자기 초월',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보수성'의 분리 역시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결과는 슈위츠 가치 이론을 다룬 기존의 경험적 연구 결과들과 (Bilsky et al., 2011; Schwartz, 2006 등) 많은 공통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논문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일차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한편, <그림 2>에서 나타나는 가장 흥미로운 차별점은 '안전' 가치의 구조적 위치다. 이론적 모형에서 '안전'은 '순응', '전통'과 함께 '보수성' 차원을 이루며 '자극', '자율' 등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유지한다. 그러나 <그림 2>의 '안전'은 여러 가치들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시각화되며, 어떤 특정 가치와도 두드러지는 인접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바꿔 말해, '보수성'은 물론 어떤 특정 기저 가치로도 귀속되지 않으며 다른 모든 가치 항목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안전을 포함한 개별 가치 항목들의 중심화점수를 비교한 <그림 3>을 보면, 안전 가치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진다. 중심화점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들은 '안전', '순응', '자율', '보편주의', '쾌락'이며,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들은 '권력', '전통', '자극', '성취'였다. '박애'의 경우 전체 평균과 가까운 점수를 나타냈다. '안전' 가치는 다른 가치들과의 상대적인 중요도 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으며, 중심화점수를 단순 비교했을 때, 두 번째에 해당하는 '순응'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요약하면, <그림 2>와 <그림 3>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코로나19 이후 안전 가치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아지고, 특정 가치 항목들과의 인접성이 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보편적 중요 가치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3〉 슈워츠 가치 10개 항목의 중심화 점수

다음 분석에서는 안전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가 어떤 개인적 요인들에 의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우선 고려하였고, 특별히 코로나19 실제 감염 여부 및 증상 정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모든 요인을 함께 고려한 회귀분석에서는 전체 응답자 대상 분석 결과와 코로나19 감염 유경험자 대상 분석 결과를 각각 제시하였다.

〈표 2〉는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안전 가치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성별과 거주지였으며 연령, 학력, 혼인 상태, 종교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았고, 군 단위 농어촌 지역 응답자일수록,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자에 비해 안전 가치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성별이나 거주지에 따른 차이는 기존 연구의 결과나 일반적인 예측 방향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10점 척도로 측정한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 소득과 안전 가치 점수의 상관관계도 살펴보았으나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r(1,504) = .0009$, n.s.)

〈표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에 따른 안전 가치 차이 분석

구분		종속변수: 안전 가치		
		평균	표준편차	t/F(p)
성별	남성	0.66	0.70	-6.02***
	여성	0.87	0.69	
연령	20~29	0.80	0.68	0.78
	30~39	0.71	0.73	
	40~49	0.78	0.70	
	50~59	0.76	0.73	
	60~64	0.75	0.65	
	대도시	0.76	0.68	
거주지	중소도시	0.73	0.74	4.78**
	군/농어촌	0.98	0.64	
	중졸 이하	0.96	1.05	
	고졸	0.76	0.75	
학력	전문대졸	0.83	0.74	1.21
	대졸	0.76	0.68	
	석사	0.68	0.63	
	박사	0.62	0.68	
	미혼	0.78	0.69	
혼인상태	기혼	0.76	0.71	0.83
	사별/이혼/별거	0.67	0.72	
	없음	0.81	0.73	
종교	천주교	0.68	0.65	2.35
	기독교	0.70	0.66	
	불교	0.73	0.69	
	기타	0.72	0.78	

주: 1) 6점 척도(1~6)로 측정된 안전 가치 점수를 중심화한 값으로 분석함

2) * $p < .05$, ** $p < .01$, *** $p < .001$

3) $N=1,506$

코로나19가 안전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면,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더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코로나19 양성 판정 유무 및 코로나19 증상 경험 정도에 따라 안전 가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양성 판정 유경험자는 전체 응답자의 57.6%였으며, 이 중에서 1/3 정도가 심한 코로나19 증상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다.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없는 응답자 중에서도 약 40.9%는 일정 정도 이상의 코로나19 증상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다. 자료 수집 시점의(2022년 11월) 코로나19 누적발생률과(약 50.0%, 김민준, 2022) 비교했을 때, 본 조사 참여자의 양성 판정 비율이 약간 높은 편이었다. <표 4>에 제시된 안전 가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양성 판정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두 집단의 평균 점수 자체도 매우 유사하였다. 다만, 양성 판정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증상 정도에 따라 안전 가치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증상 정도가 심할수록 점수가 평균 점수가 높았다. 양성 판정 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에는 증상 정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3> 코로나19 양성 판정 여부 및 경험한 증상의 정도

구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없다	
	n	%	n	%
심한 증상	296	34.1	29	4.5
경미한 증상	533	61.4	232	36.4
무증상	39	4.5	377	59.1
합	868	100.0	638	100.0

〈표 4〉 코로나19 양성 판정 여부 및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른 안전 가치 차이 분석

구분		종속변수: 안전 가치		
		평균	표준편차	t/F(p)
코로나19 양성 판정 경험	있음	0.76	0.69	-0.04
	없음	0.76	0.73	
	심한 증상	0.85	0.68	
양성판정 받은 적 있는 경우	경미한 증상	0.73	0.67	4.99**
	무증상	0.55	0.85	
	심한 증상	0.51	0.93	
양성판정 받은 적 없는 경우	경미한 증상	0.75	0.71	2.06
	무증상	0.79	0.72	

주: 1) 6점 척도(1~6)로 측정된 안전 가치 점수를 중심화한 값으로 분석함
2) *p<.05, **p < .01, ***p < .001
3) N=1,506(양성 판정 받은 적 있는 경우 N=868, 없는 경우 N=638)

마지막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코로나19 관련 경험을 함께 포함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전체 응답자 대상 분석에서는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만 투입된 모델을 구성하였고 이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여부 변수가 추가적으로 투입된 모델을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안전 가치 평가에 유의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 확진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경우, 첫째 모형에서는 이전 분석과 동일한 변수들을 포함하였고, 둘째 모형에서는 확진 당시의 증상 정도를 새로운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확진으로 인해 경미하거나 혹은 심한 코로나19 증상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무증상 응답자에 비해 안전 가치 평가가 유의미하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여타의 가치들과 비교했을 때, 안전 가치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아졌으며, 다른 특정 가치들과의 근접성도 약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심각한 병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팬데믹 상황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난 가치 변화일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표 5〉 코로나19 경험이 안전 가치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전체응답자 대상 (n=1,506)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n=868)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b	SE	b	SE	b	SE	b	SE
상수	0.754 ***	0.179	0.763 ***	0.183	0.806 ***	0.231	0.661 **	0.249
여성	0.230 ***	0.036	0.231 ***	0.036	0.202 ***	0.047	0.186 ***	0.047
연령	0.000	0.002	0.000	0.002	-0.002	0.003	-0.002	0.003
소득	0.006	0.008	0.006	0.008	0.011	0.011	0.010	0.011
거주지								
중소도시	-0.041	0.038	-0.041	0.038	-0.100 *	0.050	-0.100 *	0.050
군/농어촌	0.222 **	0.079	0.222 **	0.079	0.169	0.106	0.159	0.106
학력(교육연수)	-0.007	0.009	-0.007	0.009	-0.002	0.012	-0.002	0.012
결혼지위								
미혼	0.019	0.051	0.017	0.052	-0.053	0.067	-0.052	0.067
사별/이혼/별거	-0.097	0.080	-0.098	0.080	-0.097	0.109	-0.094	0.109
종교								
천주교	-0.138 *	0.060	-0.138 *	0.060	-0.074	0.077	-0.077	0.077
기독교	-0.126 **	0.047	-0.126 **	0.047	-0.106	0.061	-0.109	0.061
불교	-0.091	0.056	-0.091	0.056	-0.034	0.074	-0.037	0.073
기타	-0.126	0.121	-0.126	0.121	-0.257	0.161	-0.247	0.161
코로나19 확진 판정			-0.009	0.037				
확진시 증상정도								
심한 증상							0.219	0.117
경미한 증상							0.117	0.114
R ²	0.041		0.041		0.039		0.046	

주: 1) 6점 척도(1~6)로 측정된 안전 가치 점수를 종속변수로 분석함

2) 거주지 변수의 기준 범주는 대도시, 결혼지위 변수의 기준 범주는 기혼, 종교 변수의 기준 범주는 종교없음, 확진시 증상 정도 변수의 기준 범주는 무증상이다.

3) *p<.05, **p < .01, ***p < .001

V. 결론 및 논의

본 논문에서는 안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의 가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전국 대표 표본 1,5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2000년대 이후 사회과학 분야에서 수행된 안전 관련 경험적 연구를 검토하였고 한계와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안전을 포함한 가치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슈워츠의 가치 연구가 갖는 특징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가 경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팬데믹을 거치면서 안전 가치의 상대적 중요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특정 가치 항목들과의 인접성도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이나 감염병 확진 여부, 증상의 경중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난 가치 변화일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개인의 위기를 초월하는 전 사회적 위험이나 재난은 20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일종의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 안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활발했던 담론의 전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가치 지향으로서의 안전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론적 원칙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슈워츠 가치 이론의 경우, 비록 10개 가치 항목 중의 하나로 안전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축적된 연구 결과가 광범위하고 이론적 도식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안전 연구에 도움을 주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안전 가치가 다른 가치 항목들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중요함을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존 슈워츠 이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의 안전 가치 변화를 탐색해 볼 수 있었다. 만약, 흔히 사용하는 주관적 안전 의식 설문에만 기대어 분석을 수행했다면, 분석 결과의 해석이 모호했을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도 평가를 종속 변수로 두고, <표 5>에 제시된 것과 동일한 회귀분석을 실시했더니,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안정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b = .13$, $SE = .05$, $p < .01$).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결과를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안전 가치의 위치 이동과 상대적 중요도 변화는 뚜렷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사실도 함께 언급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중반 슈워츠 가치 이론이 처음 제기된(Schwartz and Bilsky, 1987) 이래로, 다수의 국가 간 비교 연구와(예컨대, Bilsky et al., 2011; Davidov et al., 2008; Schwartz, 2006) 국내 연구가(예컨대, 김연진·최한나, 2009; 박용한·김은예·한수연, 2019) 수행되었지만, 본 논문에서처럼 안전 가치가 도드라진 위치로 부각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예외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논문에서(김지혜·김상학, 2022) 유사한 유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전 가치의 변화를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추론하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수행된 슈워츠 가치 관련 국내외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 가치의 변화가 문화적 맥락이 상이한 국가들에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안전에 대한 한국 사회의 높은 민감도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근본적 변화인지 관찰할 수 있는 추후 연구도 요청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한정했을 때, 안전은 어떤 다른 가치와도 가까이 붙어 있지 않는, 독립적 차원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 안전 가치란 위험 감수를 회피하고 조화로운 상태를 추구하거나 유지하려는 보수적 지향성이므로, 이러한 가치의 강화는 개인의 행위나 사회의 선택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슈워츠 이론의 예측 및 이를 검증한 실험실 연구와(Maio, Pakizeh, Cheung, and Rees, 2009), 현장 연구가(Bardi, Lee, Hofmann- Towfigh, and Soutar, 2009) 확인해 준 바와 같이, 특정 가치의 높아진 중요도는 인접 가치의 상대적 중요도를 함께 증가시키고 대립 가치의 의미를 축소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안전 가치에 대한 강조는 우리 사회의 안전함 정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사회적 선택의 보수성을 강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안전 가치에 대한 강조가 장기적으로 순응

이나 전통과 같은, 이론적으로 인접한 가치들의 상대적 위치를 견인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순응 가치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가 안전 다음으로 높았으나 전통 가치에 대한 중요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 의한 반복적인 검증을 요구한다.

논문의 서론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코로나19와 안전 가치 변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밀히 따져보기 위해서는 개인의 가치를 반복적으로 측정한 종단 자료가 필요하다. 비록 본 연구가 종단 자료의 부재라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고, 코로나19 전후의 횡단 자료 결과를 비교하는 대안적 접근을 취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보고된 안전 가치의 변화를 코로나19의 직접적 결과라고 해석하는 일에는 세심한 주의가 뒤따른다. 측정 방식, 조사 시기, 분석 방법의 차이 등 다양한 요인들이 가치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한계는 분명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후속 연구의 필요성 또한 명확하다고 말할 수 있다.

2023년 11월 30일 접수
2023년 12월 28일 수정 완료
2023년 12월 23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 고동우·서현숙. 2021.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심리적 적응과 연쇄적 변화의 구조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27(4): 351-389.
- 김민준. 2022.11.9. “11월 1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일 평균 4만2476명…전주比 27.5%↑.” 메디포뉴스.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72163>
- 김연신·최한나. 2009. “Schwartz 의 보편적 가치 이론의 적용 타당성 연구: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16.
- 김지범·심재만·신인철·김옥태·김솔이. 2020. “코로나 위기와 가치관 변화.” 국회미래연구원.
- 김지은. 2021. “성인의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도 인식과 영향 요인.” 『안전문화연구』 13: 137-153.
- 김지혜·김상학. 2022. “가치 연구와 이중과정이론 (Dual-Process Theory): 암묵적 인지 측정 방법의 적용.” 『한국사회학』 56(3): 1-44.
- 김진옥. 2021.11.24. “블룸버그 “한국 등 7개국, 코로나 방역 모범 MVP 국가”,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12414110002257>
- 문화체육관광부. 2020.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활 및 의식 변화.”
- 박영희·민소영. 2015. “지역사회 구조적 환경과 공동체의식에 따른 여성의 안전의식.” 『한국사회정책』 22(2): 283-311.
- 박용한·김은예·한수연. 2019. “대학생용 가치 척도(K-PVQ-RR)의 타당화.” 『한국교육문제연구』 37(3): 127-154.
- 서재호·이승중. 2012. “지역주민의 사회안전 및 사회위험 인식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8(3): 1-20.
- 신창섭·김성민·황석근·이경덕·이재열. 2006. “시계열로 분석한 한국사회의 사회안전지표.” 『한국안전학회지』 21(6): 55-63.

- 심수진·남상민. 2021. “국민 삶의 질 2020.” 통계청 통계개발원.
- 이유미·장현석. 2015. “지역사회 안전인식에 관한 연구-사회통합모델과 무질서모델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한국범죄학』 9(1): 159-186.
- 이재열·신창섭·서문기·박두용·박재만·류관호·임동균·한민경·손정은·여명재. 2005. “사회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국민안전의식조사.” 소방방재청.
- 임동진. 2016.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수준과 영향요인 분석: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 89-114.
- 정순돌·오은찬·김고은. 2011. “연령별 안전에 대한 인식 차이: 베이비부머, 예비노인, 현재노인의 비교.”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1(3): 75-81.
- 정영철·최익수·배용근. 2016. “사회안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의 재난대응 정책.”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0(4): 683-690.
- 정해모·최준호·홍원화. 2010. “시민안전의식 조사를 통한 소방안전교육모델 개발 방향.”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6(4): 65-74.
- 채정민·고운승. 2021. “재난과 심리의 융합적 고찰: 재난경험, 우울 경향, 안전의식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9(5): 413-425.
- 통계청. 2020. “2020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과 훈련·건강·범죄와 안전·생활환경)”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300&bid=219&act=view&list_no=386249. Retrieved 2023-11-17.
- 황인창. 2021. “2021년 안전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리서치.

Bardi, A., Lee, J. A., Hofmann-Towfigh, N., and Soutar, G. 2009. “The structure of intraindividual value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5): 913-929.

Beck, U. 1986.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Suhrkamp Verlag (홍성태 역. 1997. 『위험사회-새로운 근대(성)을 위하여』. 서울: 새물결).

Bilsky, W., Janik, M., and Schwartz, S. H. 2011. “The structural organization of human values – Evidence from three rounds of the European

- Social Survey (ES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2(5): 759-776.
- Bojanowska, A., Kaczmarek, Ł. D., Koscielniak, M., and Urbańska, B. 2021. “Changes in values and well-being amidst the COVID-19 pandemic in Poland.” *PloS one* 16(9): e0255491.
- Danis, W. M., Liu, L. A., and Vacek, J. 2011. “Values and upward influence strategies in transition: Evidence from the Czech Republic.”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2(2): 288-306.
- Davidov, E., Schmidt, P., and Schwartz, S. H. 2008. “Bringing values back in: The adequacy of the European Social Survey to measure values in 20 countries.” *Public Opinion Quarterly* 72(3): 420-445.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postmodernization and changing perceptions of risk.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7(3): 449-459.
- Inglehart, R., and Baker, W. E. 2000.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1): 19-51.
- Lindeman, M., and Verkasalo, M. 2005. “Measuring values with the short Schwartz’s value surve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5(2): 170-178.
- Maio, G. R., Pakizeh, A., Cheung, W. Y., and Rees, K. J. 2009. “Changing, priming, and acting on values: effects via motivational relations in a circular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4): 699-715.
- Marcus, J., Ceylan, S., and Ergin, C. 2017. “Not so “traditional” anymore? Generational shifts on Schwartz values in Turke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8(1): 58-74.

- Maslow, A. H. 1959. "Creativity in Self Actualizing People," in H. H. Anderson(Ed.), *Creativity and its Cultivation* (83-95). Harper Row, New York.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Free press.
- Sandy, C. J., Gosling, S. D., Schwartz, S. H., and Koelkebeck, T. 2017.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and ultrabrief measures of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9(5): 545-555.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1-65). Academic Press.
- _____. 2006. "Value orientations: Measurement,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across nations. In Jowell, R., Roberts, C., Fitzgerald, R. & Eva, G.(Eds.) *Measuring attitudes cross-nationally.*" in *Lessons from the European Social Survey* (169-203). London, UK: Sage.
- _____. 2011. "Studying values: Personal adventure,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2(2): 307-319.
- _____. 2012. "An Overview of the Schwartz Theory of Basic Values."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2(1). <https://doi.org/10.9707/2307-0919.1116>. Retrieved 2023-11-17.
- Schwartz, S. H., and Bardi, A. 1997. Influences of adaptation to communist rule on value priorities in Eastern Europe. *Political psychology*, 18(2): 385-410.
- _____. 2001. "Value Hierarchies across Cultures: Taking a Similarities Perspectiv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3): 268-290.

- Schwartz, S. H., and Bilsky, W. 1987. "Toward a Universal Psychological Structure of Human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3): 550-562.
- Schwartz, S. H., and Rubel, T. 2005. "Sex differences in value priorities: cross-cultural and multimethod stud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1010-1028.
- Schwartz, S. H., Melech, G., Lehmann, A., Burgess, S., Harris, M., and Owens, V. 2001. "Extending the cross-cultural validity of the theory of basic human values with a different method of measuremen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5): 519-542.
- Steinert, S. 2021. "Corona and value change. The role of social media and emotional contagion." *Eth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23(Suppl 1): 59-68.
- Twenge, J. M., Campbell, W. K., and Freeman, E. C. 2012. "Generational differences in young adults' life goals, concern for others, and civic orientation, 1966-2009."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5): 1045-1062.
- Twenge, J. M., Campbell, W. K., and Gentile, B. 2012. "Generational increases in agentic self-evaluations among American college students, 1966-2009." *Self and Identity* 11(4): 409-427.
- Wolf, L. J., Haddock, G., Manstead, A. S., and Maio, G. R. 2020. "The importance of (shared) human values for containing the COVID-19 pandemic."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9(3): 618-627.

COVID-19 and Value Change: Focusing on ‘Safety’

Jun Gyeong Lim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anghag Kim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o investigate how values, with a focus on safety, have evolved in the aftermath of COVID-19,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with 1,506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s. Initially, the study reviewed empirical studies on safety with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s since the 2000s, identifying their challenges and limitations. Subsequently, it utilized Schwartz's value theory as a framework to systematically analyze value shifts in Korean society post-COVID-19.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andemic has significantly elevated the relative importance of safety and the proximity between safety and certain other value items was no longer observed. Furthermore, these chang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ross responden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OVID-19 infection status, or symptom severity, suggesting that this could be a universal value change experienced by people during the COVID-19 era. Lastly, the paper outlined the implications of these value changes and emphasized the need for related follow-up research.

Key Words: COVID-19, Values, Safety

『한국사회』 투고 및 발행규정

- 제 1 조 (발간)**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는 사회과학 분야 전문학술지인 <한국사회>라는 학술지를 발간한다.
- 제 2 조 (목적)** <한국사회>는 한국사회가 지니는 다양한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학제간의 유기적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사회과학 기초이론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발간회수 및 일자)** <한국사회>는 연 2회, 6월 30일과 12월 30일에 발간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 제 4 조 (편집위원회)** 본 학술지의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 5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장은 한국사회연구소 운영위원 중 1인이 겸임하며, 10여명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제 6 조 (편집위원회의 위촉)** 편집위원은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업적에 있어서 탁월하며,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의 제반학술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공로가 많은 사람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 7 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술지의 편집방향의 결정 및 발행과 관련한 예산의 집회
 2. 논문심사의 방법 및 논문심사위원의 결정, 최종 게재여부의 결정
 3. 특집호의 발행 및 내용의 결정
 4. 본 학술지의 대내외적 홍보
- 제 8 조 (편집위원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9 조 (논문 심사)** 편집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논문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접수는 연중 수시로 실시하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전 원고모

집 및 발행과 관련된 공고를 한다.

2. 본 학술지에 투고할 원고는 다른 기관이 학회에 제출된 논문일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유관분야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 심사의 위촉은 연중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4. 신청된 논문은 3인 이상의 전문영역 학자들에 의하여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위원은 게재 가(O), 재심(△), 게재 부적합(X) 등으로 논문을 평가한다.
5. 심사위원의 세부 심사기준은 ① 연구목적의 명료성, ② 분석의 엄밀성, ③ 이론적용의 타당성,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 ⑤ 논의 및 구성의 논리성, ⑥ 관련문헌의 취급, ⑦ 연구결과의 의의, ⑧ 문장의 가독성, ⑨ 논문의 독창성, ⑩ 논문제목의 적합성, ⑪ 연구주제의 중요성, ⑫ 이론적 기여도, ⑬ 방법론적 기여도, ⑭ 연구결과의 실용성 등으로 나뉘어진다.
6. 투고 원고에 대한 최종판정은 아래의 심사판정기준을 따라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초심결과	판정	게재 및 재심 과정
○ ○ ○		게재확정
○ ○ △	게재가능	수정권고후 게재
○ ○ X		수정을 전제로 게재
○ △ △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1인 이상이 게재 가이면 게재가능
○ △ X	재심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 가이면 게재가능
△ △ X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 모두가 게재 가이면 게재
X X X		
X X △	게재불가	
X X ○		

7. 재심 판정된 논문의 투고자가 재심에 응하지 않기로 알려진 경우 또는 재심용 원고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한(재심판정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투고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8. 논문의 접수, 심사의뢰, 최종원고 제출 등은 모두 전자메일을 이용한다.

제 10 조 (이의신청)

1. 논문 투고자가 게재불가 판정 결과에 불응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2.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된 심사논문의 원문, 심사 의견, 이의 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대신하여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진행한다. 이때 다시 한번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지면 저자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제 11 조 (투고 규정) 〈한국사회〉에 게재될 논문은 ‘〈한국사회〉 원고 작성 및 제출요강’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한다.

제 12 조 (게재) 원고분량은 원고지 150매 내외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 13 조 (저작권 활용동의 절차 및 권한명세)

1.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규정을 확인하여 이를 준수하고 연구윤리준수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게재확정이 된 논문의 경우, 최종 수정본을 제출할 때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사회연구소에 속한다.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한

국사회연구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한국 사회연구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제 14 조 (표절 방지)

논문 투고자는 논문 게재 확정 시, 최종본을 제출하기 전에 표절방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논문의 표절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표절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15 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이상의 발의와 편집위원회 재직위원 2/3의 찬성으로 한다.

『한국사회』 연구윤리규정

2008. 7. 1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의 목적은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전문학술지인 한국사회 (이하 본 학술지)에 투고되었거나 게재된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시 이에 대한 검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연구윤리)

1. (연구의 객관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연구결과 등을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의 독창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투고 논문은 저자 본인의 것을 비롯한 기존의 연구 성과물과 차별되는 학문적 독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연구의 정직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이나 연구결과물의 출판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연구수행과정에서의 정직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2) (연구출판과정에서의 정직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 이중 투고, 중복 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연구의 공개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저자는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상의 제약이나 기타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한, 관련 자료와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해당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 장 연구부정행위

제 3 조 (위조) 위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단,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가상의 자료를 생성하여 분석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위조로 보지 않는다.

제 4 조 (변조) 변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자료 내에 왜곡된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제거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변조로 보지 않는다.

제 5 조 (표절)

1. 표절이라 함은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상의 문서 등을 통해 공개된 타인의 아이디어나 견해, 표현,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자기 논문의 표현이나 연구내용, 결과 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절로 본다(자기 표절). 그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단어 등은 인용 없이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3. 국·내외 학술지 이외의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자기 글이나 논문 등을 기초로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논문에 밝혔을 경우 인용 없이 아이디어, 표현, 연구내용, 결과 등을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4.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글이나 그림,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은 인용 없이 이를 기술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제 6 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란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저자로 표기하지 않거나, 반대로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저자로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 7 조 (이중 투고) 이중 투고란 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도 이중 투고에 해당한다.

제 8 조 (중복 게재)

중복 게재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반대로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중복 게재에 해당한다.

제 9 조 (재투고)

1. 본 학술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1)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

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2)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 3 장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절차

제 10 조 (편집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조사)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한다.
2.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소 소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고, 연구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제 11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1. 편집위원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본 연구소 소장은 즉각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의 안전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심의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한다. 의결은 의원의 2/3 이상 출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추가 조사를 할 수가 있으며,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안전이 상정되는 대로 수시로 구성, 개최한다.

제 12 조 (이의 신청)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1회에 한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을 받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수정 또 재확인할 수 있다.

제 13 조 (비밀보장의 의무)

1.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허위에 의해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비밀보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인지된 날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을 정지시킨다.

제 4 장 별 칙

제 14 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1.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이 제3조 내지 제8조에 9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해당 논문의 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 (2) 이중 투고의 경우,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이중 투고 사실을 통보한다.
 - (3) 해당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2.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제3조 내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

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실을 공지한다.

(2) 해당 논문을 해당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3) 해당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 3 조 (규칙 재·개정)

1. 이 규약은 1998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제1차 개정에 의한 새로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2차 개정에 의한 새로운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원고제출 및 작성 요강

원고제출

1. 투고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이면서 학술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제출된 논문은 익명의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거치며 평가자가 수정을 요청할 경우 원고 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려질 경우 또는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게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원고는 수시로 접수합니다. 당해 원고마감은 발행일 30일전이며 발간예정일은 당해 6월 30일, 12월 30일입니다. 게재 원고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게재료를 납부합니다.
4. 원고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원고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백색 A4 용지에 단면으로 출력한 원고 4부를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편집위원회로 우송합니다.

보낼 곳: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우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Tel: 02) 3290-1651 / Fax: 02) 924-4365

E-mail: socialresearchku@gmail.com

Homepage: <http://isrku.org>

원고작성

1. 원고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부록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 (흔글 97 기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초과시 추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원고작성의 기본적인 형식요건은 다음과 같다.

글자크기: 본문 10p, 각주 9p, 인용문단 9p

줄 간격: 170%

여백 주기: 좌우 3cm, 위 2cm, 아래 1.5cm, 머리말 · 꼬리말 각 1.5cm

3.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 표기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속에 넣어서 쓸 수 있다. 기타 외국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 뒤의 괄호 속에 넣어 쓴다.

4. 원고는 표지, 국문요약, 영문 주제어(Key Words) 순서로 구성한다.

5. 표지에는 논문제목, 필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이메일 · 전화 · 팩스)가 명기 되어야 한다. 필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횡렬로 기재하되, 1명의 ‘제1저자’ (교신저자)를 지정하여 명시하고 다른 저자들은 ‘공동저자’로 표기한다.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 수령 사실은 각주로 기재한다.

6. 국문요약은 200자 원고지 5매 또는 A4용지 1/2장 이내 분량으로 작성 한다.

7. 본문은 논문 제목을 첫머리에 기재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필자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표시나 서술은 삼가야 한다.

8. 본문 서술의 세부적인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장 · 절 · 항 · 목의 번호는 “I”, “1”, “1)”, “(1)”의 순서로 매긴다.

2) 강조어는 ‘ ’, 인용구는 “ ”로 둘러싼다.

3) 전거는 저자명과 간행연도를 반드시 표기하고, 필요시 인용 페이지를 덧붙여 기재한다. 같은 저술을 되풀이 이용할 때도 그 방식은 같다.

구체적인 전거표기의 예는 아래와 같다.

(1) 저자명은 서술의 흐름에 따라 본문에 노출시킬 수도 있고, 괄호속에 넣어야 할 경우도 있다.

[예1] “...홍승직(1994: 23)은 ...”;

[예2] “...라 했다(홍승직, 1994: 23).”

(2) 외국인 저자명은 한글로 먼저 표기한 후 괄호 속에 원어로 표기한다.

[예1] “...밀즈(Mills, 1956)”

- (3)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저자명을 가운데점으로 구분하고 항상 병기한다.

[예] “...(김용학 · 임현진, 2000)”

-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전거표기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다음부터는 “외”(et al.)를 사용한다.

[예] “...(양춘 · 김문조 · 손장권 · 박길성 · 김철규, 2001)”; “...(양춘 외, 2001)”

- (5) 출간예정인 저술은 “출간예정”(forthcoming)을, 미간행물은 “미간행”(unpublished)을 명기한다.

[예] “...(현영석, 2003 출간예정)”; “...(Lee, forthcoming)”

9. 각주는 꼭 필요한 것만 달도록 하여, 가급적 10개 내외로 최소화시킨다.

10. 참고문헌의 나열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만으로 제한한다. 먼저한 국어 문헌을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제시하고, 이어서 동양어 문헌을, 마지막으로 서양어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 1)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 순으로 나열한다.
- 2) 동일 저자의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간되어 두 편 이상일 때는 제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되, 연도표기 뒤에 a, b, c...를 부가하여 구별하도록 한다.
- 3)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 4) 학술회의 발표문은 발표 장소와 날짜를 명기한다.
- 5) 참고문헌 기재의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1) 서적

최재석. 1990. 「현대가족연구」. 일지사.

임희섭. 1987a. “한국정치체계의 위기구조와 정책정향: 1961-86.”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한국사회개발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pp. 193-218

_____. 1987b. “정보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정책의 과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한국사회개발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pp. 125-149.

菅谷章(스가라 아기라). 1988. 「日本社會政策史論」. 東京: 日本評論社.

Berger, P. L. and H. M. Hsiao (eds.). 1988. *In Search of an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New Brunswick: Transaction.

Cannell, C. F., P. Miller and L. Oksenkerg. 1981. “Research on Interviewing Techniques.” pp. 389-437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logy*. San Francisco: Jossey-Bass.

Amsden, A. H. 1989. *Asian's Next Giants: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인근달 역. 1990. 「아시아의 다음 거인: 한국의 후발 공업화」. 시사영어사).

(2) 학술지, 학위논문, 보고서, 인터넷문서

손장권. 2001. “정보사회의 환경과 조직변화.” 「한국사회」 4: 147-172.

Heckman, James. 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1): 153-162.

Shin, Ho Hyun. 1990. “Shooling and Employment of Married Women in Korea.” Unpublished of Hawaii.

Krafcik, J. F. and J. D. Macduffie. 1989. “Explaining High Performance Manufacturing.” *Working Paper of IMVP*. MIT.

Kollock, P. and M. Smith. 1994. “Managing the Virtual Commons: Cooperation and Conflic in Computer Communities.”

<http://www.sscnet.ucla.edu/soc/csoc/vcommons.htm>.

(3) 번역서

휴이트(John P. Hewitt). 2001. 「자아와 사회: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사회심리학」. 윤인진 역. 학지사.

클레크 · 히긴스 · 스파이비(S. R. Clegg, W. Higgins and T. Spybey).

1994. “경제문화: 포스트 유교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공유식 · 김

혁래 · 박길성 · 유홍준 편. 「신경제사회학의 이해」. 역사비평사. pp. 195-210.

Weber, Max. 1951(1920). The Region of China translated by Hans H. Gerth. New York: Free Press.

11. 표와 그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1) 하나씩 별지에 작성하되 본문 속에 들어갈 자리를 지정하여 “〈표 1〉 여기에 제시”와 같이 표시한다.
- 2) 제목은 “〈표 1〉...”과 같은 형식으로 표나 그림의 위에 적는다.
- 3) 설명주는 “주”로 시작하고 출처는 “자료: ”로 시작하여, 표나 그림의 아래에 적어 놓는다. 범례도 그림의 하단에 표시한다.
- 4) 표 속에 칸과 행에는 적절한 범주명을 반드시 넣어주어야 한다.
- 5) 표의 선은 맨 위에 맨 아래 선 및 첫 번째 열의 밑선 까지만 굵도록 한다.
- 6) 그림은 색을 넣어 그려도 좋으나, 인쇄시에는 흑백으로 표현됨을 유의한다.
- 7) 그림에는 x축과 y축과 곡선 · 면적 등으로 표현된 각 부분의 명칭을 반드시 붙여주어야 한다.
- 8) 통계적 유의도는 “* $p < .05$.” “* $p < .01$.” “*** $p < .001$ ”과 같이 표기한다.

심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분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사회에 투고된 원고들을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여러 번 꼼꼼히 심사해 주셨습니다. 이에 편집위원회를 대신해 편집위원장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옥 강원대학교 문화도시학과	옥창준 한국학중앙연구원
김관우 카이스트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이다미 보건사회연구원
김세현 한양대학교 SSK다문화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이영진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원동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이용하 전주대학교 경영학과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이윤영 한라대학교 운곡교양교육원
김인수 대구교대 사회과교육과	이 철 서울노동권익센터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이해진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김주호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임영신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김창환 캔서스대학교 사회학과	장서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홍주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복지·보건학부	조혜정 한양대학교 미래사회연구소
노중기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주윤정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천자현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박성훈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최셋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박현수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최 울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송효종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최항섭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신동준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한상원 충북대학교 철학과
심재만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편집위원 명단

편집위원장: 송효종(고려대 사회학과)

편 집 위 원: 강동훈(선문대 사회복지학과)	김지훈(인하대 사회교육학과)
사영준(서강대 커뮤니케이션대학)	신은경(고려대 사회학과)
신인철(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윤상우(동아대 사회학과)
이해진(충북대 사회학과)	장안식(케이스탯 리서치)
정고운(경희대 사회학과)	조정우(경남대 사회학과)
황선재(충남대 사회학과)	황희영(동의대 행정학과)
	(이상 가나다순)

편 집 간 사: 이진영(고려대 사회학과)

한국사회 제24집 2호

2023년 12월 29일 · 인쇄

2023년 12월 31일 · 발행

편집 · 발행/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전화: 02-3290-1651 팩스: 02-924-4365

E-mail: lab050@korea.ac.kr

한국사회 투고: socialresearchku@gmail.com

Homepage: <https://socialresearch.korea.ac.kr/>

인쇄 · 출판/도서출판 새로문화

전화: 02-313-1431 팩스: 02-313-1434

ISSN 1229-036X

Journal of Social Research

Vol.24 No.2 / December 2023

* 이 책은 한국리서치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Korea University
ISSN 1229-036X